

전략연구 2017-29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박춘섭

충남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

이홍택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원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홍은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충청남도의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2017년 현재 91개소에 달하는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1986년 공주장기농공단지의 조성을 시작으로 충남의 농공단지는 고용 및 소득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단지의 가동률 감소, 휴·폐업시설 및 미분양 부지 발생 등 농공단지를 둘러싼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농공단지가 겪고 있는 구조적 한계, 즉 농촌지역에 위치한 입지적 불리, 신규 단지 조성중심의 정책에 따른 기 조성 단지의 사후관리 미흡, 업종간 연계성 또는 지역기반성을 토대로 한 기업유치가 아닌 분양 최우선 추진, 지역자원 연계전략 부재 등은 지역사회 괴리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는 2014년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특히 농공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휴폐업시설 및 미분양 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환적 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상(像)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또는 사회적경제 연계모델)를 제안한다. 사회적경제 연계모델은 기존 농공단지의 노후화, 집적연계 미흡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농촌 등 지역산업 연계모델 부재 등에 대응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원리와 지역사회기여의 사회적 목표, 그리고 한살림, 아이쿱 등 주요생협 및 670개 달하는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영역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인 아이쿱생협이 조성한 농공단지인 구례군 자연드림 파크의 성공은 이 모델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주요 분석결과

연구목적인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① 우리나라 농공단지 정책 분석, ② 사회적경제 특성 및 연관성 검토, ③ 충남의 농공단지 현황 및 정책검토, ④ 사회적경제 기반 집적지 사례분석, ⑤ 사회적경제기업 등 대상 입주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성장 잠재력 향상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고(이동필 외 2010), 또한 산업역량의 지방 분산에 성과를 보여 주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존재(김선배·홍진기 2010) 하는 반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휴·폐업시설 증가 및 미분양 발생, 지역산업 연관미흡 등 농공단지 정책의 한계도 존재한다.

2) 이 같은 정책적 한계는 기존 농공단지가 집적(단지)을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Porter 2000)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농공단지 정책의 전환 및 새로운 상(像,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농공단지의 연계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기업의 목적·운영원리와 달리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가 ① 사회적 목적 추구의 목적성, ② 호혜와 연대, 공유의 운영원리, ③ 윤리적 소비시장 구축 등을 기반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기반한 새로운 성공사례들이 존재한다.

3) 농공단지의 주요한 문제인 ① 노후화, ② 입주기업간 협력, ③ 지역사회 괴리에 대해, 각각 ① 스페인 빌바오, 서울혁신파크, ② 서천김가공특화농공단지, ③ 아이쿱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그 원리를 통해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충남 농공단지는 고용(32천명)과 매출(기업당, 110억원) 등 충남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선 20년이상 노후단지가 51%로 노후화 및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의 문제에 처해 있다. 석유화학(18%), 기계(17%), 전기전자(13%) 등 농공단지 주요업종은 농업농촌을 기반한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휴·폐업 및 미분양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4년 '충청남도 종합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농공단지, 인력확보, 경영지원, 네트워크 등 사업을 진행했으나, 실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집중되어 농공단지가 가지는 근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5)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민선5기의 주요정책 과제로서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조직발굴 및 기반구축, 인재양성, 네트워크사업 등 추진되어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말 현재 충남 사회적경제 626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천안시(110개), 아산시(87개) 등 북부는 물론, 논산시(47개), 공주시(45개), 서천군(45개) 등 남부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제조업(24%)을 비롯, 농림어업(20%), 도소매업(13%), 서비스업(14%)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활동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아직 매출(942억)과 고용(32백명) 등 경제적 효과성은 미미하지만, 증가폭(2012년대비 3.7배, 2.7배)이 높아 충남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6) 사회적경제기업 및 6차산업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기업 96개). 우선 44개 기업이 이전 및 확장계획이 있으며, 주요이유로 부지면적 협소(34%), 제조업으로 영역확장(30%), 기업간의 집적필요(21%) 등 이었다.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시 입주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41개 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혔고, 농업/제조업체 27개, 서비스업 14개였다. 이들이 고려한 것은 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36%), ②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26%)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정책방안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는 ①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 ② 다양한 업종이 입주,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공방, 숙박,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 기반조성하여 집적효과 극대화, ④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의 밀착된 지역사회기여 추진 등의 원리에 입각한 단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적 특성과 농공단지의 여건 등 제 특성을 고려하여 투트랙(Two Track), 즉 ① 신규단지 조성방안과 ② 기존단지 활용방안으로 제안한다. 각 조성방안은 사업방향, 세부 추진방안, 운영체계, 추진체계 및 고려사항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방안>은 두 가지로, 우선 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규모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유치 방안, 즉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유치를 기반한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충남의 식품순환

체계에 대응한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단지 활용방안> 역시 두 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농공단지내의 휴·폐업시설을 협업단지(인큐베이팅 또는 커뮤니티사업 목적)로서 조성방안과 문화·예술·창작·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서의 컨테이너단지 조성방안으로 제시한다.

비 전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 재생 및 활성화 모델 구축

- ## 목 표
- ◆ 신규 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 ◆ 기존 농공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연계모델 구축

4대 기본 원리

호혜와 연대 기반 운영	생산-제조-서비스 융복합
집적의 경제 극대화	지역사회 기반

전략 목표	추진 전략
[Track 1] 신규 단지 조성 방안	◎ 생협 유치를 통한 사회적경제 농공단지 조성
	◎ 로컬푸드 특화농공단지 조성
[Track 2] 기존 단지 활용 방안	◎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협업단지 조성
	◎ 농공단지 연계 컨테이너 단지 조성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2장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검토	6
1. 농공단지 정책추이와 지원정책	6
2.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정책동향	19
3.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연관성 검토	27
제3장 농공단지 및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31
1. 충청남도 농공단지 현황과 정책	31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정책	43
3. 사회적경제 기반의 집적단지 주요 사례	59
제4장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및 입주수요 검토	84
1. 활용가능 농공단지 검토	84
2. 입주수요 분석	90
제5장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도입방안	102
1. 기본 방향	102
2. 세부 추진 전략	10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1. 요약 및 정책제언	15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60
[부록 1] 도내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조사	162
[부록 2]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설문조사	187

표 목 차

[표 1] 농공단지 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8
[표 2] 산업단지의 종류	9
[표 3] 농공단지의 종류	10
[표 4] 농어촌지역별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13
[표 5] 부처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14
[표 6] 세부사업 내용	15
[표 7] 사업비 지원기준	16
[표 8]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23
[표 9] 협동조합의 7대 원칙	25
[표 10]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실현내용	26
[표 11] 충남 농공단지 설립 기간(2015년 현재)	31
[표 12] 충남 농공단지 주요현황	32
[표 13] 충남 농공단지 용지현황	33
[표 14] 충남 농공단지 고용현황	34
[표 15] 충남 농공단지 입지기업의 주요 업종	35
[표 16] 시군별 농공단지 휴·폐업 현황(2015년 현재)	36
[표 17] 농공단지 관련 주요 현안	39
[표 18]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과제	40
[표 19]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41
[표 20]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42
[표 21]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현황	43
[표 22]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 및 고용 현황	44
[표 23] 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현황	44
[표 24]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기간 및 성장단계	45
[표 25]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 분포	46
[표 26] 지역별 제조업 분포	47
[표 27] 매출액별 제조업체 현황	48

[표 28] 당기순이익별 제조업체 현황	49
[표 29] 충남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의 비전과 과제	50
[표 30]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55
[표 31] 산업클러스터와 혁신파크 차이점	61
[표 32] 서울혁신파크 연혁	62
[표 33] 서천군 김생산량	69
[표 34] 서천군 조미김 업체수	69
[표 35]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	70
[표 36] 입주기업 현황	71
[표 37]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사회적경제조직화 과정	72
[표 38]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발전방향 및 운영계획	74
[표 39] 서천김협동조합 중장기 사업계획	75
[표 40] 구례자연드림파크 현황(2016.12월)	80
[표 41]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객 수	81
[표 42]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	82
[표 43] 산부인과 진료 및 사업 내역	83
[표 44] 활용가능 농공단지 조사내용	85
[표 45] 활용가능 농공단지 조사결과	86
[표 46] 미분양 부지 현황	87
[표 47] 농공단지 내 휴·폐업시설 현황	88
[표 48] 활용가능 농공단지 종합	89
[표 49] 수요조사 주요내용	91
[표 50] 유형별 설문조사 응답기업	92
[표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93
[표 52] 이전 및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94
[표 53] 이전 및 확장 이유	95
[표 54] 이전 및 확장 가능한 지역적 범위	96
[표 55] 이전 및 확장 방식	96
[표 56]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시 입주 수요	97
[표 57] 입주를 의망하는 기업들이 중요시하는 요건	98

[표 58] 불참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농공단지 조성시 바라는 요건	99
[표 59] 입주시 최소 부지규모	99
[표 60] 최대 투자 가능 금액	100
[표 61] 주요생협 현황	108
[표 62] 생협 공통 납품 제조업체 현황	111
[표 63]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117
[표 64] 생협 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성방안 요약	119
[표 65]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 대상지 검토(안)	123
[표 66] 당진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계획(예시)	119
[표 67]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 대상지 검토(안)	126
[표 68] 로컬푸드기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129
[표 69]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방안 요약	131
[표 70] 휴·폐업시설 조사지표	133
[표 71] 주요 휴·폐업시설 현황	134
[표 72] 휴·폐업 시설 활용형 단지 유형 검토	136
[표 73] 협업단지 조성/운영 계획 주요 내용	138
[표 74] 모집 대상 범위	139
[표 75] 협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142
[표 76] 휴·폐업시설을 활용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요약	144
[표 77] 컨테이너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	147
[표 78] 주체별 역할	153
[표 79] 컨테이너 단지를 활용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요약	154

그림 목 차

[그림 1] 사회적경제의 영역	22
[그림 2] Porter의 국가 경쟁우위 결정요소	28
[그림 3] 충청도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도	34
[그림 4] 천안 농공단지 입지와 백석농공단지 기업입지도	37
[그림 5] 공주시 농공단지 입지와 유구농공단지 기업입지도	38
[그림 6]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추진체계	56
[그림 7] 제2차 5개년 성과목표	57
[그림 8] 제2차 5개년 성과평가체계	58
[그림 9] 질병관리본부 휴·폐업시설 현황	60
[그림 10] 서울혁신파크 공간구성	63
[그림 11] 빌바오 사회혁신파크	64
[그림 12] 플랫폼 창동 61	65
[그림 13] 언더스탠드 예비뉴	66
[그림 14] 구례자연드림파크 전경	78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의 농공단지인 공주장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조성하여, 현재 91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도내 농공단지는 2015년 현재 도내 산업단지의 62.9%를 차지하며, 업체수 46.5%, 고용인원 24.6%, 생산액 12.2%, 수출액 30.7%에 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관률, 2015).

그러나 충남의 농공단지는 시설 노후화 및 경쟁력 저하, 지역사회와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내의 농공단지의 60.5%가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오폐수 시설 노후화·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등 지원시설 및 인프라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20년 이상 된 소규모 농공단지의 가동률은 최근 2년간 5.3%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충남의 농공단지 가동률(-0.84%)과 비교해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단지 내 장기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시설이나 미분양 부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공단지를 낙후지역 또는 우범지역으로 보이게 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내 농공단지 중 휴·폐업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으며,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와 같이 미분양 되고 있는 단지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와 지역사회간 괴리 역시 심각하다. 지역주민들은 농공단지를 혐오시설, 환경파괴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이유는 농공단지의 오폐수 문제, 쓰레기문제 등 다양하지만, 1차적으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의 구성에 있다. 도내의 농공단지의 주요업종은 석유화학(18%), 기계(17%), 전기전자(13%) 등으로, 농산업과는 유리된 산업구조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환경파괴 시설로 인식케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꾸준히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휴폐업시설 및 미분양 부지 발생 등 한계에 부딪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공단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충청남도 농공단지의 상(像)을 다시 그려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충남에는 왜 농공단지가 필요하며, 농공단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생긴다. 나아가 현재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물음이 생긴다.

본래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의 ①지역자원을 활용한 ②농가소득 향상에 있다. 동시에 ③집적효과를 통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꾀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공단지는 불가능하다. 지금껏 우리의 농공단지 정책은 ③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①과 ②의 목적을 중시치 않고 ③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는 노후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과의 괴리 등 확인하다. 농공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기에 노후화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다. 또한 지역산업(농업 등)과 연계가 부족하기에 지역과의 분리와 괴리가 일어난다. 또한 ③의 정책집중 역시 신규조성단지 건설 및 입주기업 유치전략에 집중되어, 실제 유치기업간 연계가 쉽지 않아 입주기업들은 집적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 농공단지는 조성목적에 부합한 새로운 방식의 농공단지 모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연계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농공단지의 연계는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역문화 형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인 호혜와 협력의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사회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근 구례의 자연드림파크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농공단지라는 집적공간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는 로컬푸드, 농가공 및 체험 등 농촌기반한 업종을 중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복지, 교육을 비롯한 소셜벤처, 문화예술 등 지역서비스까지 다채롭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 등 지역자원 활용한 업종의 사회적경제연계 모델은 본래 농공단지의 목적(①,②)을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 등이 가능해서 집적효과(③)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판로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연구목적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당면과제의 해결이 긴요한 시점이다.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는 기업 경쟁력 악화, 단지 활성화 미흡(미분양 부지 및 휴·폐업 시설의 증대), 단지 노후화 가속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의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괴리는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공단지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와 농공단지의 연계의 가능성을 제고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내 농공단지 현황조사,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수요, 사회적경제 기반의 다양한 집적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내 농공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현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충남 농공단지의 특성과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사회적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농공단지가 당면한 기업 경쟁력 악화, 지역사회 괴리, 지역자원 미활용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 원리가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실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충남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 및 휴·폐업 시설 유무, 농공단지 관계자 수요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간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입주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여 충남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지 조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실제 활용이 가능한 농공단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 수요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2017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의 ‘사회적경제 기반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농공단지 본격적으로 조성된 1980년에서 2017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이론적 검토, 농공단지 현황조사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가능성 분석, 충남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론적 배경 및 현황 분석

-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기존 농공단지와 다른 작동원리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
- 도내 소재한 농공단지 중 휴·폐업 시설이나 미분양 단지가 있는 곳, 신규 조성 예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과 향후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로의 조성 가능성을 분석

■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가능성 분석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6차산업화기업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입주 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조성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함
- 또한, 농공단지 현황 조사와 입주 수요조사를 매칭하여 실질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대상을 검토하고자 함

■ 충남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방안 도출

- 농공단지 조성 방안은 <신규 농공단지의 조성>과 <기존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방안>의 투트랙(Two-Track)으로 접근

-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생활협동조합 연계 방안, 로컬푸드 특화단지 조성 방안 도출
- <기존 단지 활용 방안>은 농공단지 휴·폐업시설 활성화 방안, 컨테이너 단지 조성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 전략적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농공단지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이론적 검토, 농공단지 활용 가능성 검토,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 수요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공단지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관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기존 농공단지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 등을 도출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농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충청남도 소재 농공단지의 현황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연계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 농공단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지내 휴·폐업 시설 또는 미분양 부지의 존재, 입주기업간 업종 관련성, 협의 채널의 존재, 지역자원과 연계가능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시군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와 협력하여 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기간은 2월 6일에서 2월 28일까지,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의 농공단지 입주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 영역인 6차산업화 인증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공장의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이전 시 지역적 범위, 이전 및 확장 방식,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입주희망 여부, 요구 면적, 적정 분양가격, 최대 투자가능 금액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2월 6일에서 2월 28일까지,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 및 시·군 관계자,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의 실행력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2장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검토

1. 농공단지 정책추이와 지원정책

1) 농공단지 개요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의 폐해로 인해 발생한 농어촌 지역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업화정책을 통한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농촌의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 등을 가속화 시켰으며, 농촌의 급격한 쇠락을 가져왔다. 특히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가져와 농촌인구감소, 이에 따른 노임상승 등 농촌을 피폐하게 하였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산업거점 시설인 농공단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농업·농촌에 기반한 산업의 특화와 산업기반시설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농공단지 정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단지의 지정, 조성, 관리, 기업지원, 환경보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지 개발에 관한 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은 농공단지 환경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공단지 정책은 시기별로 정책의 목표와 기준들이 변화되어 왔다. 농공단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60년대는 농가부업단지 조성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와 낙후지역에 대한 유희 노동력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농가부업단지 육성정책은 농외 취업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초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추진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혜영, 2007). 1970년대 들어서 새마을공장 육성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공장의 지방분산을 강조하여 낙후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비용 문제와 기업의 판로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계를 노정하였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는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산업을 집적화하고, 인근 농촌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1981년 경제기획원 내 농외소득개발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1983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1984년에는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는 농공단지 지정승인권을 중앙소득원개발심의위에서 도지사로 이관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 대기 및 수질관련 입주업체의 제한 완화, 개발 연면적 한도 확대 및 기존 농공단지 확장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입주기업 사후관리 및 경영지원 강화 등 지원정책도 확대하였다.

2000년대는 전문단지와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신설하여 지역 내 전략산업 연계를 추진하였다. 산업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특화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조성비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며, 입지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단지 조성을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입주기업의 R&D 및 경영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는 정부합동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맞게 된다. 신규 조성되는 일반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농공단지의 내실화와 지역농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특화농공단지는 기준(80%)이 강화되었으며, 단지 조성비 지원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후단지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농공단지의 분양 및 가동률 등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다.

2016년에는 농공단지 지정 시에 미분양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였다.

〈표 1〉 농공단지 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준비단계 (1982~1985)	1981	○ 경제기획원 내 농외소득개발기획단 설치
	1983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공포
	1984	○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 지정
확산단계 (1986~1990)	1986	○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2001년까지 100개 농공단지 지정계획)
	1987	○ 일반 농어촌지역 외에 추가지원농어촌지역 구분
	1990	○ 농공단지 지정 승인권 위임(중앙소득원개발심의위-도지사)
조정단계 (1991~2000)	1991	○ 근거법 대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6	○ 농공단지 정책 개편 : 개발 연면적 한도 확대 및 기존 농공단지 확장 허용, 공장 신·증설 시 대기 및 수질관련 입주업체 제한 완화, 입주기업 경영 지원 강화 및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재조정 단계 (2001~2010)	2001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 신설
	2004	○ 산업자원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 입지선정기준 조정, 지역특화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조성비 지원액 확대
	2007	○ 산업자원부: 추가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 혁신클러스터(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 2011년부터 중단
고도화 단계 (2011~현재)	2010~ 2011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 정부합동 또는 부처별 대책 강구 ○ 농공단지 업무강화 부처별 MOU 체결 ○ 국무총리실 외 정부 합동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 신규조성시 일반·전문농공단지 지원 중단 - 특화농공단지 기준 강화(80% 이상), 단지 조성비 지원요건 강화 - 분양 및 가동현황 등 단지 현황관리 강화
	2012	○ 관계 부처 합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자체 등 건의 개선과제 수집(주요 개선 과제로 56개 선정)
	2013	○ 특화농공단지만 신규 지원 시작 ○ 기획재정부 주관 합동회의: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 방안 - 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기업도시 논의 - 최종 계획입지 투자 활성화 방안에 농공단지 제외
	2016	○ 농공단지 지정 시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등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규정 ○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 실시

자료 : 최경환 외(2014),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재구성

2) 농공단지의 종류 및 지정조건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유형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해당된다.

〈표 2〉 산업단지의 종류

구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
국가단지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권자 및 지자체
일반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지사	시·도지사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교통부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농공단지의 조성은 농어민 소득증대가 최우선의 목적이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된다.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 구역의 용지에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단지는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를 말한다.

〈표 3〉 농공단지의 종류

구 분	내 용
전문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 단지의 경우 입주수요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지역특화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7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이 호에서 "지역특화업체"라 한다)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일반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단지

자료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2016)

농공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실제 단지의 지정권, 실시 계획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다. 시·도지사가 농공 단지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의 검토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되는데, 농공단지의 조성 시에는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 수준,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배후도시 여건, 환경영향,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혁신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조혜영, 2007).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은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 수준,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조성비용 등 단지 조성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이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 농공단지 입지선정 기준

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

2.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

4.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농공단지의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

라. 단지 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 이내인 지역

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3)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

(1) 특화농공단지 조성지원 및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농공단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특화농공단지의 조성비 지원과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있다. 조성비 지원의 경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 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특화 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성비는 3.3㎡당 일반농어촌은 국비 3만원, 지방비 1만원, 추가·우선농어촌은 국비 7만원, 지방비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4〉 농어촌지역별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 분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어촌***
국비보조	30	70
지방비보조	10	10

*일반농어촌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추가지원 농어촌 :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

***우선지원 농어촌 : 태안군, 청양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침체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후화 시설물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 29조에 따라 농공단지내의 도로(진입도로 포함),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충청남도는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7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45개소 81억원)하여 오폐수 처리시설 개·보수, 도로포장,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2017)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제안하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사업은 각 부처별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으로 고용부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혁신지원센터 조성, 국토부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건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이 있다.

〈표 5〉 부처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소 관	사 업 명 (시 행 기 관)	사 업 내 용	신 청 주 체	규 모
고용부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형 직장 어린이집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최대 15억 × 7개소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목욕시설 체력 단련시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최대 10억 × 3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훈련· 취업지원	자치단체 (10~40% 매칭)	최대 50억 × 10개소
국토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산단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광역·기초자치 단체 또는 LH· 지방공사	전 용 면 적 60㎡이하, 호 당 정 액 지원
문화부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과정 운영	자치단체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미정

(3) 상생산단 조성사업 지원(충청남도)

상생산단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단지의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이 어우러진 정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입주기업 종사자의 지역내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하여 생산과 소득이 연계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지원사업은 신규단지와 기존 단지로 구분하여 신규 조성단지는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는 6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상생산단 조성사업은 2017년 현재 13개 시군, 41개 사업이 추진되어 55,66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16개 사업(24,425백만원)이 완료되었으며 25개 사업(31,240백만원)이 추진 중에 있다.

〈표 6〉 세부사업 내용

6대 중점분야	내 용
교육경쟁력 제고	자율형사립고 · 마이스터고 설립, 생활관 연계 등
문화수준 향상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
생활여건 개선	주거·편의시설·교통 접근성 개선 등
의료·복지여건 개선	응급의료체계 구축, 의료시설 현대화,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환경보전 및 개선	공원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근로생활 개선	단지내 복지·편의시설 확충, 노후 산단 시설개선 등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공단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사업으로 농촌·농업기반의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기업은 두레기업¹⁾과 우량기업²⁾으로 두레기업은 구성원의 70% 이상이 농민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량기업은 본사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충남 도내 소재하고 연 매출액이 2억원 이상 ~ 100억원 이하,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국내산 80% 이상 사용하는 법인 기업이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두레기업의 경우 경상보조 사업비(연구개발비,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비, 공동브랜드 개발비, 네트워킹 및 교육비, 자문료 등 운영경비), 자본보조 사업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건축, 가공설비) 등)이며, 시설의 지원범위는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이 해당한다. 우량기업은 HACCP 및 GMP 시설,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자본보조 사업비만 해당한다.

사업비는 두레기업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지특 50%, 시군비 30%, 자부담 20%이며 자본보조 사업비는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량기업의 경우 6억원 이하로 자본보조 사업비를 100%로 활용할 수 있다.

〈표 7〉 사업비 지원 기준

구 분	두 레 기 업	우 량 기 업
사 업 비	· 10억 이하	· 6억 이하
재 원 비 율	· 지특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지특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사업비구성	· 경상보조 30%	-
	· 자본보조 70%	· 자본보조 100%

※ 우량기업의 토목, 건축비는 총사업비의 70%이내

1)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마을단위 주민

2)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에서 제조·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4) 농공단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농공단지 정책은 일정한 정책적 성과를 나타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회 제공, 성장 잠재력 향상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이동필 외 2010). 또한 저렴한 용지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부분의 산업역량의 지방분산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여했다(김선배·홍진기 2010). 그러나 농공단지 정책이 약 30여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농공단지의 노후화, 미분양 단지 증대,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괴리 등 다음과 같은 정책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기존 농공단지의 노후화 및 경쟁력 약화 문제이다. 초기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약 30여년 이상 운영됨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고, 단지규모도 협소하여 입주기업의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기업의 입지조건으로 볼 때 좋지 않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농공단지 정책이 신규조성 및 물리적 기반 조성위주이기에 기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개발은 조성추진과 사후관리측면에서 역할분담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배경화·김태환, 2005), 입주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농공단지 활성화 미흡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둘째, 기 조성 농공단지의 미분양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업종간 연계성이나 적합성보다는 분양을 최우선하였기 때문에 입주기업 간 상호 시너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입주한 기업들이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입주가 많지 않고, 영세한 소기업 창업형태도 많다. 이는 입주기업들이 산업집적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셋째, 농공단지와 농어촌 및 지역산업과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당초 농공단지의 개발목적이었던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지역특성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입주함에 따라 해당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하여 지역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농공단지는 실제 농촌사회와 유리되곤 하였다. 더욱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이 지역 특산물 및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기조하에서 현재 농공단지와 농어촌의 괴리는 더욱더 잘 드러난다.

넷째, 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이 경영부진 및 이전 등으로 사업장이 장기간 비어있는 경우가 증대됨에 따라 농공단지 주변경관 및 지역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시설은 우범지역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킨다. 또한 휴·폐업 시설의 관리비 등을 다른 입주기업에게 가중하여 입주기업 역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휴·폐업 시설 활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불일치 등으로 대체입주와 경매진행이 쉽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농공단지의 고유의 발전모델 및 육성전략의 미흡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지역특화 단지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농공단지 10%남짓으로 고유한 발전모델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농공단지의 입주기업들의 과반이 단순 가공업종(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으로 원자재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어 지역자원 등 활용하지 않고 있다(김선배·홍진기 2010). 농공단지의 발전모델 즉 농공단지의 상(像) 정립에 관심을 기울지 않으면 농공단지의 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정책동향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은 시대적 흐름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대별로 보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기원을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공제조직이나 중세 유럽의 길드에서 찾기도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산업혁명이 나타난 18세기 말에 이르러 형성되었다(Laville, 2015).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로 인한 도시 빈곤과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선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전국적 연합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의 주된 목표는 개인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 소비, 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있었다(주성수, 2010). 이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의 실험으로 이어졌으며, 농업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설립되어 집합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시장경제의 일부로 쇠퇴하게 되었으며,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확산에 따라 국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다.

1970년대 들어 복지국가의 쇠퇴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발생 등 정부와 시장실패 보완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제3부문의 경제적 형태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가 인식됨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유럽연합의 의제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 유럽연합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빈곤, 소득격차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를 유럽 전체의 아젠다로 삼았다. 1989년에는 유럽에서 정부간 협의용어로 공식 사용되었으며, 2002년에는 ‘사회적경제 유럽헌장’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장원봉, 2007). 따라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실업, 빈곤, 소득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발굴 된 것이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이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은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 보육, 의료, 환경·에너지, 문화·예술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경제 활동의 주체(생산자, 소비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대적 경제활동까지 포함되고 있다(고동현 외, 2016).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발전은 국가에 따라서도 매우 상이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다. 독일에서는 19세기 노동자 결사체운동에 대한 이념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신용협동 조합을 설립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1818~1888)을 통해 확대되었다. 1887년 ‘라이파이젠형 독일농촌협동조합연맹(German Federeation of Rural Co-operatives of the Raiffeisen type)’이 결성되었다. 또한 노동자 상호부조협회와 농촌 상호공제가 독일사회에서 자리매김 하였으며, 1876년에는 법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정관영, 2013).

이탈리아는 19세기 중반부터 토리노(Torino)를 중심으로 상호공제조합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이들 조합을 중심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는 사회적경제의 발원지로서 대중적 결사체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국가이다. 1830년대부터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생시몽(1760~1825)의 이념과 샤를 푸리에(1772~1837)의 영향에 따라 많은 노동자결사체들이 만들어졌으며, 1847년에 들어 노동자결사체는 2,500개가 넘는 상호공제조합과 4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정관영, 2013). 이후 알라스는 1986년 「사회적경제 연구 : 사회적 부의 분배이론」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경제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민주적결사체주의와 상호주의, 협동조합주의 등 사회적경제의 근대적 개념을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의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³⁾과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운동⁴⁾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산업자본주의 전성기였던 18-19세기 도시근로자의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작된 민간차원의 운동은 현재의 영국 사회적경제의 특징이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권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을 정책화 하여 법제도 정비, 사회적기금 조성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2005년

3) 18세기부터 진행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농촌경제의 파멸, 급격한 대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열악한 근로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867년 에드워드 데니슨(Edward Denison) 목사를 중심으로 런던의 빈민지역에 거주 하면서 공립학교에서 탁아사업, 급식, 심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는데 이를 인보관 운동이라 말함

4) 우애조합 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로 공급되는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자 근로자들은 생필품 품귀현상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노동자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상점과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한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로치테일 협동조합이 알려져 있음

영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약 55,000여 개, 연간 매출액 200만 파운드 규모이며, 약 170만 명(전체 노동인구의 6.5%)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최석현, 2013). 특히 영국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영기관인 사회투자은행, 자산이전 전문지원기관, 지역사회 창업 컨설팅 지원기관 등 중간지원기관을 구축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였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범위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나눔’을 경제활동의 주요 원리로 하는 새로운 경제 운영방식으로 20세기 저명한 경제학자인 Karl Polanyi의 이론을 근간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원리, 즉 호혜성과 연대를 추구하며, 특히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노정한 문제점으로 경기침체 및 실업 등 삶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경제는 학자 및 조직마다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유럽위원회(1989)⁵⁾, OECD(1999)⁶⁾, Defourmy(1999)⁷⁾, Weber(1990)⁸⁾ 등 조직 및 학자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에 대한 사회적 속성의 강조와 사회적 실현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적 참여의 조직운영, 지역중심 경제활동, 사회적 목표 등은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속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있어 광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공통적으로 갖춘 조직(OECD, 2007)으로 보며, 협의적으로는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의 비즈니스와 기업가정신을 활용하는 경제행위로 보고 있다(Goldenberg, 2014). 최근 보편화된 사회적경제 개념정의는 구성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며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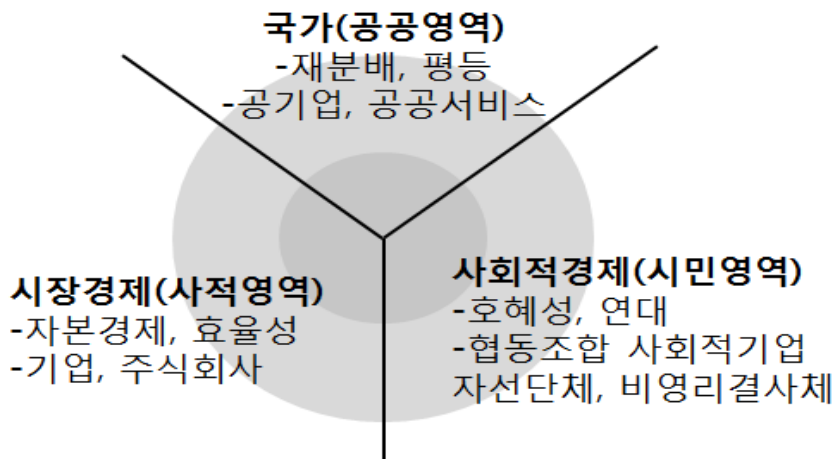
5) 유럽위원회(1989):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

6) OECD(1999):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정의

7) Defourmy(1999) : 사회적경제는 연대, 자율성, 시민성에 기반한 경제적 시도들에 기초한 연합으로 구성

8) Weber(1990):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활동의 합리화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관찰을 포괄하는 개념

민주적, 연대의 개념에 기초하여 시장과 공공의 제공으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하면, 사회적경제는 시장교환, 정부개입 그리고 연대와 호혜에 의해 인도된 시민사회부문을 혼합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발명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Moulaett & Ailenei, 2005).



<그림 1> 사회적경제의 영역

국내에서는 입법을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부터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사회적기업의 정의, 운영주체별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인증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 2012년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사회적경제의 유형

앞서 다룬 바와 같이,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그 범위가 규정되고 있다. 입법을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규정하고 있다. <표 8>은 사회적기업 등 각 대상별 유형과 개념적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며,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외, 지역주민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마을기업’과 자활자의 재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업’이 존재한다.

〈표 8〉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구분	유형	개념	관련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기업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서비스 이용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본법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구매·공동브랜드 등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등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쉼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등)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 등	

4) 사회적경제의 원리 및 특성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장원봉(2006)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원리는 정치, 경제와 사회를 결속할 수 있는 사회적관계의 혁신이며 이를 생성할 매개체의 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유된 가치를 규명하고 운영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Defourney(1999)는 사회적경제가 운영되는 원칙을 4가지로 제시하였는데 ①공동체(회원)에게 이윤보다 서비스 우선, ②자율(자조)적인 운영, ③민주적 의사결정과정, ④수익배분 기준이 자본보다 사람 우선 등이다. Quarter(1992)는 사회적경제의 특징으로 ①사회적 목표가 상업적 목표에 우선, ②다양한 수입에 의한 자조활동, ③공익성과 구성원에 의한 사회적 자산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주성수(2010)는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징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비영리성으로 사회적목적이 경제적 목적에 우선함을 의미, ②민주성으로 기업들은 종사자나 이용자에 의한 민주적 정책결정에 의존함을 의미, ③연대와 사회적자본으로 공동의 결속과 상호호혜의 정신을 강조함을 의미, ④사회적 배제의 대응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취약계층 등에 대응한 종합적 처방으로 주목 받음을 의미, ⑤자치역량으로 앞선 특징들을 기반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복리에 직접적이고 자조적으로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법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이익 및 사회적 목적 추구, ②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 ③민주적, 개방적 운영구조, ④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⑤조직간 상호부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 원칙>

- ① 호혜와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
- ② 국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운영
-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 ④ 발생한 이익을 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수익의 분배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하여 사용
-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적경제 영역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일정부분을 공유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에서 특성을 발견하기도 한다(Defourney and Develtere, 1999). 따라서 협동조합의 7원칙에서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잘 나타난다. <표 9>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요를 기반한 자조적·협력적 방식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가치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9〉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원칙		내용
1원칙	자발적 공개적 조합원제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조직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1인 1표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적 조직의 원칙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자금참여를 통한 책임의식의 강조와 협동조합의 공동재산 의미의 강조
4원칙	자율과 독립	외부자본과 국가에 독립적이고 조합원들에 의한 자주적 조직임
5원칙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일반인에 대한 홍보를 강조
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	거대자본에 맞서 협동조합간 다양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힘의 강화가 요구됨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이 기반하고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회적 기여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는 사업목적, 운영원리, 운영주체 등 몇가지 측면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대비되는 특성을 형성하였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업의 핵심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수익성 원리를 최우선시하는 것과 비교해,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대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 경제재생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가치 추구는 지역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 정부 및 민간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육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수익구조를 야기해 자립적 경영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표 10〉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실현 내용

구분	사회적 가치	관련 규정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 ·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가 주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
마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자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중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를 1/3 이상 고용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 연대, 공유를 핵심 운영원리’로 추구한다. 경쟁을 기본원리로 운영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은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갖는 협동, 연대, 공유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특성은 유사 조직간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호혜와 배려의 차원에서 거래하는 내부거래를 활성화 시키며, 이는 저조한 수익성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대와 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내부거래 사례>

- 성미산 마을의 경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마포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전속거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소비자가격보다 5~7% 인하)에 원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마포두레생협은 고정적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
- 일본 타키마을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거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
 - 마을을 넘어서는 지역중소제조업체가 학교와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이를 위해 음식점이 공동출자, 판매, 상담 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 뿐 아니라 자치단체, 중소기업, 고등학교, 대학, NPO 등과 거래 및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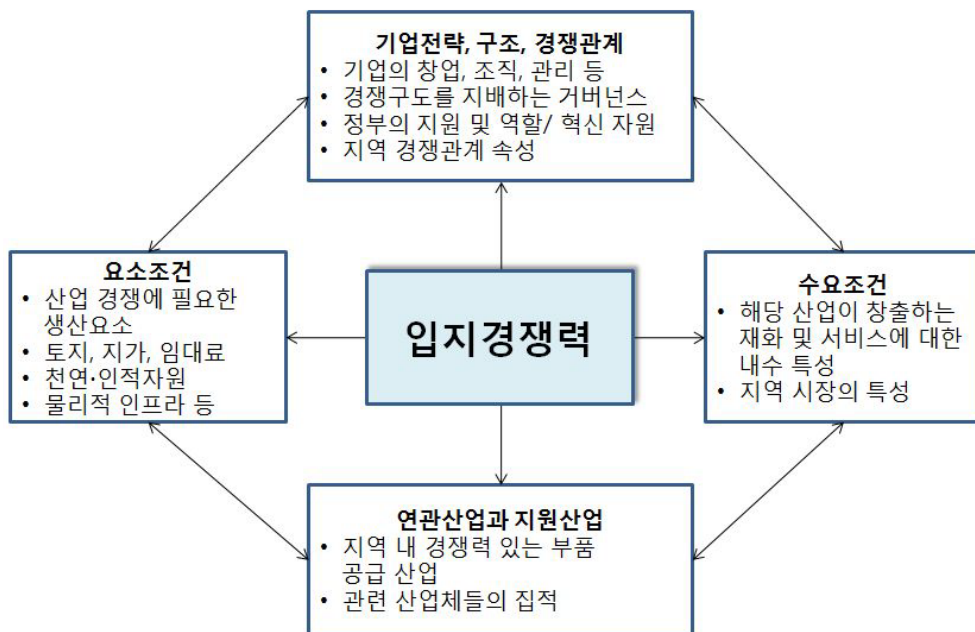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쟁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통상적인 소비시장과 더불어 '윤리적 소비자 중심의 소비시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소비시장은 합리적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일반시장과는 달리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가 중심이 된다. 국내 윤리적 소비 시장은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정책적 지원 확대로 인해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진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다.

3. 농공단지과 사회적경제의 연관성 검토

농공단지 정책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공단지 정책은 변화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 입지조건이 우수한 중소도시에 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역특화단지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은 기업집적을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적을 통한 입지경쟁력 강화는 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Maggioni F와 Michael E. Porter의 논의는 연구적 시사점을 준다. Maggioni(2002)에 따르면 기업들의 클러스터 조성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동기가 있음을 주장한다. 첫째, 집적경제에서 파생하는 이익의 향유, 둘째, 특정지역에 구축된 자원 구입과 판매 네트워크 활용, 셋째, 입지를 위한 탐색 비용 절감, 넷째, 신기술정보 감지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상권 확보 등이다. Porter(2000)는 국가 경쟁우위(또는 입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과 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경쟁관계 등 제시한다. 요소조건은 산업경쟁에 필요한 생산요소로 토지, 지가, 임대료, 천연자원, 인적자원, 물적·사회 구조적 인프라 등을 의미한다. 수요조건은 해당산업이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내수특성으로 해당 지역시장의 특성을 말한다.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공급자 산업이나 여타 연관산업의 집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전략·구조·경쟁관계는 기업의 창업·조직운영·관리 등과 같은 기업의 전략과 거버넌스, 정부의 정책 지원, 혁신 자원 등 지역 경쟁구조를 형성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입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며, <그림 2>와 같은 관계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이익은 모든 기업이 입지 결정문제에 직면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며 특히 소규모 기업들처럼 특별한 환경,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더욱 집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림 2> Porter의 국가 경쟁우위 결정요소

자료 : 마이클 포터(2006)의 내용을 재구성

지금껏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공단지는 ① 단지 노후화 및 경쟁력 약화 문제, ② 미분양 문제심화에 따른 업종간 연계 또는 적합성보다는 분양을 최우선하여 업종간 연관성이 없는 기업이 입주하면서 연계협력 등의 집적효과를 높이지 못한 문제, ③ 농어촌 및 지역산업의 연계를 고민하지 않은 개발추진 및 기업입주, ④ 이와 같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민과의 괴리현상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농공단지의 문제점들은 Porter가 제시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기업간 산업집적 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개별적·독립적 생존 구조를 고착화 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수의 농공단지에서 협의체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고 단순 친목 모임에 그치고 있다. 이는 Porter의 ‘연관산업과 지원산업’ 요소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어, 결국 농공단지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뿌리내림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상)의 도입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경제 연계모델의 적용을 제안한다. 이유는 ① 농공단지의 노후화, ② 입주기업간 협력 부재, ③ 지역사회와의 괴리 등의諸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① 단지 노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빌바오와 서울혁신파크 사례를 들 수 있다. ② 단지입주 기업간 협력 부재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원리를 통한 극복이 가능하다. 충남 서천의 김가공특화단지의 사례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의 사회적경제 동향은 단순 네트워크 형성 수준에서 나아가 공동자금 참여 등 기업들의 집적공간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간 신뢰에 기반한 내부거래와 공동사업발굴 등 호혜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의 원리는 개별기업이 할 수 없는 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영세성을 극복한다. 또한 조합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만의 소비시장을 조성하여 판로확장한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 적용방식이자 원리로서 사회적경제는 개별기업의 영세성을 협동을 통해 극복하고, 기업간 협력을 보다 실질화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 괴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가치 추구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기본원리로 추구하기에 극복가능성을 가진다. 현재 충남의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취약계층 고용, 교육, 육아, 돌봄,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에 기여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밀착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최근 아이쿱생협이 구례군에 건설한 자연드림파크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기여를 강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제3장 농공단지 및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충청남도 농공단지 현황과 정책

1) 현황

(1) 농공단지 조성현황

충청남도 농공단지는 1985년 공주시 송선동에 위치한 장기농공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도내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농공단지는 총 91개소에 달한다. 도내 농공단지는 1980년~90년대에 49개소가 조성되는 등 정점을 찍었고, 1980년대에 조성된 단지 중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조성 후 20년 이상 운영한 단지가 전체 단지의 과반(51%)이 넘는 것을 뜻하며, 농공단지의 노후화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표 11〉 충남 농공단지 설립 기간 (2015년 현재)

(단위 : 개소, %)

착공연도			가동 업체수		
착공연도	빈도	구성비	업체규모	빈도	구성비
소계	87	100.0	소계	87	100.0
1980~1999년	49	56.3	10개 이하	57	65.5
2000년~현재	38	43.7	11개 이상	30	34.5

자료 : 이관률 (2015).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충남연구원.

현재 충남에 조성 및 조성 중인 농공단지의 면적은 약 14,464천㎡에 달하며, 10,533천㎡가 분양되어 96%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산단(55.0%)과 일반산단(89.8%)에 비교하여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분양률은 농공단지의 낮은 분양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농공단지의 경우 ㎡ 당 분양가는 73천원으로, 국가산단(143천원)과 일반산단(119천원)과 비교하여 약 1/2 또는 2/3의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리적 입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존재하나 기업 투자면에서는 매력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다.

〈표 12〉 충남 농공단지 주요 현황

구 분	단위	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단 지 수	개소	150	5	52	2	91
지정면적	천㎡	107,692	28,104	63,825	1,299	14,464
분양면적	천㎡	55,745	7,830	37,351	31	10,533
입주기업수	개소	2,433	173	1,220	1	1,039
고용인원	명	138,944	6,829	100,043	0	32,072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2) 농공단지의 생산 및 고용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총 수는 1,039개로, 도내 전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43%를 차지한다. 주요한 기업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은 1개소당 평균 11.4개이다. 도내 농공단지는 총 14,464㎡으로, 농공단지 1개소당 평균 158천㎡ 정도의 면적이며, 도내 국가산단(1개소당 5,620천㎡) 및 일반산단(1개소당, 1,227천㎡)과 비교하면 소규모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이용하는 면적⁹⁾은 13.2천㎡으로, 국가산단의 162.5천㎡, 일반산단의 52.3천㎡과 비교할 때, 규모가 영세하다. 특히 지원, 공공용지 및 녹지구역 등 열악하여 기업의 성장 등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각 산업단지의 토지이용면적을 입주기업으로 나누었을 때의 값을 상정함

〈표 13〉 충남 농공단지 용지 현황

(단위:천㎡)

구 분	계	산업용지	지원용지	공공용지	녹지구역	기타
국가산단	28,104	12,822	5,737	2,712	4,969	1,865
일반산단	63,825	40,446	1,788	10,167	7,341	4,083
농공단지	14,464	10,936	484	1,951	1,042	49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농공단지의 생산활동은 총 11,501,521백만원으로 입주기업당 11,070백만원의 생산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당 생산실적으로 비교할 때, 일반산단의 1개 기업당 81,687백만원과 국가산단의 경우 43,577백만원으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사업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농공단지는 총 32,072명의 고용을 창출, 산업단지 고용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의 사업규모·입주면적을 고려할 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규모 기업들의 집적으로 충남경제에 높은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53%인 17,261명의 현지주민이 고용되고 있어 91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농공단지가 농촌지역의 취업기회 제공에 일정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농공단지의 여성 취업의 비율은 44%로 타 산업단지¹⁰⁾보다 월등히 높아, 농공단지는 여성취업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주민의 고용중 농가는 15%에 불과하여, 농공단지의 목적인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에 있어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외지인¹¹⁾의 고용이 46%(14,811명)로 농공단지가 농촌과 밀착된 경제활동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 국가산단의 경우, 약 10%, 일반산단의 경우, 약 22%임

11) 외지인의 수는 내국인과 외국인 포함

〈표 14〉 충남 농공단지 고용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성별		현지인		외지인	
		남	여	농가	비농가	내국인	외국인
국가산단	6,829	6,178	651	83	3,787	2,656	303
일반산단	100,043	78,133	21,910	1,737	59,741	34,034	4,531
농공단지	32,072	22,215	9,857	2,595	14,666	12,617	2,194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도내의 농공단지의 지역별로 분포를 알아보면, 공주시(11개소), 논산시(10개소), 아산시(9개소), 홍성군(8개소), 예산군(8개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의 주요 업종은 석유화학(188개, 18%), 기계(175개, 17%), 전기전자(134개, 13%), 음식료(134개, 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충청남도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도

〈표 15〉 충남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주요 업종

(단위 : 개소)

시군	단지 수	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계	91	1,039	34	38	32	188	78	51	175	134	110	90	9
천안시	4	168	8	8	2	37	1	-	52	45	1	14	-
공주시	11	101	9	3	6	42	10	4	8	13	3	-	3
보령시	7	118	13	10	3	8	25	4	12	18	8	17	-
아산시	9	57	5	-	-	11	2	3	14	5	9	8	-
서산시	4	64	5	4	2	5	5	8	8	2	14	10	1
논산시	10	52	10	5	1	9	2	-	10	7	1	4	3
계룡시	1	2	2	-	-	-	-	-	-	-	-	-	-
금산군	5	77	16	2	9	18	-	5	11	12	-	4	-
부여군	6	37	9	-	1	8	3	-	12	2	1	1	-
서천군	5	72	22	1	3	10	10	-	10	2	13	1	-
청양군	6	51	10	-	1	12	8	3	4	3	3	5	2
홍성군	8	80	13	3	2	8	4	-	14	6	24	6	-
예산군	8	74	2	-	3	13	2	3	8	8	22	13	-
태안군	1	20	4	-	-	1	1	3	2	4	2	3	-
당진시	7	66	7	2	-	6	3	17	7	7	10	7	-

자료 : 충청남도 산업단지 통계자료(2017년 2/4분기)

(3) 휴·폐업 현황

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도내 농공단지 내 휴·폐업 및 부도업체는 46개¹²⁾에 달하였고, 홍성군(12개소)과 공주시(10개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여군(6개소), 당진시(5개소), 논산시(4개소), 금산군(3개소)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시군별 농공단지 휴·폐업 현황 (2015년 현재)

구분	단지수(개소)	전체			
		소개(개소)	가동(개소)	휴·폐업(개소)	휴·폐업률(%)
전체	81	956	910	46	4.8
천안	4	155	154	1	0.6
공주	10	96	86	10	10.4
보령	7	105	103	2	1.9
아산	9	64	63	1	1.6
서산	4	44	44	-	0.0
논산	7	51	47	4	7.8
계룡	-	-	-	-	-
당진	7	71	66	5	7.0
금산	3	66	63	3	4.5
부여	5	29	23	6	20.7
서천	4	58	58	-	0.0
청양	6	43	41	2	4.7
홍성	7	97	85	12	12.4
예산	7	59	59	-	0.0
태안	1	18	18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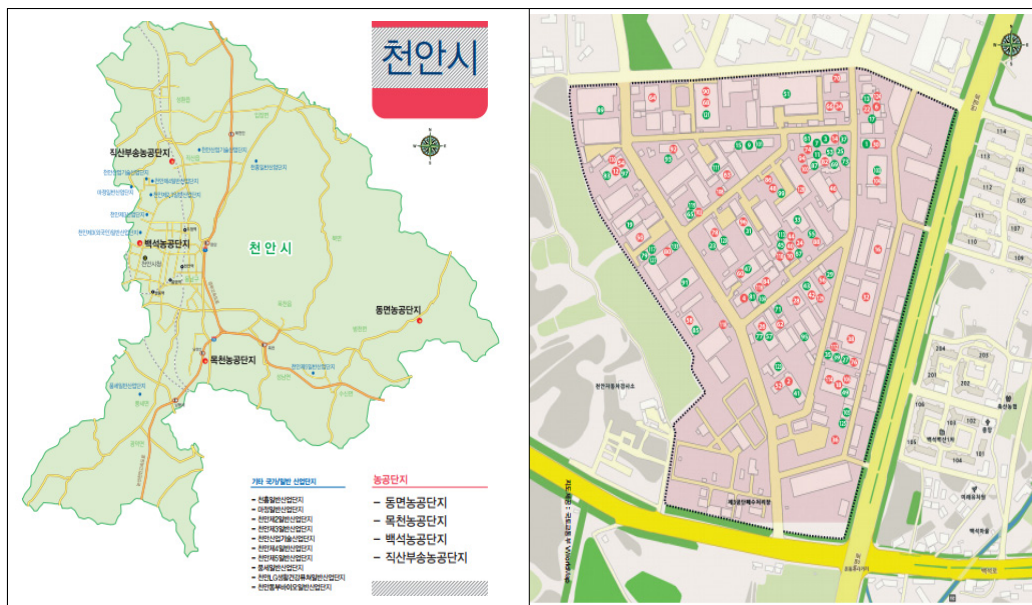
자료 : 이관률 (2015). 충남 농공단지 휴·폐업 시설의 실태 및 활용방안. 충남연구원.

12) 산업단지통계에 따르면 2015 2/4분기 휴·폐업 및 부도업체는 49개였고, 2017년 2/4분기 현재 22개로 절반이하로 떨어졌음

(4) 사례분석

주요지역의 농공단지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북부권의 천안시의 경우 단지의 수는 4개로 적지만, 입주기업은 168개로 가장 많다. 시기적으로 1986~7년에 단지지정을 받아 1980년대 후반 조성되었다. 주요업종은 기계(52, 31%), 전기전자(45, 27%), 석유화학(37, 22%) 순이다. 농공단지의 입지는 대도시 도심 또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다.

이중 백석농공단지는 입지적 특징과 소규모 업체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백석농공단지는 천안의 도심인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30여개 이상의 기업이 밀집된 형태를 보여준다. 고용 역시 5,563명으로 천안시 농공단지의 전체 79%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림 4〉 천안 농공단지 입지와 백석농공단지 기업입지도

자료: 충청남도 농공단지 현황도(<http://www.cnnk.or.kr/pdf/pdf.pdf>)

남부권인 공주시(11개소)의 농공단지는 101개 입주기업 중 42개업체(42%)가 석유화학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84년 지정된 장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농공단지의 입지는 도심 주변부(검상농공단지, 장기농공단지 등)와 천안에 가까운 유구농공단지, 정안농공단지 등이 입지하고 있다.

검상농공단지는 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기업의 집적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섬유, 목재, 화학, 금속, 전자부품 등 다양한 18개업종 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2,106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주시의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유구농공단지의 경우, 단 3개의 중견기업인 식품회사 및 화학케미컬 기업이 부품소재 공급의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생산고(2,161,704백만원, 공주시 농공단지 69%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그림 5〉 공주시 농공단지 입지와 유구농공단지 기업입지도

자료: 충청남도 농공단지 현황도(<http://www.cnnk.or.kr/pdf/pdf.pdf>)

현재 충청남도의 신규 농공단지로 옥호지구 농공단지, 정산2 농공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화농공단지로 2019년까지 조성되는데, 지역특산품인 왕매실, 구기자, 고추 등을 중심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옥호지구 특화농공단지는 당진시 옥호리에 조성되며, 유치업종은 식료품, 식품포장지, 도매 및 소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다. 정산2 특화농공단지는 청양군 학암리에 조성될 예정으로 유치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다.

2) 충청남도 정책: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 지원계획

(1) 충청남도 농공단지 정책의 주요 현안

1980년대부터 추진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노후화의 극복문제 및 농어촌 소득증대와외의 괴리 등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국책 연구원 및 국토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에서 제기되었으나,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는 농공단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농공단지의 지정승인권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으나, 지정권, 실시계획승인권, 준공인허가권 등은 시장·군수에 있다. 그리고 조성 및 인프라 지원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맡고 있고, 관리 및 활성화는 산업자원통상부, 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관여한다. 최근 산업자원통상부가 관리총괄을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그 이유는 생산규모 등이 농공단지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2014년 5월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표 17〉 농공단지 관련 주요 현안

문제점	내용
인력 및 교통여건의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 감소로 농공단지 인력난 심화 - 농어촌 지역에 국가산단,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입지 확대에 따른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쟁력 저하 - 외곽에 위치한 농공단지 조성지역 주변 교통여건의 불리
농공단지 시설 노후 및 인프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후반 조성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농공단지 증가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기반시설 약화 - 주변도로 협소, 공업용수, 식당, 기숙사 등의 인프라 미흡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환경법 강화에 따른 시설 준수 애로
관로 및 홍보를 통한 마케팅 능력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자금조달, 경영, 생산제품의 마케팅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애로
(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회의의 구심적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미흡 - 농공단지 홈페이지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유기적 연계부족
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 등 제도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중앙정책이 농공단지 신규조성 지원 위주로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지원 제도 미약

도지사 주재 농공단지 정책토론회(2013년 12월 3일)를 통해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 및 인력수급 등의 애로점을 확인하였고, 2013년 12월 23일~2014년 2월 5일까지 45일간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72개 농공단지를 현장방문, 면담과 서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2)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목표는 ‘특화단지의 조성을 통한 농공단지 재구조화’ 및 ‘경쟁력 제고’이며, 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정하였다. 6개의 중점추진과제는 ①특화농공단지육성, ②산업기반정비, ③인력확보지원, ④공동인프라 확충, ⑤기업경영지원, ⑥제도기반 구축이다.

〈표 18〉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과제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특화농공단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농공단지 중점 육성 ▶ 기존 농공단지 체질 강화
산업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기반시설 개선 ▶ 용수(공업, 생활)시설 기반구축
인력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지원센터 활용 고용촉진 ▶ 맞춤형 인력풀제도 운영 ▶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공동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농공단지 출퇴근 교통기반 확충 ▶ 미니복합타운 조성
기업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ine 마케팅 지원시스템 구축 ▶ 충남 Biz-콜센터를 통한 경영 및 업종전환 지원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구매 확대
제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제정 ▶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오폐수처리 관련제도의 개선

자료: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2014.5), 11페이지

중점추진과제 ① ‘특화농공단지 육성’은 농공단지의 목적인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특산물 가공생산을 위하여 지역특화단지 위주로 육성하며, 일반농공단지의 특화농공단지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농식품 산업으로 특화된 ‘6차산업특구’로의 육성을 추진한다.

중점추진과제 ② ‘산업기반정비’는 실태조사 결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가장 큰 애로(52%)로 제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노후 기반시설 연차적 개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기투자(‘10~’14)된 142억원과 함께 향후(‘15~’18) 242억원 투자하고, 시설개보수 지원에 관련하여 지원비율 상향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용수(공업, 생활) 시설 기반의 부족에 대해서는 배관설치 및 노후상수도관 및 배수탱크 등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표 19〉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합계	2015	2016	2017	2018	
계		19,468	2,408	6,410	5,550	5,100	
오 폐수처리시설 개선		10,940	1,300	3,260	3,200	3,180	
노후기반시설개선		8,528	1,108	3,150	2,350	1,920	

중점추진과제 ③ ‘인력확보 지원’은 도내 16개 일자리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하고,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단지별 취업도우미(상담사)를 배치 운영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상담 및 취업알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점추진과제 ④ ‘공동인프라 확충’은 인력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과 연결된다. 이를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기숙사 및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로 바꾸고,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등을 통해 단지를 경유하게 하여 농공단지 출퇴근 교통기반확충, 미니 복합타운 조성하여 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꾀하였다. 목표로 2015년까지 455세대, 2019년 까지 1,000세대 조성을 두었다.

중점추진과제 ⑤ ‘기업경영 지원’은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의 경영, 판로, 홍보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농공단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입주기업의 상품홍보 및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 Biz-콜센터」를 통한 경영지원 및 업종전환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구매 확대 추진하여, 2016년까지 670억원의 구매를 추진하기로 한다.

중점추진과제 ⑥‘제도기반 구축’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를 도 및 시군조례로 제정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입주 기업체협의회인 (사)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시군 입주기업체협의회 법인설립 추진한다.

위의 중점추진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는 다음과 같이 사업비 투자계획을 작성하였다.

〈표 20〉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비 고
계	57,122 (30,800)	16,802 (10,800)	7,270	26,750 (20,000)	6,300	※() 민자
국비(지특)	6,580	1,550	1,680	1,850	1,500	
도비	3,949	871	1,173	915	990	
시군비 (민자포함)	46,593 (30,800)	14,381 (10,800)	4,417	23,985 (20,000)	3,810	

2014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 수립·추진에 따라 2016년 현재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사업으로 46개 단지 6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예산은 총 78억 원으로 국비 26억 원, 도비 8억 원, 시군비 44억 원이 소요되었다.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로정비(6억), 노후펜스 교체(3억), 오폐수 처리시설 개보수(11억), 가로등 보수(2억), 체육시설 설치(2억), 관리사무소 리모델링(10억)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휴·폐업 시설의 실태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통해 휴·폐업시설 사례지역 2개소를 선정(공주장기, 부여은산)하였으며, 그중 휴·폐업시설 1개소(한독오피스/공주장기)을 선정하여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정책

1) 현황

(1) 조직현황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말 현재 626개이며, 협동조합 383개, 사회적기업 134개, 마을기업 109개의 순으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갯수는 2012년 172개에서 2016년 626개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다. 특히 2012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110개), 아산시(87개), 논산시(47개), 공주시(45개), 서천군(45개)에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8개), 부여군(14개), 청양군(18개)은 적었다.

〈표 21〉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626	110	45	29	87	44	47	8	28	41	14	45	18	37	40	33
사회적기업	134	31	9	4	27	8	9	1	7	5	2	14	3	5	4	5
마을기업	109	3	9	9	10	9	9	3	5	7	5	9	8	8	7	8
협동조합	383	76	27	16	50	27	29	4	16	29	7	22	7	24	29	20

(2) 매출 및 고용 현황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총매출액은 2012년 250억 원에서 2016년 942억 원으로 약 3.7배 급증하였고, 동 기간 평균 매출액은 2.1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총 종사자수는 1,136에서 3,115명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아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정도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2012년 1,840만원→2015년 3,220만원)과 평균 매출액(동기간 2.1억 원→2.3억 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가능성 가늠할 수 있다.

〈표 22〉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 및 고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직수		172	315	436	523
재무 현황	총 매출액	25,003	44,347	73,843	94,221
	평균 매출액	213.7	201.6	215.3	230.9
	평균 당기순이익	18.4	18.5	28.7	32.2
	평균 부채액	41.9	28.5	35.2	38.2
고용 현황	총 종사자수	1,136	1,856	2,589	3,115
	평균 종사자수	9.7	8.4	7.5	7.7

주)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통계는 설문에 응답한 411개 기업 기준임

지역별 총 매출액은 천안시(207억원), 아산시(161억원), 논산시(115억원)에서 높게 나타나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논산시(3.6억원), 청양군(3.2억원), 아산시(3.1억원), 천안시(2.9억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총 종사자수의 경우 천안시(702명), 서천군(351명), 논산시(274명), 아산시(265명)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3〉 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총 매출액	94,221	20,729	6,005	2,916	16,177	3,528	11,502	295	4,191	2,955	1,301	6,660	4,410	7,767	3,453	2,334
평균 매출액	230.9	292.0	250.2	126.8	311.1	113.8	359.4	42.1	174.6	134.3	108.4	208.1	315.0	258.9	203.1	137.3
총 종사자수	3,115	702	343	89	265	193	274	51	156	124	132	351	92	184	79	80

주)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통계는 설문에 응답한 411개 기업 기준임

(3) 기업의 성장단계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기간은 5년 미만인 기업이 79.4%로 대부분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인식하는 성장단계에 있어서도 초기 성장기(47.2%)와 창업기(2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숙기 기업(10.9%)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기간 및 성장단계

(단위 : 개, %)

구 분		기업수	비중
창업기간	5년 미만	328	79.4
	5년 이상	83	20.1
	소계	411	100.0
성장단계	창업기	100	24.2
	초기성장기	195	47.2
	고속성장기	57	13.8
	성숙기	45	10.9
	쇠퇴기	14	3.4
	소계	411	100.0

(4) 주요 업종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분포는 제조업(23.6%), 농업, 임업 및 어업(20.4%), 도매 및 소매업(12.7%), 교육서비스업(9.5%), 협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6.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숙박 및 음식점업(2.9%),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7%) 등의 업종도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25〉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 분포

(단위 : 개, %)

구 분	기업수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	84	20.4
B 광업	1	0.2
C 제조업	97	23.6
D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1	0.2
E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7	1.7
F 건설업	8	1.9
G 도매 및 소매업	52	12.7
H 운수업	5	1.2
I 숙박 및 음식점업	12	2.9
J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8	1.9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0.5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2.2
N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	2.7
P 교육서비스업	39	9.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4.1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5	6.1
S 협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33	8.0
합계	411	100.0

(5) 제조업 분포 및 특성

지역별로는 논산시(14개), 천안시(13개), 서천군(11개)에 제조업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이 62개(6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을 기반한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논산시(10개)는 식료품 제조업이 두드러졌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식료품 제조업(5개) 이외에 섬유제조업(3업)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지역별 제조업 분포

(단위 : 개)

시군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전자· 컴퓨터· 통신장 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합 계
계	62	7	3	6	6	2	1	1	1	8	97
천안시	5	1		2	1	1	1	1		1	13
공주시	4				1					1	6
보령시	4			2	1						7
아산시	5				1	1					7
서산시	7										7
논산시	10			1	1					2	14
계룡시	1									1	2
당진시	1	2							1	1	5
금산군	6				1					1	8
부여군	2										2
서천군	6	2	3								11
청양군	3										3
홍성군	3										3
예산군		1		1						1	3
태안군	5	1									6

제조업의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1억 1천만원 이상~3억원 이하(22개)와 2천만원 이하(22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10억 1천만원 이상은 10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1억 1천만원 이상~3억원 이하(17개)의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해 10억 1천만원 이상의 기업(6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및 나무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10억 1천만원 이상의 기업이 각기 2개로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기업수가 1~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7〉 매출액별 제조업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2천 만 원 이 하	2천 1백 만원 ~5천 만원 이하	5천 1백 만원 ~1억 원 이하	1억 1천 만원 ~3억 원 이하	3억 1천 만원 ~5억 원 이하	5억 1천 만원 ~10 억원 이하	10억 1천 만원 이상	합계
합계	22	13	17	22	9	3	10	96
식료품 제조업	11	10	10	17	5	2	6	61
음료 제조업	3		1	2	1			7
섬유제품 제조업			1	1		1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1	1			2	6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2	1	1		2	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			2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1					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1
가구 제조업	1							1
기타 제품 제조업	3	3	1		1			8

제조업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살펴보면, 2천만원 이하(57개)와 2천 1백만원 이상~5천 만원 이하(24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전체 제조업 중 대다수를 차지 (61개)하는 가운데, 2천만원 이하(37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8〉 당기순이익별 제조업체 현황(단위 : 개)

구분	2천만원 이하	2천 1백만원~5 천만원 이하	5천 1백만원 이상~1억 원 이하	1억 1백만원 이상	총합계
합계	57	24	7	8	96
식료품 제조업	37	16	4	4	61
음료 제조업	4	1	2		7
섬유제품 제조업	1	1		1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	1	1	1	6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2	2		2	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1			2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1			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1
가구 제조업	1				1
기타 제품 제조업	7	1			8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민선5기의 충남도정은 사회적경제를 주요 도정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내 경제 및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정책이었다. 이는 수도권 인접한 충청남도 북부의 대공장 유치방식으로는 남부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대공장 유치방식, 즉 외부 거대자본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아닌 충남내의 다양한 자원발굴과 연계를 통한 내발적 발전전략¹³⁾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자원발굴과 연계를 가능케 하는 정책수단이었다.

13) 내발적 발전전략은 일본의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의 주장으로, 충남연구원 박진도 전원장은 지역만들기의 주요한 기제 내발적 발전을 주장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민·관·학·연의 거버넌스¹⁴⁾를 만들어 사회적경제의 이해 확산을 하는 동시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팀을 설치하여 충청도정의 추진조직을 설치한다. 또한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설립지원 등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확보하고, 2012년에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지원제도의 기초를 확보하였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1차 5개년 계획(2013년~2017년)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동시, 사회적경제의 청사진인 중장기계획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이하, 1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한다. 당시의 사회적경제 현황은 ① 정부재정지원 중심, ② 생산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심¹⁵⁾, ③ 협동조합의 미발달 ④ 농협 등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 역할 미흡, ⑤ 사회적금융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정책적으로는 ① 통합적 추진체계 미흡, ② 지자체 특성에 맞는 육성지원 미흡, ③ 네트워크 구축 미흡, ④ 주류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정책과의 연계협력 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었다. 이에 따라 1차 5개년 계획추진방향으로 ① 육성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②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육성, ③ 통합적 정책 추진, ④ 로컬거버넌스 기반 사회적경제 추진으로 잡고, 현황과 추진방향을 통해 1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3대 전략과 4대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표 29〉 충남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의 비전과 과제

구 상	내 용
비전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
목표	사회적경제영역 확대 및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정착
전략	공동생산전략, 사회적경제 주류경제화 전략, 민간주도 네트워크 전략
과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14) 충남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충청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모임,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2011)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의 관심을 높였고, 정책추진의 기반을 조성함

15) 신명호(2009)의 사회적경제 조직분류 방식을 채택함

우선 1차 5개년 계획은 ‘공동생산(co-production)’ , ‘사회적경제 주류경제화 전략’, ‘민간주도 네트워크 전략’의 3대 전략을 설정한다. ① 공동생산(co-production) 전략은 지역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의제 및 자원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지방정부는 행정계획과 우선구매, 통합행정조직의 운영을 통해 공동생산의 참여한다. ② 주류경제화 전략은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의 대안이 아닌 낙후지역 활성화와 한계집단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활성화 수단으로서, 지역경제의 주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③ 민간 주도형 네트워크 전략은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구축하는 것으로, (암묵)지식의 창출과 교환, 거래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등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민간주도의 네트워크 육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3대 전략의 실행과제로, 4대과제를 설정하였다. 4대과제는 ①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②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③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역량강화, ④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이다. 각 과제별 전략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전략사업 중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5대 핵심사업을 설정하여 주요사업으로서 추진하였다. 5대 핵심 사업은 ①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② 시군밀착형 중간지원기관 설립, ③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④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⑤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이다.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 과제의 사업수행평가¹⁶⁾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기반조성’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홍보의 분야는 다양한 채널홍보를 시도하여 일정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촉발했으나, 단발성·일회성에 그쳤다. ②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여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물적·인적한계로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 및 제도 체계 구축은 몇몇 시·군 단위 지원체계 및 조례들이 구축되는 등 활력을 보였지만, 과반의 시군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없었다. 광역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사회적경제 기금 및 금융 등은 연구조직 및 민간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진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⑤ 사회적경제 통계는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추진하여 기초데이터를 축적하였다.

16) 프로그램 집행 모니터링 평가로 수행

기반조성분야의 경우,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친화적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협동조합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이해확산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목표인 통합적 기반조성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금 및 금융조성, 판매공간조성 등 주요한 기반을 조성치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인적자원’의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내 혁신형 인재 발굴 및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업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의 공동사업을 추진되어 매년 20여개 과정 1,500명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산하였다. ②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은 2016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목적은 도내 청년에게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활동케 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창업 및 취업 등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6년 9명, 2017년 16명을 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③ 사회적경제 교육매뉴얼·교재 개발 및 강사양성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17년부터는 충남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있다. ④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는 단순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사업으로 2013년후 매년 10~20여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활동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적자원’의 분야의 경우, 아카데미를 비롯한 교육사업 중심으로 추진, 도민 인식확산과 사회적경제 영역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학습동아리 사업은 국내 최초로 운영된 성공사례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된 사례이다. 그러나 공무원 및 전문가 육성의 미흡 및 도민대상 교육의 산발성과 중복 등은 한계이며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비즈니스 역량강화’의 분야의 경우, 조직간 거래 활성화 및 시장경쟁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① 공공구매 조달과 관련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구매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공공구매 조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② 민간시장 확대지원사업의 경우, 판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시판매전 및 온라인 쇼핑몰 ‘따숨몰’ 등 판로개척을 하였다.

‘비즈니스 역량강화’의 경우, 사회적경제 판로확대,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 시스템의 구축 등 일정한 성과는 존재하나,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까지 연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로 개발과 매출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가 높았다.

‘네트워크 구축영역’의 분야의 경우, 조직간 협력강화와 사회적경제 블록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① 업종·지역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8개 업종의 네트워크가 활동 중이고, 15개 시·군중 12개 시·군에 지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② 특히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충청남도의 광역·기초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충남의 사회적경제 대표조직으로, 2015년 6월 결성되었다.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영역’의 분야의 경우, 다양한 협의체와 네트워크 조직이 설립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연대사업 개발 및 수행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사업개발과 공동추진의 과제를 안고 있다.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기본계획(2018년~2022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는 1차 5개년 계획(2012년~2017년)기간동안 급성장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2년 172개에서 2017년 6월 현재 670개로 약 3.6배 성장하였고, 매출액은 2012년 265억원에서 2015년 현재 983억원으로 약 3.7배 성장, 고용자수는 2012년 1,136명에서 2015년 3,115명으로 약 2.7배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로컬푸드,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지역 문제 및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규모의 성장 및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의 체질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근거들이 많이 존재한다. ① 사회적경제의 도입이유의 하나인 북부-남부의 격차해소는 아직 요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북부권에 편중되었고, ② 농림어업의 업종편중 등으로 사회적경제가 충남도민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였다고 보기에 힘들었다. ③ 매출과 고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및 업종별 매출편차가 존재하며, 정규직 고용율이 낮고, 고령자 중심의 고용으로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도약을 필요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최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에 대한 대응, 4차산업혁명의 대두 등 충남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①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생태계 구축, ②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고도화, ③사회적경제 인재양성, ④사회적경제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⑤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⑥사회적경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사람중심의 사회 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영역을 설정하였다. 4대 전략영역을 추진하기 위해 10대 과제, 34개 실천사업과 27개 협업사업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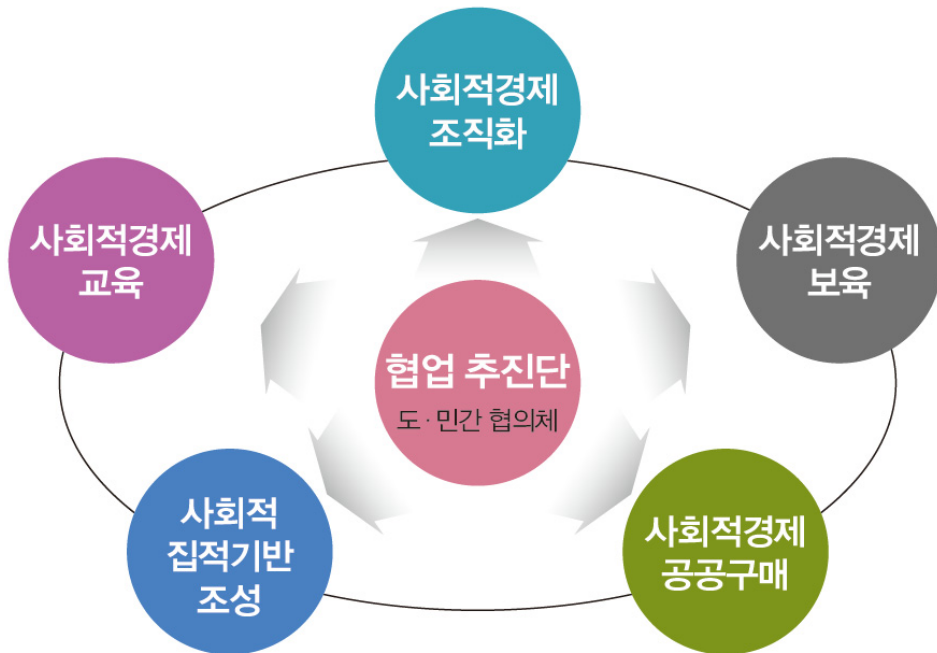
2차 기본계획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이다. 총 24번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관계별로 민-관, 민-민, 관-관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자중심의 계획수립이 아닌 민관합동추진단¹⁷⁾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민-관),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당사자 및 중간지원기관 직원 등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 추진하여 구체적인 사업설계 등을 추진하였다(민-민). 또한 주무부서는 충남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부서와의 논의를 추진하여 사업발굴 및 조정을 실시하였다(관-관).

17) 공무원, 전문가, 중간지원기관, 당사자, 연구자 등 10명으로 구성됨

〈표 30〉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 수립 과정

연 번	날 짜	주 요 내 용
1	2016.9~12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실시(568개 전수조사)
2	2016.12.28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평가워크숍 개최(공주대학교, 35명 참석)
3	2017.1.31.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4명 참석)
4	2017.2.14.	민관합동추진단 2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4명 참석)
5	2017.2.14.~2.28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수요조사(1차)
6	2017.2.28.	충남 사회적경제 성과평과 집담회(천안 공간사이, 50명 참석)
7	2017.3.10.	민관합동추진단 3차 회의 운영(공주대학교, 15명 참석)
8	2017.3.28.	민관합동추진단 4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2명 참석)
9	2017.3.30.~4.6.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수요조사(2차)
10	2017.5.19.~5.29.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수요조사(3차)
11	2017.5.29.	민관합동추진단 5차 회의 운영(충남연구원, 15명 참석)
12	2017.6.8.	2차 5개년 기본계획 실천사업 실무자 워크숍 개최
13	2017.6.13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회 회의시 계획 보고
14	2017.6.14.	1차 사회적경제 전문가 자문회의
15	2017.6.20.	충남 경제정책 자문회의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기본계획 보고
16	2017.6.21.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보고
17	2017.6.27.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주관 간담회
18	2017.6.29.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충남 시군 공무원 회의
19	2017.7.4.	사회적경제 관계자 대상 토론회 개최
20	2017.7.19.	5개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실시(충청남도, 부지사 외 실국장 등 25명 참석)
21	2017.8.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호서대학교, 중간지원조직 32명 참석)
22	2017.8.18.	민관합동추진단 6차 회의 운영(충청남도, 15명 참석) 2차 5개년 기본계획 사업집행 및 관리방안 검토
23	2017.8.18.	충남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 실시(충청남도, 23명 참석) 2차 5개년 기본계획의 사업 실행계획 및 로드맵 검토
24	2017.8.28.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보고 2차 5개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검토 및 승인
25	2017.8.31.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두 번째, 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실천사업과 협업사업의 구분이다. 실천사업은 충남도의 주무부서의 책임 하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반해, 협업사업은 사회적경제의 주무부서가 아닌 도정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접목이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의 담당 부서의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협업사업은 담당부서만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 민간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무과(경제정책과)가 행·지원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6〉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추진체계

세 번째는 사회적경제가 지향해야할 ‘좋은 일터’ 및 ‘좋은 일자리’의 목표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회적경제의 좋은 점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것을 뽑아낼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즉 매출액, 고용자수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 즉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목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고민했고, 다음과 같은 4가지 거시성과 목표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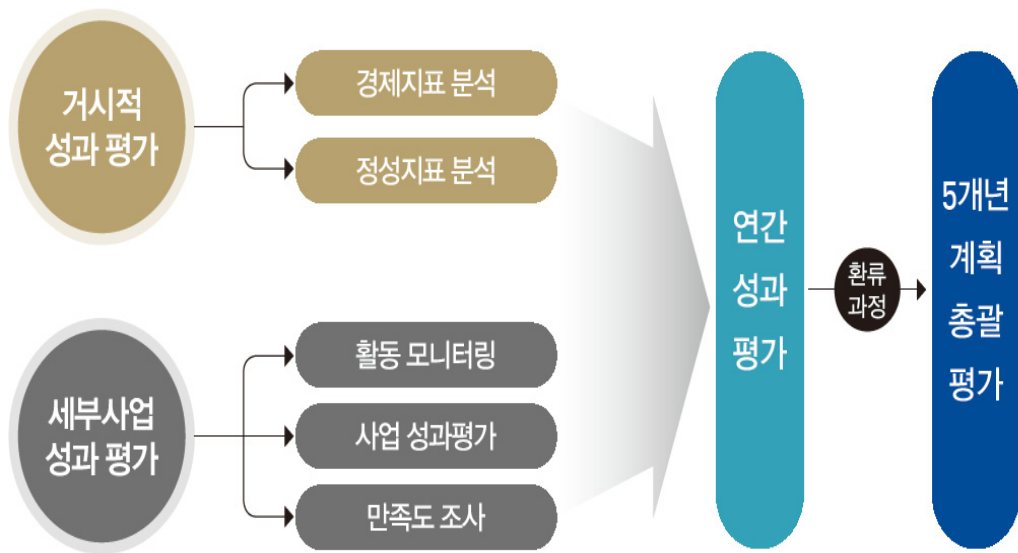


〈그림 7〉 제2차 5개년 성과목표

각 거시 성과목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좋은 일터는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특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즉 전직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케 하였다. ② 좋은 일자리의 경우는 3년 이상 고용유지율, 생활임금제 도입,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하는 ‘급여’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유연근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고용유지), 적당한 봉급(생활임금)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③ 사회적가치 창출은 현재 충남 현실에 맞는 사회적가치 지표가 없는 실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지역사회기여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우선 자발적인 사회적가치 공시로, 기업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및 사업을 소개하는 것과, 지역사회 및 연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진하는 기준인 지역네트워크 참여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의 특징은 성과평가의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1차 계획사업 기간 중에는 당해년도 정책효과성을 산출하여 이를 차년도 정책개선에 환류시키는 시스템적인 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 사업추진에 주요한 정책적 관심이 있었기에 평가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간과는 비단 충청남도만이 아닌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성과평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성과평가는 거시적 성과평가와 세부사업 평가로 나뉘는데, 거시적 성과평가는 사회적경제의 실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며, 세부사업평가는 수행평가로서 모니터링, 세부사업평가, 만족도조사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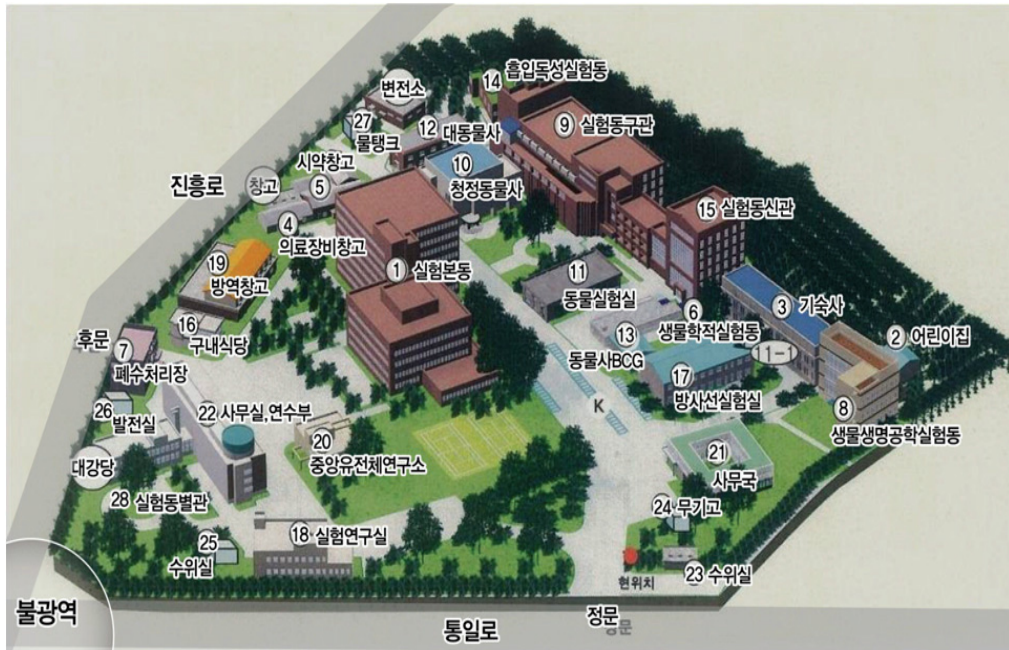
〈그림 8〉 제2차 5개년 성과평가체계

3. 사회적경제 기반의 집적단지 주요 사례

1) 노후화 대응: 서울혁신파크, 빌바오, 컨테이너 단지

(1) 서울혁신파크

노후화와 휴·폐업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혁신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의 집적 단지를 조성한 사례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집적지는 서울시에서 2014년 조성한 ‘서울혁신파크’가 대표적이다. ‘서울혁신파크’는 질병관리본부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공간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조성되었다. 이 유휴공간은 건축물 28개동(연면적 51,34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임대료는 평당 21,000원으로 서울시내 오피스 평균 임대료의 30~50% 수준에 불과했다. 임대료 수준이 낮았던 이유는 건물노후화뿐만 아니라 과거 보건원이라는 혐오시설 이력, 임대기간 제한 등 임대기피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휴공간이 오랜기간 방치되자 임대활용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평가원, 특수임무수행자회, 강북근로자복지관 등 업종 구분 없이 임대를 허용하여 공간의 특성도 모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휴공간은 역세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았으며, 저렴한 임대료, 쾌적한 근무환경, 넓은 주차공간 등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은평구, 중간지원조직 등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은평구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울사회혁신파크’의 설립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림 9> 질병관리본부 휴·폐업시설 현황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혁신단체의 연대와 협업 플랫폼 조성, 체계적인 혁신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다. ‘혁신파크’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조직 및 사업활동 주체¹⁸⁾들을 집적하고,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로 말할 수 있다. 혁신파크의 핵심 원리는 네트워크의 뿌리내림(embeddedness)이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지식(암묵적 지식 포함)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네트워크는 관련 주체간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혁신파크’는 기존 산업클러스터와 달리 특정 산업분야로 특화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융·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리적 범위를 넘어 개방형 혁신을 위한 열린 공간을 추구한다.

1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청년창업, 소셜벤처, 사회적기금제공기관, 연구기관 등 사회혁신, 공동체 회복, 연대경제 등을 추구하는 조직

〈표 31〉 산업클러스터와 혁신파크 차이점

구분	산업클러스터	혁신파크
중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형성 (IT클러스터, 바이오클러스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분야를 특화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 문제 관련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빈곤, 환경 등 사회문제를 다루는 조직들의 군집)
지리적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제약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가치들이 상호관계하는 열린 공간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성(Commonalities) 상보성(Complementa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다른 분야를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혁신 단체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혁신파크’의 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2013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서울연구원에서 2013년 수행한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토대로 서울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사회혁신파크’ 구성을 구체화 하였다. 2014년에는 서울시의 주요 중간지원조직(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크리에이티브랩) 및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가 입주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대미문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혁신 조직들의 모임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추가 공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서울기록원과 서울힐링숲 조성, 2019년에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다.

〈표 32〉 서울혁신파크 연혁

연도	내용
1960년	•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사용
2010~2012	• 질병관리본부 충북 오송으로 이전 •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개발 방향 제시
2013~2014	• 혁신 실험을 창조하고 확산하는 서울혁신파크로 구체화 • 중간지원조직(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크리에이티브랩) 및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입주
2016	• ‘전대미문 프로젝트’를 통해 2차 입주단체 모집 • 중소규모 건물 개보수공사 완료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테스트베드) 입주
2017	• 혁신 중추 기지가 될 1단계 조성 공간 건립 예정 • ‘비전화공방서울’ 설치
2018	• 서울시 천 년 역사가 한곳에 모이는 서울기록원 준공 예정 • 시민에게 휴식과 위안을 선사할 서울힐링숲 조성 예정 • 혁신가와 시민의 연결이 일어나는 민자 사업부지 조성 예정
2019	• 미래의 혁신가들이 마음껏 뛰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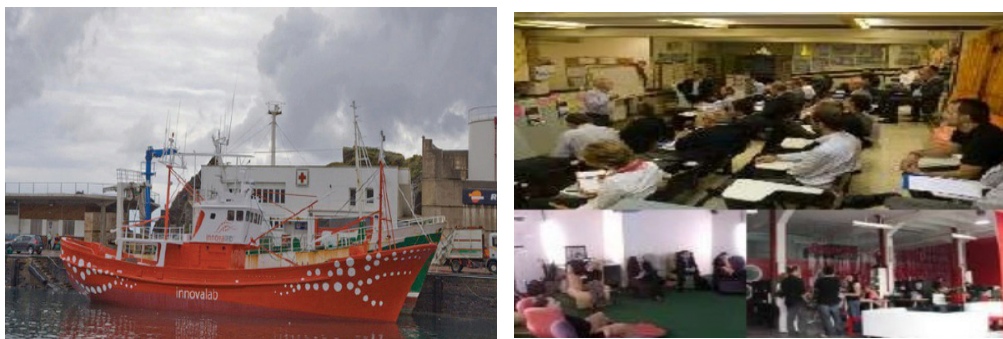
자료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https://www.innovationpark.kr/>)

현재 ‘서울혁신파크’에는 총 120개 단체와 600여 명의 혁신가가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영화, 출판, 공연, 전시, 창작, 음악 등) 44개 단체, 공동체 치유·복지 21개 단체, 사회적경제지원(법률, 세무, 노무, 클라우드펀딩, 인큐베이팅 등) 17개 단체, 환경·생태·에너지 15개 단체, 사회정의 10개 단체, 창의·다양성 9개 단체, 협의체 4개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혁신,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서울혁신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50플러스서부캠퍼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사회적경제, 공동체, 청년,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서울크리에이티브랩 등도 입주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혁신파크는 스페인 정부와 지방정부가 600만 유로(84억 원) 투자하여, 타이어공장지대 7만 2,000㎡에 사회적혁신파크(Social Innovation Park) 건설하였다. 주요 사업은 사회혁신실험실(Social Innovation Laboratory; G-lab), 사회혁신아카데미(Social Innovation Academy), 사회적기업발전소(Social Enterprise Generator),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Incubator of Social Enterp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혁신실험실(G-lab)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의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혁신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매년 구성원들이 실험실의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연구결과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혁신아카데미(Social Innovation Academy)는 제3섹터 관련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Enterprise)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3섹터 리더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발전소(Social Enterprise Generator)는 DenokInn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사회혁신파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 및 Gipuzkoa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Incubator of Social Enterprise)는 초기창업 사회적기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초기자본 제공, 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빌바오 사회혁신파크는 유럽 최초로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공공기관, 실험실, 창업보육시설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 사회혁신파크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3섹터의 다양한 조직들(사회적기업, NGO 등)이 자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 정보, 기술 등의 교류를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11> 빌바오 사회혁신파크(좌 사회혁신실험실, 우 사회혁신아카데미)

자료 : 서울연구원, 2013,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 컨테이너 단지사례

최근 컨테이너 단지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예술가 등이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플랫폼 창동 61, 언더스탠드 에비뉴(Under Stand Avenue)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창동 61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문화 불모지였던 창동·상계지역에 조성된 61개 대형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플랫폼 창동 61은 건축면적 2,241.98㎡, 연면적 2,456.73㎡의 대단지로 61개의 대형 컨테이너는 창업지원공간(카페형 예비창업공간, 인큐베이팅 센터), 문화예술 공간(포트레이트 갤러리, K-pop 갤러리, 합주스튜디오 등), 갤러리,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 창동 61은 서울시가 100%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초기 (주)메타기획컨설팅에서 기획·관리·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인터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창동 61은 인건비, 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연간 1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2> 플랫폼 창동 61

자료 : 서울시 정보공개(<http://opengov.seoul.go.kr/seoullove/10248226>)

언더스탠드에비뉴(Under Stand Avenue)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롯데면세점의 사회공헌기금(102억 원)을 통해 조성되었다. 이 부지는 당초 서울시에서 소유했던 미활용 공간이었으나, 서울시와 성동구, 그리고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의 협력을 통해 ‘창조적 공익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다른 복합문화공간과 달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고 있다.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기본철학은 ‘모든 사람이 소명을 발견하고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한다’이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신진아티스트들을 지원해 자립을 도움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롯데면세점 등 본연의 사업과도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정지영, 2016).

언더스탠드에비뉴는 4,126㎡ 규모의 대지에 컨테이너 116개를 설치하고, 각 공간을 7대 가치로 구성하였다. 7대 가치는 공간에 적용되어 ①유스 스탠드(Youth Stand), ②소셜 스탠드(Social Stand), ③오픈 스탠드(Open Stand), ④맘 스탠드(Mom Stand), ⑤하트 스탠드(Heart Stand), ⑥아트 스탠드(Art Stand), ⑦파워 스탠드(Power Stand) 등으로 구현되었다. 첫째, 유스 스탠드는 청소년 일터학교로 취약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시설퇴소자 등)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젝트로 운용되고 있다. 유스 스탠드에서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18~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업훈련 후 취업과 연계하고 있다. 둘째, 하트 스탠드는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맘 스탠드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들의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아트 스탠드는 문화예술 전시·공연 공간으로 예술가의 지원과 지역주민 문화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파워 스탠드는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창업교육, 컨설팅, 기술,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소셜 스탠드는 윤리적 소비 공간으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공정 무역, 환경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숍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오픈 스탠드는 개방형 공간으로 초기 창업가들에게 팝업 공간으로 제공되며, 제품 경쟁력 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3> 언더스탠드 에비뉴

자료 : 언더스탠드 에비뉴 홈페이지(<http://www.understandavenue.com>)

2) 입주기업간 협력사례: 서천 김가공특화단지

기존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기란 새로 창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유입되는 일반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인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례가 있다. 바로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입주 기업들이다. 서천 김가공특화단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특화농공단지로 2차 김가공시설의 집적을 통해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농간의 소득개발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12필지 중 8개 업체의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3개 업체가 입주한 상황이다. 기반시설로 저온저장창고, 체육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직까지 단지 내에 공장이 설립된 기업이 3개에 불과해 단지의 분양 및 활성화가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서천 김가공특화단지 현황>

-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산 28-1 일원
- ▶ 면적 : 78,541.2m²
- ▶ 분양계획 : 12필지
- ▶ 조성목적
 - 2차 김가공시설의 집중화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
 - 도·농간의 소득개발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산업입지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시설인프라
 - 저온저장창고, 주차장,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이용시설, 공원및 녹지 등
- ▶ 추진현황
 - 기반시설, 저온저장창고, 체육공원 완료
 - 8개 업체 모집 완료 (현재 3개 업체 입주 완료)

서천 김가공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이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특히 기업간 협력과 지역사회 기여를 고려하게 된 것은 서천 김산업의 특성과 당면한 과제가 큰 영향을 주었다. 서천은 김 양식의 최적지로 총 72.5km에 걸쳐 서해안과 접한 리아스식 해안이 넓은 갯벌과 적절한 조류를 만들어 천혜의 양식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기온차가 뚜렷하고 한냉 건조한 겨울철의 서북풍과 낮은 기온 등은 김 생육과 해초류 양식 산업이 발달하기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서천군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생산량 대비 95%, 전국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마른김 생산업체는 충청남도 업체 수의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 서천군 김생산량

구분	충청남도	서천군	대비(%)
물김 재배면적(ha)	3,510	3,333	95
물김 생산량(천톤)	12,630	12,000	95
마른김(업체, 1차가공)	71	70	98.6

자료: 서천군 해양수산물과 내부자료(2017)

그러나 서천군은 물김과 마른김의 점유율은 높으나 조미김 분야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천군 물김 생산량은 충청남도의 95%, 1차 가공인 마른김 업체는 충청남도 업체 수의 9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차 가공인 조미김 생산업체는 12개로 충청남도의 10.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국으로 조미김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역 내 2차 가공 분야의 미약으로 많은 마른김이 타지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미김 업체의 경우에도 영세성으로 인해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며, 조미김 브랜드가 없어 타 지역에 비해 브랜드파워도 미약한 상황이다.

〈표 34〉 서천군 조미김 업체수

구 분	충청남도	서천군	대비(%)
조미김	119	12	10.1

자료: 서천군 해양수산물과 내부자료(2017)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외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데 국내 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에 따라 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김 생산을 위한 경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생산량 증대와 수출 확대에 의한 국내 김 산업의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김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수출액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지자체와 입주기업들은 서천김 산업의 활성화와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경제 기반의 6차산업형 농공단지 모델 구축을 고민하게 되었다. 김가공특화단지가 가지는 산업 기반에 대한 6차산업적 접근을 통해 입주업체의 역량 강화 및 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김 생산뿐만 아니라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바이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입주기업간 협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통합 브랜드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천군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통해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비즈니스센터 설립, 조미김 가공유통 착유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5〉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

구분	세부내용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427
규 모	김비즈니스센터 715㎡ 조미김 가공유통 착유시설 66㎡
사업비	37억 원 (국고 18.5억, 지방비 18.5억)
사업기간	2년(2018~2019년) - '18~19년 : 센터 조직화 및 직원 역량강화(휴먼웨어) - '18~19년 :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 '18~19년 :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소프트웨어)
사업내역	- 김비즈니스센터, 조미김 가공유통 착유시설 조성 - 포장법·디자인 등 신제품 개발, 통합유통브랜드 개발, 품질기준 제고 해외시장 수출 등 홍보마케팅 지원 - 김비즈니스센터 조직화 및 직원 역량 강화

또한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김가공특화단지 내 입주계약 완료 기업은 8개 업체이고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입주업체 종사자 수는 185명이고, 연간 원료(마른김) 사용량은 366만 속에 달한다. 연간 제품 생산량은 490만 박스(334억원)로 추정된다.

〈표 36〉 입주기업 현황

연 번	업체명	업종	종업원 수	원료사용량/년 (만숙)	제품생산량/년 (만박스)	매출예상액/년 (억원)
			185	366	490	334
1	유한회사 대한김	조미김	25	48	60	42
2	유한회사 해랑	조미김	25	48	60	42
3	영신식품	조미김	20	40	55	38
4	부흥맛김	조미김	20	40	55	38
5	해미S&F 영어조합법인	조미김	30	70	90	63
6	계절수산	조미김	20	40	55	38
7	백사어촌계수산	조미김	20	40	55	38
8	신규업체	조미김	25	40	60	35

입주기업들은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2017년 10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7〉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사회적경제조직화 과정

시기	내용	비고
2013. 9	김특화단지 분양 및 업체 입주	(해미S&F영어법인)
2014. 4	김특화단지 업체 입주 계약	(영신식품, 계절맛김)
2014. 4	김특화단지 입주기업협의체 구성	
2015. 6	김특화단지 업체 입주	(영신식품, 계절맛김)
2015.12	김가공특화단지 內 김 공동저온저장시설 준공	
2016.10	5개 업체 입주 계약완료	(부흥맛김,대환김,해랑,백사 어촌계,청강수산)
2016.4~12	입주기업협의체 간담회(4회)실시	
2016.12.	김가공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계획 수립	
2017.1.31.	사업계획 협의 (충남연구원)	
2017.3.20.	사업계획 협의 (충남도 수산산업과)	
2017.6.13	6차산업화 농공단지조성 및 사회적경제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1차 간담회 (9명)	(충남도 국방산단팀, 서천군 해양수산물과, 서천군지역순환경제센터, 입주기업체 대표 참석)
2017.7.6	6차산업화 농공단지조성 및 사회적경제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2차 간담회 (9명)	
2017.7.9	김가공특화단지 6차산업화기반조성 T/F팀 구성(7명)	(해양수산물과장,김수산물팀장, 기업지원팀장,서천군지 역순환경제센터사무국장,김 가공특화사업협의회장 및 사무국장, 업무담당자)
2017.7.28	김가공특화단지 6차산업화기반조성 T/F팀 1차 회의	(T/F팀, 충남연구원등 참석)
2017.8.22	김가공특화단지 6차산업화기반조성 T/F팀 2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8.28	김가공특화단지 협동조합 설립 준비 1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9.6.	김가공특화단지 협동조합 설립 준비 2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9.13.	김가공특화단지 협동조합 설립 준비 3차 회의	(T/F팀, 7개 업체 대표 등)
2017.9.20.	서천김협동조합 발기인 회의	(5개 업체 대표 참석)
2017.10.17.	서천김협동조합 창립총회	(7개 업체 대표 참석)

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2017년 초부터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입주기업 8개 업체 대표들의 동의와 참여,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협동조합 설립은 서천군지역경제순환센터와 해미 S&F 영어조합법인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인 서천군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가치,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영리목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입주기업 중 해미S&F 영어조합법인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다른 입주기업들을 설득·참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대표의 적극성에 의해 다른 대표들이 참여한 만큼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서천김가공특화단지)는 사회적경제 기반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주체별로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운영은 입주업체(8개)가 설립한 ‘서천김협동조합’에서 자주적인 공동체사업을 운영하며, 서천군지역순환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의 협치 모델 제시 및 실무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관련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충남도 투자입지과와 서천군 해양수산과에서 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서천김협동조합’은 서천군지역경제순환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2025년까지의 발전방향 및 운영계획을 설정하였는데,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입주기업의 사회적경제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한 학습 단계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사회적경제 진입 단계로 입주기업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설립을 동의함으로써 ‘서천김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3단계는 사회적경제의 정착을 위한 단계로 조합원 대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집중 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단계로 볼 수 있다. 4단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계로 입주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종사자 조합원의 가입 확대, 서천김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5단계와 6단계는 전체 입주기업의 사회적기업화와 전체 종사자들의 협동조합 의무가입,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등 사업의 안정화를 달성하며, 최종적으로 서천김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38〉 서천 김가공특화단지의 발전방향 및 운영계획

시기	내용
(1단계)사회적경제의 공감대 형성화	(2017.6.13- 1차 간담회 : 사회적경제 개념) (2017.7.6- 2차 간담회 :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2017.7.28- 1차T/F팀 회의 : 사회적경제의 사례) (2017.8.22- 2차T/F팀 회의 : 사회적경제와의 협력)
(2단계)사회적경제의 진입화	(2017.8.28- 협동조합소개 및 설립준비위원회 조직) (2017.9.6- 협동조합설립준비위 1차 회의) (2017.9.13- 협동조합설립준비위 2차 회의) (2017.9.20- 협동조합설립 발기인 회의) (2017.10.17- 서천김 협동조합 설립)
(3단계)사회적경제의 정착화	(2017.11 - 서천김협동조합 1차 조합원 교육 실시 예정) (2017.11 - 서천김협동조합 2차 조합원 교육 실시 예정) (2017.12 - 서천김협동조합 3차 조합원 교육 실시 예정)
(4단계)사회적경제의 활성화	(2018.1 - 8개 업체중 2개 업체 사회적기업 진입 준비) (2020.12 - 전체 업체 대상 사회적기업 진입 완료) (2020.12 - 전체 업체 종사자 조합원 가입 확대) (2020.12 - 7개 업체 추가 입주 완료 - 총15개 업체) (2020.12 - 서천김 판매 프랜차이즈사업 시작)
(5단계)사회적경제의 안정화	(2021- 서천김 판매 프랜차이즈사업 전국으로 확대) (서천김협동조합 조합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의 의무화) (2022- 전체 업체 종사자들의 협동조합원 의무 가입) (2023-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6단계)사회적경제의 특구화	(2025- 서천김 사회적경제 특구 단지화 조성 완료)

자료: 서천김가공특화단지 내부계획

‘서천김협동조합’은 2017년 현재 사업으로 서천김 협동조합 조합원 및 종사자 교육과 홍보 사업 (홍보리플릿, 명함 제작)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사업으로 공동시설 위탁운영 사업 (비즈니스센터, 착유시설등),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BI제작), 협동조합원 및 각 업체 종사자 교육 활성화, 공동생산 및 공동마케팅 등의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김 특화단지내 기업체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농공단지 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천김 주말 장터 운영, 서천김 축제 운영 등도 기획하고 있다.

〈표 39〉 서천김협동조합 중장기 사업계획

구분	주요내용
서천김 비즈니스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김 생산과 판매·체험마케팅을 융합한 6차산업형 특화단지 조성 • 비즈니스실, 전시·홍보·체험·판매시설 등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 수출상담 및 해외 시장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 김 가공생산 인프라 및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 국내 주요도시 서천김 전문 판매장 통합 운영
김가공 특화단지의 안정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산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관련 체험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생애주기별 김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고객 확보 - 평생고객 DB구축 및 관리를 통한 국내시장의 안정성 확보 - 추후,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연계 운영 • [조직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협의체 조직화 컨설팅 및 직원 역량 강화 - 입주기업협의체의 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종사자 및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김 생산 및 운영 인력 육성 - 김 체험지도자 및 생태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p>서천김 브랜드 이미지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유통브랜드 개발 -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언론 홍보 - 해외박람회 참여 및 수출·관촉 지원 - 수도권 등 판매장터 운영 - 서천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전문 판매점 오픈 전국 확대) •[서천김 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법·디자인 등 신제품 개발 - 품질관리기준 및 국내 최초 품질등급제 마련
<p>김 가공 특화단지의 사회적경제 구축 및 플랫폼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업체 전체의 사회적경제 진입 - 서천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김 가공 전체 업체의 사회적기업화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 이미지 및 가치 상승 - 지역 및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 •[김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김 생산자 업체의 사회적기업화 및 생산자협동조합 설립 운영 - 서천김 판매 프랜차이즈 운영 및 사회적기업화 - 서천김 고객 및 소비자들을 위한 서천김 생활협동조합 설립 운영 - 서천김 (소비자)국제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 운영(해외 조합원 가입 확대)

자료: 서천김가공특화단지 내부계획

그러나, ‘서천김협동조합’의 운영과 지속성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의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조합원은 조미김 생산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설립초기의 참여도가 조금은 미약한 상황이다. 보다 강한 조직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조합원들과 타 조합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지원기관들의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공감도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초기 협동조합 설립 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들이 중간지원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자생력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경우에도 서천군지역 순환경제센터의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인식개선과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중간지원조직 의존성은 자생력과 활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중간지원조직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새로운 도전은 농공단지의 활성화 모델 발굴에 있어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는 첫째, 지역의 수산자원인 김 가공 업체들을 규모화 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체 사업군을 형성하고 둘째, 김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화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며 셋째, 김 특화단지의 6차산업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체경제인 사회적경제가 융복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8개의 김가공 업체 대표들이 모여 ‘서천김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각각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천김가공특화단지는 사회적기업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공동체 사업단지로 일반경제의 가치인 영리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특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천김가공특화단지 내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의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공동체적 운영방식을 기초로 한 생산자 협동조합을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서천김을 소비하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천김 국제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브랜드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사회 협력사례: 구례 자연드림파크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ICOOP)이 전남 구례용방농공단지에 조성한 친환경유기식품 단지이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약 827억 원(보조 67, 민자 700, 군 60) 규모이며, 조성면적은 87,926㎡에 달한다. 2016년 말 현재 22개 기업과 공방, 지원센터가 입주하여 511명(지역 428명)의 고용창출과 1,307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고용자 수는 2014년 240명, 2015년 378명, 2016년 464명, 2016년 12월 5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개요>

-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일원
- ▶ 면적 : 지정면적 144천㎡, 투자면적 88천㎡
- ▶ 투자 및 고용 : 827억 원(보조 67, 민자 700, 군 60), 511명 고용(지역 428명)



<그림 14> 구례자연드림파크 전경

<아이쿱(ICOOP)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요>

▶ 현황

- 조 직 명 : iCOOP생협사업연합회
- 매 출 액 : 5,520억원('16.)
- 회원생협 : 78개소
- 조 합 원 : 25만명('16.), 자연드림 매장(193개소)
- 관 계 사 : 56개사(소비계열 31, 생산계열 18, 출자사 7)

▶ 주요지표

- 조합원수 : 238천명('15.) → 251천명('16.) 증 6%
- 매 출 액 : 5,256억원('15.) → 5,520억원('16.) 증 5%
- 매 장 수 : 180개('15.) → 193개('16.) 증 7%

▶ 그룹현황

소 비 계 열 (31)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아이쿱인증센터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아이쿱친환경급식(주) 우리농업지킴이상조회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주)쿠팡서비스, (주)쿠팡스토어 (주)쿠팡스토어 광주전남 (주)쿠팡로지스틱스 (주)아기쿱건축사사무소 (주)쿠팡에코하우징, (주)쿠팡엔지니어링 (주)클러스터지원그룹(CMG) (주)씨엘씨, (주)남도수산 등	생산 계열 (18)	(사)아이쿱생산자회 쿠팡축산(주) 쿠팡푸드시스템(주) 쿠팡베이커리(주) 순천우리밀제과(주) (주)아이쿱농산 (주)아이쿱청과 (주)에코푸드 (주)아이쿱라면 (주)쿠팡양곡, (주)건강한닭 (주)미토리, (주)수미김 (주)올곧은, (주)괴산에스이 등
		출자 회사 (7)	(주)맘씨, (주)순수, (주)애간장 (주)밀크쿠팡, (주)쿠팡양조 (주)쿠팡엔지니어링, (주)건강한채소

구례자연드림파크에는 22개의 기업, 공방, 지원센터가 입주해있다. 단지에는 아이쿱(ICOOP) 자회사 및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 영화관, 휴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영화관, 기숙사 등(146명), 물류센터(79명), 베이커리(51명) 분야로 나타났다.

〈표 40〉 구례자연드림파크 현황(2016. 12월)

(단위 : 억원, 명)

연번	회 사 명	투 자 금 액				고용	생 산 품	생 산 매출액 (‘16.)
		계	국비	지방	민자			
계	14개 기업 18개 공방, 지원센터	787 (847)	37 (67)	30 (60)	720	511	-	1,307
1	(주)쿵**	20			20	-	콩나물	
2	(주)**은	54	5	2	47	23	한과 등	28
3	(주)**양곡	20			20	2	RPC	81
4	미*	2			2	3	발아현미	4
5	(주)**양곡	60	30	30		2	쌀제분	12
6	(주)**시스템	66	11	3	52	26	전분제품	28
7	(주)**라면	46		3	43	14	라면	48
8	(주)**시스템	7			7	16	차류	58
9	(주)서비스	60			60	79	물류센터	550
10	(주)*도우	90			90	37	만두 등	109
11	*베이커리(주)	15			15	51	빵류	64
12	(주)아이쿵**	107	21	18	68	28	APC	46
13	(주)아이쿵**	39			39	28	김치	38
14	(주)아이쿵**	7			7	10	돈가스	23
15	(주)맘*	10			10	13	오리훈제	26
16	(주)아이쿵**	14			14	19	유정란	111
17	(주)아이쿵**	4			4	3	막걸리	2
18	(주)밀**	58			58	11	요거트	15
19	(주)쿵***	113		4	109	146	영화관 등	59
20	(주)쿵**	20			20	-	기숙사	
21	(주)쿵푸드**	17			17	-	기숙사	
22	(주)쿵**	18			18	-	휴센터	5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침체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 이외에 활성화 동력이 부족한 만큼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은 인구규모가 27,252명인 전라남도에서도 인구가 가장 작은 시군 중 하나이다. 구례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1%(8,250명)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이라 볼 수 있다. 구례군의 인구는 1965년 78,385명 이후로 2012년 27,077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조성된 이후 2014년 27,167명, 2016년 27,192, 2017년 27,252명으로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구례군의 인구증가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특징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제조시설 위주의 농공단지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체험 등 6차산업형 운영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견학, 생산품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어하우스, 영화관, 숙박시설도 동시에 운영하여 단지 내에서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산업시설로 인식받았던 농공단지에 연간 5만에서 16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아와 체험과 숙박, 그리고 영화관람까지 즐긴다는 것은 구례뿐만 아니라 한국 농공단지 모델 전반에 큰 함의를 주고 있다.

〈표 41〉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객 수

(단위 : 명)

구분	숙박	체험	견학	영화관	레스토랑	합계
2014년	-	5,530	14,592	32,724	-	52,846
2015년	4,532	21,314	32,947	52,845	49,226	160,864
2016년	2,634	13,450	15,933	22,398	25,167	79,582
총계	7,166	40,294	63,472	107,967	74,393	293,292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둘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511명)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2013년 이래로 지역농산물 15개 품목 148억 원 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고용과 원재료 구입을 통해 소득의 지역 순환을 추구하고 있다.

〈표 42〉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까지	‘14.	‘15.	‘16.	비 고
계(백만원)		2,532	3,468	4,777	4,050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소계	1,404	2,263	3,026	2,602	
	수박	70	44	90	76	문척수박영농조합
	밤	64	52	18	15	올림픽 등
	매실	34				구례매실영농조합
	단감	66	40	45	158	탐푸르트영농조합
	나물류	340	173	282	168	지리산구례공동체 등
	친환경쌀	30	331	306	221	환원순환농업영농조합
	한우	800	500	420		축협
	원유		731	680	565	초원목장
	배 추 등		392	1,185	1,399	농협연합사업단, 축협
가 공 식 품	소계	1,128	1,205	1,751	1,448	
	녹차	220	70	32	68	구례명차
	밀가루 등	260	40	422	162	우리밀영농조합, 들찬밀드림
	고추장	71	142	52	1	지장수식품
	콘스낵	50	123	100	56	도올바이오푸드영농조합
	생수	527	830	1,145	1,161	회 천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셋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역사회 밀착의 단지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7대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밀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여러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 사업, 이웃돕기 물품 지원, 공공의료 확대 지원(산부인과 개원), 문화행사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지역인재 육성 장학 사업으로 ‘씨앗 장학금 지원’(12~16), ‘용방 북중, 초등학교 지원’(12~16), ‘해외문화탐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사업으로 이웃돕기 물품 전달(12~16), 축제, 경로당 등 물품 지원(12~16), 체육행사 지원 등(14~16)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구례군 내에 부족한 산부인과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개원하였다. 2011년 폐쇄된 구례군 보건의료원에 영상진단기기와 의료장비를 갖추어 다시 개설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환자들까지 진료하고 있다. 이외 문화 행사, 다문화 가정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매년 락(Rock)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모국 방문 지원, 교양강좌 등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43〉 산부인과 진료 및 사업 내역

(단위 : 명)

구분	진료				보건사업				합계
	산과 (임신부)	부인과	자궁암 검진	기타	부인과 무료검진	임신부 무료검진	건강한 모자교실	모자보건 사업	
2015년	118	336	27	-	132	14	64	-	691
2016년(1~6월)	274	591	75	8	-	26	-	-	974

자료 : 구례자연드림파크 내부자료

이처럼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혁신적인 도전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었던 구례군의 인구가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¹⁹⁾되었으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객 유입은 36만 4천명으로 263억 원의 방문수입을 달성하였다. 또한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31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141명에 달한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그동안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농공단지의 경쟁력 저하, 지역사회와의 괴리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도전이 성공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 27,115(13.) → 27,177(14.) → 27,308(15.) → 27,412명(16.)

제4장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및 입주수요 검토

1. 활용가능 농공단지 검토

1) 분석 방법

2016년 현재 도내 조성되거나 조성예정 중인 농공단지는 총 92개이다. 이 중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를 파악하고자 단지별 특성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농공단지에 대한 정보가 분양률, 가동업체, 고용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시·군별 농공단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지내 휴·폐업 시설 또는 미분양 부지의 존재, 입주기업간 업종 관련성, 협의 채널의 존재, 지역자원과 연계가능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은 시군별 농공단지 주무부서²⁰⁾이며, 해당 시군에서 농공단지의 특성과 현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군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와 협력하여 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내용은 농공단지 기본현황, 입주기업 현황, 농공단지 특성,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본 현황은 기초적인 단지의 위치, 면적, 분양률, 조성기간, 시행 방법 등이며, 입주기업 현황은 기업 수, 입주 업종, 특화분야, 단지의 핵심기업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농공단지 특성은 기본적인 여건 파악을 위해 필요한 휴·폐업시설 현황, 미분양 부지 현황, 농공단지 환경, 농공단지 운영 주체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외 기타 사항으로 시·군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월 6일에서 2월 28일까지,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20) 조사대상은 천안시 기업지원과, 공주시 기업경제과, 보령시 지역경제과, 아산시 기업경제과, 서산시 기업지원과,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계룡시 지역경제과, 당진시 기업지원과, 금산군 지역경제과, 부여군 경제교통과, 서천군 투자유치과, 청양군 지역경제과, 홍성군 경제과, 예산군 경제과, 태안군 경제진흥과임

〈표 44〉 활용가능 농공단지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단지 기본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면적(m²) ○ 분양가(천원/m²) ○ 조성기간 ○ 시행방법
입주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수 ○ 입주 업종 ○ 특화 분야 ○ 대표 기업 특성
농공단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부지 현황 ○ 농공단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접근성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협의기구 특성
기타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의견

2) 분석 결과

조사 결과 12개 시군의 24개 농공단지에서 미분양 부지 및 휴·폐업 시설이 존재하거나 신규 조성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조성 농공단지의 미분양 부지는 총 7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최소 6,454m²에서 최대 124,081m²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 제 1농공단지는 미분양 부지가 124,081m²에 달해 전체 미분양 농공단지 중에서 가장 큰 반면, 공주시 보물농공단지는 6,454m²로 가장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산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의 경우 지역 특산물인 인삼에 특화된 농공단지로 50,439m²의 단지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으며, 규모는 3,140m² 정도의 소형 시설에서 91,128m²의 대형 시설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시설은 홍성군(3개소)과 서천군(3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홍성군 은하농공단지는 그 규모가 91,128m²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성 예정이거나 조성 중인 단지로는 5개소가 있으며, 이중 식품특화 농공단지로 조성 예정인 곳은 노성특화농공단지,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정산2 농공단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당진 옥호식품농공단지의 경우 사업주체인 당진 식품특화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식품산업 기반의 농공단지조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산2 농공단지의 경우 청양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경제 기반의 로컬푸드 농공단지로 조성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활용가능 농공단지 조사 결과

시군	단지명	면적 (㎡)	분양가 (천원/㎡)	특화업종	휴·폐업시설 또는 미분양 부직 면적(㎡)	비고
공주(B)	월미2농공단지	56,174	215	식료품, 화학제품 , 전자부품	13,364	미분양
	보물농공단지	113,005	163	비금속, 식료품, 화학제품	6,454	미분양
	장기농공단지	87,000	87	기계, 금속 등	10,990	휴업(1개소)
보령(C)	청라농공단지	128,853	-	-	-	신규(승인전)
아산(D)	신인농공단지	64,067	15	-	26,535	휴업(1개소)
논산(F)	강경농공단지	130,640	61	식품	46,508	미분양
	노성특화농공단지	160,091	미정	식품	-	조성중
계룡(G)	계룡제1농공단지	127,719	326	-	124,081	미분양
당진(H)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213,342	180	식품	-	2018년 신규신청
금산(I)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114,686.7	194	식품(인삼)	50,439.9	가동:2, 착수:1 미착수:2
부여(J)	은 산	123,326	-	-	14,934	휴업(2개소)
	은산2	226,678	69	-	22,350	미분양
	홍 산	131,774	-	-	3,140	휴업(1개소)
서천(K)	장항원수농공단지	300,628	25	-	62,534	휴업(1개소)
	장항원수제2농공단지	150,670	46	-	8,484	휴업(2개소)
	중천농공단지	251,227	30	-	9,146	휴업(1개소)
	중천2농공단지	197,478	90	-	52,160	미분양
	서면농공단지 (서천김가공특화단지)	78,541	73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9,128	미분양
청양(L)	정산2 농공단지	191,260	128	식료품	-	신규(승인전)
홍성(M)	광천김특화농공	56,772	112	김	-	-
	구항농공	166,983	19	-	7,355	휴업(2개소)
	은하농공	95,254	51	-	91,128	휴업(1개소)
	결성전문농공	141,065	39	-	3,089	휴업(1개소)
	갈산2전문농공	131,964	-	-	-	조성중
예산(N)	관작전문 농공단지	144,192	39		9,051	휴업(1개소)

상기의 분석을 통해 미분양 부지 중 사회적경제와 연계가 가능한 농공단지를 검토한 결과, 타 농공단지에 비해 비교적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식품제조 특화농공단지가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서천김가공특화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서천김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간 생산-가공-체험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규 조성 예정 중인 당진 옥호 식품농공단지의 경우 사업주체인 당진 사업협동조합에서 지역기반의 6차산업형(생산-가공-체험) 농공단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고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 정산2농공단지의 경우 청양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주변의 알프스체험마을 등 다양한 자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경제 연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미분양 부지 현황

시 군	단지명	특화분야	미분양 부지	접근성	분양가 (㎡)	주요 특성
논 산	강경 농공단지	식품제조업	46,508㎡	국도 연결 강경역	61천원	유부, 곤약
계 룡	계룡제1농공단지	음료제조업	124,801㎡	호남고속도로 연접	326천원	친환경 도시
당 진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식품제조업	213,342㎡	고속도로	180천원	당진식품특화 사업협동조합
금 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인삼약초 음식료품	50,439㎡	금산IC	194천원	인삼 특화
서 천	서천김가공 특화단지	식품제조업	19,128㎡	춘장대IC	73천원	김 특화
청 양	정산2농공단지	식품제조업	191,260㎡	청양IC	128천원	친환경

휴·폐업 시설 활용이 가능한 단지를 살펴보면, 공주 장기농공단지, 서천 종천 농공단지 등이 있으나 전기전자,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체가 입지해 있어 구례자연드림파크와 같은 6차산업형 기반의 사회적경제 단지로는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폐업시설을 지역내 사회적경제 및 청년 창업 등 다양한 기업을 창업·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주 장기농공단지의 경우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농공단지 내 휴·폐업시설 현황

시 군	단지명	특화분야	건물 면적	소유주	접근성	주요특성
공 주	장기농공단지	음식료업, 섬유, 화학 등	10,990	한독유평택	국도 36호선, 국도 40호선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서 천	장항원수농공 단지	자동차 부품, 동물용의약품 등	34,510㎡	동일방직	서천IC 15분 거리	대형 시설로 대체입주 어려움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매각 추진
서 천	장항원수제2농 공단지	동불용사료, 금속제조업 등	2,002㎡ 1,074㎡	성현기업사 형제산업	서천IC 15분 거리	형제산업 경매 진행 중
서 천	종천농공단지	합성수지, 기계장비 등	9,146㎡	한국 기전공업	서천IC 5분	대체입주 고려
홍 성	구항농공단지	전기전자, 석유화학	7,355㎡ (2개소)		홍성IC 15분	협의회에서 활용 계획 중
홍 성	은하농공단지	전기전자, 조립 금속 등	91,128㎡ (1개소)		광천IC 5분	대규모 시설
홍 성	결성전문 농공단지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	3,089㎡	우림산업	홍성IC 5분	자동차 제조업 특화

위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신규조성 단지의 경우에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사회적경제와 6차 산업형 모델이 융복합한 단지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상 단지는 당진시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와 청양군 정산2 농공단지를 고려할 수 있다.

미분양 단지는 특화농공단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와 서천김가공특화단지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서천김가공특화단지는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서천김협동조합'을 설립 중에 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 시설의 경우 공주의 장기농공단지가 우선적으로 고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 시설의 활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유주와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활용가능 농공단지 종합

구분	시군	단지명	면적 (㎡)	분양가 (천원/㎡)	특화업종	유휴부지/ 시설(㎡)	연계방법
신규 단지	당진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 농공단지	213,342	180	식품	-	식품제조업 기반의 농공단지인 만큼 초기 조성단계에서부터 6차산업형 모델 도입과 사회적경제 조직화 추진
	청양	정산2 농공단지	191,260	128	식료품	-	청양군의 청정 환경에 부합하는 업종 유치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화 추진
미분양 단지	금산	인삼약초특화농 공단지	114,686.7	194	식품(인삼)	50,439.9	인삼 특화산업의 협동조합화 및 지역 사회적경제와 연계
	서천	서면농공단지 (서천김가공특화 단지)	78,541	73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처리업	19,128	입주기업 협동조합화
휴·폐업 시설	공주	장기농공단지	87,000	87	기계, 금속 등	10,990	휴·폐업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 창업보육 시설로 활용

2. 입주수요 분석

1) 분석 방법

농공단지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농공단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간 및 기업이전 수요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간수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실수요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관련 영역인 6차산업화 인증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말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134개, 마을기업 109개, 협동조합 38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6차산업화 인증기업은 94개가 운영 중에 있다.

조사내용은 크게 기본 현황, 농업·제조업체 대상 수요조사, 서비스업체 대상 수요조사로 나뉜다. 기본현황은 산업분류, 지역, 매출액 규모, 조직유형, 기업성장단계 등 기업의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농업·제조업체 대상 수요조사는 공장이전 및 확장 계획유무, 이전·확장시 고려하는 지역적 범위, 이전·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 농공단지 입주희망 여부, 요구 면적, 적정한 분양가격대, 최대 투자가능 금액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업체 대상 수요조사는 사무공간 또는 판매장 이전·확장계획 유무, 이전·확장시 고려하는 지역적 범위, 이전·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 농공단지 입주희망 여부, 요구 면적 규모, 적정 분양가격대, 적정 임대료, 최대 투자금액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시군별 사회적경제 및 6차산업화 인증기업 담당 부서에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이메일 조사 등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1차적으로 시군 담당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응답수의 부족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2차례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분석방법은 지역별 입주수요, 이전·확장 시 고려가능한 지역적 범위, 이전·확장 시 조성 방식 등을 중심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49>와 같다.

〈표 49〉 수요조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조사내용
기업일반 특성	기업명
	산업분류
	기업주소
	설립년도
	응답자 성별
	응답자 직급
	매출액 규모
	조직유형
	기업 성장단계
제조업체 수요조사	현 공장의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이전 가능한 지역적 범위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입주의사 여부
	있다면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
	없다면 필요한 조건 여부
	입주시 희망 부지 면적
	적정 분양가격 수준
	기업의 최대 투자 금액
서비스업체 수요조사	현 사무공간 또는 판매장의 이전이나 확장 계획 여부
	이전 가능한 지역적 범위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입주의사 여부
	있다면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
	없다면 필요한 조건 여부
	입주시 희망 부지 면적
	적정 분양가격 수준
	적정 임대료 수준
	기업의 최대 투자 금액

두차례의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및 6차산업화 인증기업 중 96개 기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27개, 마을기업 19개, 협동조합 8개, 자활기업 3개로 총 64개 기업이 응답했고, 6차산업화 인증기업은 32개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예산군 13개, 공주시 8개, 서산시·서천군·청양군·태안군 7개, 논산시·당진시·보령시 6개의 순으로 응답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유형별 설문조사 응답기업

(단위 : 개)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6차산업화 기업	기타	합계
계룡시	1	2	1	1			5
공주시	2		1		5		8
금산군					2	1	3
논산시	2		2		1	1	6
당진시	6						6
보령시	2		3			1	6
부여군				1	4		5
서산시	1		2		4		7
서천군	2	2			3		7
아산시	4	2	1			1	8
예산군	1		1		10	1	13
천안시	2	1		1			4
청양군	1	1	2		2	1	7
태안군	1		5		1		7
홍성군	2		1			1	4
총합계	27	8	19	3	32	7	9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2.4%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표자가 53.8%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26.3%,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3.2%의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은 6차산업화인증기업 33.3%, 사회적기업 28.1%, 마을기업 1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계는 ‘안정적 서비스상품 시장확보 단계’ 35.2%, ‘마케팅 단계, 서비스상품 시장진입단계’ 30.7%로 시장진입 및 안정단계에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비율(%)
성별	남자	62.4
	여자	37.6
직위	대표	53.8
	이사	9.7
	실무자	29.0
	기타	7.5
매출액 규모	5천만원 미만	14.7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8.9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26.3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3.2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0.5
	30억원 이상	6.3
조직 유형	사회적기업	28.1
	협동조합	8.3
	마을기업	19.8
	자활기업	3.1
	6차산업화기업	33.3
	기타	7.3
기업 성장 단계	창업 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	10.2
	마케팅 단계, 서비스상품 시장진입단계	30.7
	안정적 서비스상품 시장확보 단계	35.2
	서비스상품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 개발 단계	23.9

2) 입주수요 분석 결과

사회적경제기업(6차산업화 인증기업 포함) 중 공장이나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총 44개로 농업·제조 관련 기업 26개, 서비스업 관련 기업 18개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예산군 8개, 아산시 7개, 서산시 6개, 계룡시 6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 이전 및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단위 : 개)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계룡시	3	3	6
공주시		1	1
금산군	1		1
논산시	2		2
당진시		1	1
보령시		1	1
부여군			0
서산시	4	2	6
서천군	4	1	5
아산시	3	4	7
예산군	7	1	8
천안시		1	1
청양군	1	2	3
태안군			0
홍성군	1	1	2
총합계	26	18	44

사회적경제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의 이전·확장을 계획하는 주요 이유로는 ‘현재 공장부지면적이 협소’(34.1%),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29.5%),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 간의 집적 필요’(20.5%)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 간의 집적 필요'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당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비용이나 여건이 마련된다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가능성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현재의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36.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의 영역 확장 필요'(36.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이러한 기업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53〉 이전 및 확장 이유

(단위 : 개)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현재의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	36.4	27.3	34.1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기업 이전	6.1	9.1	6.8
물류, 자재 확보 등으로 위치 이전 필요	3.0	0.0	2.3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	27.3	36.4	29.5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간의 집적 필요	18.2	27.3	20.5
기타	9.1	0.0	6.8
총합계	100.0	100.0	100.0

사회적경제기업이 공장이나 사무실의 이전·확장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읍면동 이내'(42.3%), 해당 시군 이내(38.5%)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상 최대 이전·확장 가능한 지역적 범위는 시군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26.7%)까지 이전·확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기반이 중요한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해당 읍면동 이내' 및 '해당 시군 이내'가 대부분을 차지(8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이전 및 확장 가능한 지역적 범위

(단위 : 개)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해당 읍면동 이내	42.9	40.0	42.3
해당 시군 이내	42.9	20.0	38.5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	7.9	26.7	11.5
충청남도 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음	6.3	13.3	7.7
총합계	100.0	100.0	100.0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방식은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26.7%),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22.1%),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20.9%) 등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제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30.4%), ‘기존 휴·폐업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입주 가능’ (21.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33.3%),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2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제조업에 비해 시설 조성 여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55〉 이전 및 확장 방식

(단위 : 개)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30.4	20.0	26.7
기존 휴·폐업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입주 가능	21.4	16.7	19.8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17.9	26.7	20.9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	16.1	33.3	22.1
기타	14.3	3.3	10.5
총합계	100.0	100.0	100.0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입주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개의 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혔다. 업종별로는 농업·제조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27개, 서비스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14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예산군 7개, 아산시 6개, 서산시 6개, 계룡시 5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시 입주 수요

(단위 : 개)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계룡시	3	2	5
공주시	1	1	2
금산군			0
논산시	2		2
당진시	2		2
보령시			0
부여군			0
서산시	4	2	6
서천군	2		2
아산시	3	3	6
예산군	6	1	7
천안시		1	1
청양군	1	2	3
태안군	2	1	3
홍성군	1	1	2
총합계	27	14	41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으로는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36.1%)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26.2%)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18.0%)도 중요한 요건으로 나타났다.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과 서비스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20.5%),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공동물류 등)’(15.4%)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중요시하는 요건

(단위 : 개)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	33.3	40.9	36.1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	25.6	27.3	26.2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공동물류 등)	15.4	9.1	13.1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	20.5	13.6	18.0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처	5.1	4.5	4.9
기타	0.0	4.5	1.6
총합계	100.0	100.0	100.0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의 입주에 불참 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로 ‘저렴한 분양가’(49.3%)와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준의 수요처 지원’(31.3%)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참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사회적경제적 가치보다는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8〉 불참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농공단지 조성시 바라는 요건

(단위 : 개)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저렴한 분양가(주변 시세의 10% 정도)	45.5	56.5	49.3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준의 수요처	31.8	30.4	31.3
저리로 투자비용 대출	6.8	8.7	7.5
농공단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들이 기획 참여	6.8	4.3	6.0
기타	9.1	0.0	6.0
총합계	100.0	100.0	100.0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최소 부지 규모는 ‘100평 이상~500평 미만’(37.0%), ‘100평 미만’(28.4%)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 ‘100평 이상~500평 미만’(34.6%)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1000평 이상(28.8%)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500평 미만(82.8%)의 소규모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입주시 최소 부지규모

(단위 : 평)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100평 미만	21.2	41.4	28.4
100평 이상~500평 미만	34.6	41.4	37.0
500평 이상~1000평 미만	15.4	0.0	9.9
1000평 이상	28.8	17.2	24.7
총합계	100.0	100.0	100.0

입주희망 기업들이 이전·확장을 위해 최대 투자가능한 금액은 '1억원~5억원 미만'(27.5%), '10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6%)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제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억원 이상'(21.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1억원~5억원 미만'(31.8%)이 높았다.

〈표 60〉 최대 투자 가능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농업/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1000만원 미만	8.5	9.1	8.7
10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3.4	27.3	24.6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1.3	22.7	21.7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25.5	31.8	27.5
5억원 이상	21.3	9.1	17.4
총합계	100.0	100.0	100.0

3) 시사점

상기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경제기업(6차산업화 인증기업 포함) 중 상당수의 기업에서 공장이나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이전·확장 이유는 ‘현재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34.1%),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29.5%),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기업 간의 집적 필요’(20.5%) 등 신규설비를 확충하거나 제조업으로 사업영역 확대, 유사 기업간 집적화 필요 등으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업여건을 고려한 이전·확장 방식은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26.7%), ‘기존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22.1%),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 입주 가능’(20.9%)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조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여건이 기업마다 매우 상이한 만큼 다양한 형태로 공간조성 모델을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 조성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36.1%)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26.2%) 등이 높게 나타난 만큼 조성단계에서부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을 희망하는 만큼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조성 시 공간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 부지 규모는 ‘100평 이상~500평 미만’(37.0%), ‘100평 미만’(28.4%)으로 대부분 소규모 부지 또는 공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최대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 ‘1억원~5억원 미만’(27.5%), ‘1000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동 공간 조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

제5장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1)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정책의 배경과 한계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조성정책의 기원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1960년대 절대빈곤의 시기, 농업부문의 유희노동력과 잠재실업을 비농업 부문에 흡수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즉 사회간접자본이 양호한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빈곤을 극복하려 했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낳았고, 농촌은 계속되는 노동력의 유출로 노임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농촌경제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어렵게 하여, 결국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낳았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정책이 농촌공업화 정책이었다(최경환, 2001).

①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

이러한 목적하에 추진된 최초의 사업은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 이었다. 농어촌의 부존 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추진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에서 과거부터 해 왔던 민속공예품, 섬유직물, 식품가공 등 생산을 마을단위에서 10호 이상 공동참여 하는 사업이었다. 사업은 농촌지역의 제조업 체계 추진 및 농외소득 기여 등 평가되었지만, 부업제품이 전업형태로 변화, 대상 품목 다양화로 한계노출을 드러냈다.

②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새마을공장 건설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공업화와 공장의 지방분산의 개념 도입하여 1개 읍면 당 1개 공장 건설 원칙으로 추진되었다. 새마을 공장 건설사업은 ①농외취업, ②수출증대, ③주민소득증대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으로 분산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공장을 입지하여 발생하는 고비용문제, 판로확보 한계 등을 노출하게 되었다.

③ 농공지구(단지)개발사업

새마을공장 육성사업 부진에 따라 그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새마을공장사업의 문제점인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공장을 입지하여 발생하는 고비용과 판로확보 한계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 엄격히 하고, 업종제한 철폐하여 대도시지역의 기업이 입지하도록 완화했다. 특히 소규모공단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와 집적이익 및 계열화의 유리한 점을 추구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 추진의 역사적 변천과 함께, 농공단지는 농촌의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 국가경제의 일정기여를 했다. 특히 농촌개발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농촌개발방식과 다르게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균형정책수단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농공단지의 ①입지 및 노후화, ②운영, ③법적·제도적 문제점, ④입주기업의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배경화·김태환, 2005).

① 입지 및 노후화는 농공단지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근접하지 못하고, 면적이 소규모이며, 시설노후화는 물론 상주 인력 및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다. ② 운영적인 면에서 농공단지의 조성이 물리적 기반 위주이며, 공급자 중심의 개발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 등 존재하는데, 특히 조성추진과 사후관리에서 역할분담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법적·제도적 문제점은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불일치로 대체입주와 경매진행 등이 어렵고 장기 휴·폐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 ④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이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입주가 많지 않고, 영세한 소기업 창업형태가 많다.

(2) 충남 농공단지 한계와 사회적경제 연계의 필요

충남지역 농공단지는 그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낮은 분양가로 소규모 기업의 주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32,072명(2017년 현재)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여성고용비율이 높아 여성친화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남지역의 농공단지는 고용 및 농외소득 창출 등 경제적인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인프라의 노후화(공공용지 및 지원시설 등) 및 인력확보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노정되고 있으며, 농공단지의 고용자 중 농가 비중이 15%로 농외소득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의 주요업종이 석유화학(18%), 기계(17%), 전기전자(13%)등이 입주기업의 절반정도로, 농공단지의 목적인 지역(특히 농촌)의 산업연계 및 자원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와 충남의 농공단지의 현실은 ①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② 입주기업간 연계협력의 미흡, ③ 지역사회와 연계부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농공단지의 경쟁력확보와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충청남도 역시 2014년 ‘농공단지 종합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노후된 인프라시설의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동의 개선 효과를 얻었으나, 충청남도의 농공단지의 목적인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사회 기여의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농공단지의 전략적 재설계, 즉 충청남도의 농공단지의 모델(상)을 정립할 필요가 생긴다.

앞선 기술을 통해 농공단지의 제(諸)문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과 사례를 제시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연계한 농공단지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연계한 농공단지 활성화 모델 구축(이하,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농공단지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가공·생산, 체험·관광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이 참여를 통해 조성한다. ② 농공단지는 입주기업간 상호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의 모델로 운영한다.

(3)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추진전략 및 원칙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기본원리는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추진하되 아래와 같은 4대 원칙을 추구한다.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사회적경제 연계 농공단지)

- **기본 구상** : 지역농산물과 가공, 체험 및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공단지임
- **4대 원칙**
 - ① 농공단지는 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
 - ② 농공단지 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극장, 공방, 숙박시설, 레스토랑,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
 -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
 - ④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농공단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밀착된 단지로 조성**

추진전략은 지역적 특성과 농공단지의 여건 등 제 특성을 고려하여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며, ① 신규단지 조성방안과 ② 기존단지 활용방안으로 제안한다. ① 신규단지 조성방안은 두가지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규모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유치 방안을 들 수 있다.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유치를 방안 검토한다. 두 번째는 특화농공단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 방안 검토한다. ② 기존단지 활용방안은 휴·폐업시설 활용한 조성방안과 컨테이너 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한다.

비 전

사회적경제 기반의 농공단지 재생 및 활성화 모델 구축

목 표

- ◆ 신규 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조성
- ◆ 기존 농공단지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연계모델 구축

4대 기본 원리

호혜와 연대 기반 운영

생산-제조-서비스 융복합

집적의 경제 극대화

지역사회 기반

전략 목표

[Track 1]
신규 단지 조성
방안

[Track 2]
기존 단지 활용
방안

추진 전략

◎ 생협 유치를 통한 사회적경제 농공단지 조성

◎ 로컬푸드 특화농공단지 조성

◎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협업단지 조성

◎ 농공단지 연계 컨테이너 단지 조성

2. 세부 추진 전략

1) 생협²¹⁾ 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성 방안

(1) 추진배경 및 방향

①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갖는 의미

전남 구례군 용방농공단지에 조성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ICOOP)의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새로운 농공단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으로 제안되어 온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발전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구례자연파크는 ① 농공단지 = 산업시설이라는 틀을 깨고 생산-가공-체험 등 6차산업형 운영모델을 구축했다. ②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농산물의 구입을 통해 농공단지의 목적인 농가소득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③ 다양한 지역사회기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밀착된 농공단지를 구축했다. 특히 2011년 폐쇄된 지역의료기관을 개원하여 지역의료복지에 기여하였다. 이는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원칙(지역사회 기여의무)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활동을 통해 구례군의 인구증가, 36만명이 넘는 방문객, 3천억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를 만들어 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신규단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를 통한 조성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생협의 전국적인 소비시장과 결합한 유기농 친환경제품 가공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유기농 친환경클러스터) 구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경우, 아이쿱생협은 생산집적화 및 물류허브 구축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조합원대상 서비스제공 및 조합원모집 등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진하여 비용절감 및 효과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성으로 인해 국내의 생협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준말임

② 생협의 현황과 한계

국내 4대 생협은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으로, 현재 아이쿱과 한살림이 조합원 및 매출액(공급액)기준 가장 규모가 크다. 두레생협과 행복중심생협의 경우 한살림과 아이쿱의 규모(조합원,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1〉 주요 생협 현황

구분	조합생협	매장	조합원	매출액	비고
한살림	전국 22	200개	60만명	3,624억원	2015년 기준
아이쿱	전국 90	193개	25만명	5,500억원	2016년 기준

생협의 주요한 시장은 수도권으로, 물류체계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산지에서 오는 상품을 집적처리하는 물류집적화는 생협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물류집적화에 있어 충남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 물류가 위치적으로 최적이나, 투자비용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인 충남이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생협관계자 인터뷰). 또한 충남은 물류집적화만이 아닌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생협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중심의 두레생협 및 행복중심생협의 경우 충청권역 새로운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협의 한계는 투자여력에 있다. 생협출자는 일반적으로 자본 아닌 부채로 인식되어 시중은행이 대출 꺼리는 상황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조성과 관련되어 아이쿱은 조합원차입을 통한 자본투자를 하였다. 조합원차입은 다른 생협이 시도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차입은 협동조합의 원리·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협간 규모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여 각 생협의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③ 생협의 수요 맞춤형 전략제시 필요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농공단지가 ① 환경친화적인 가공단지 개발, ②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서비스(의료, 문화) 제공, ③ 영세한 지역기업 및 농산물의 판로개척 등 농공단지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단 이는 지역사회 기여만이 아닌 협동조합기업으로서 아이쿱에게 구례자연드림파크는 ① 생산집적화 및 물류허브 구축, ② 조합원 대상 서비스제공, ③ 조합원모집 등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진하여 비용절감 및 효과적 마케팅 등 높은 경영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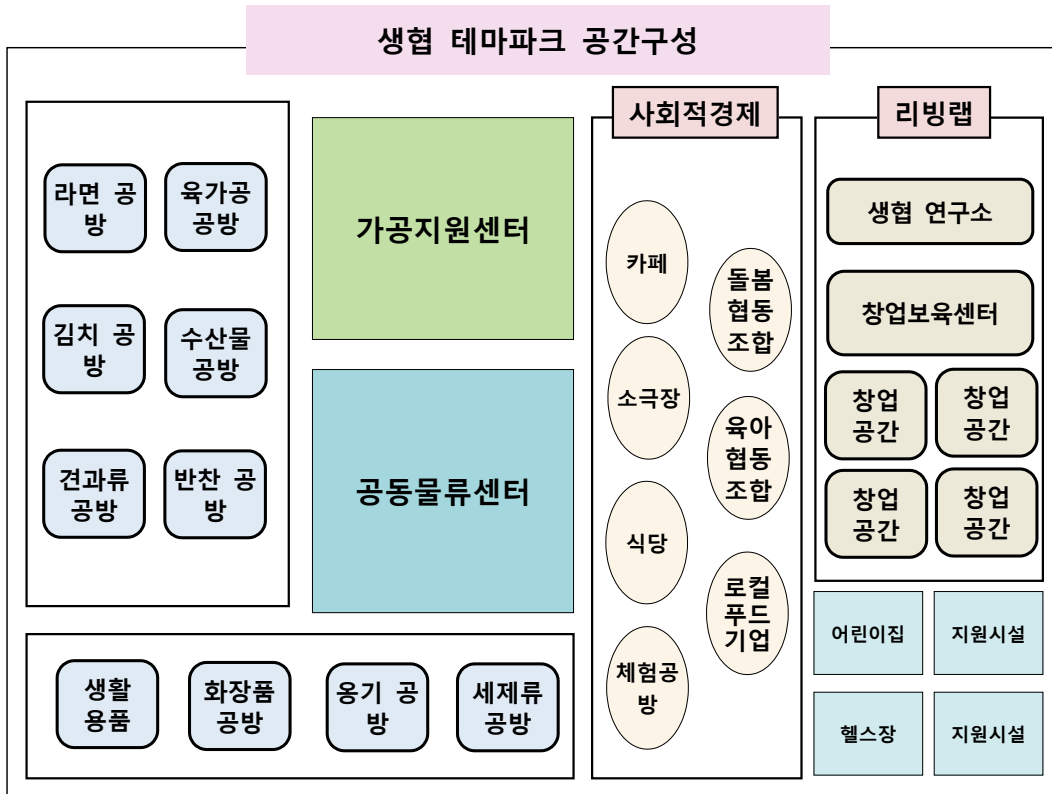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생협유치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필요만이 아닌 생협이라는 기업의 경영적 필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 농공단지 입지는 생협 생산집적화 및 물류허브로서 적절한가, 또는 생협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2) 세부 추진방안

현재 활동하고 있는 4대 생협은 생협의 매출 및 조합원 등 규모 및 전략에 따라 농공단지 투자의향 및 여력 등 차이가 분명하다. 따라서 아이쿱 및 한살림 생협은 ① 단일생협 농공단지 유치전략으로, 2곳의 생협의 두레생협 등 생협의 경우 ②생협 컨소시엄 유치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① 방안 1: 단일생협 농공단지 유치

한살림과 아이쿱 2개 대형생협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하며, 각 생협의 요청에 따라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입주규모, 지원시설 등 설계하여 추진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내용에 따라 공동생산 및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개별 생산 공장 등 입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생협의 생산지(공장) 유치에 있어서 지역에 배태된 생산지의 경우 지역적 이전이 어려운 만큼 비교적 지역적으로 배태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전을 유도한다.



② 방안 2: 생협 컨소시엄 농공단지 유치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생협의 경우, 생협간 연계협력, 즉 컨소시엄으로 농공단지 조성하도록 지원·추진한다. 생협은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조직(기업)으로, 생협간 연계협력은 일반기업간 연계협력보다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레생협 및 지역생협 등을 대상으로 6차산업형 농공단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참가의사 타진 후, 참가의사가 있는 생협의 컨소시엄 구성한다.

최근 두레생협, 행복중심 생협의 경우 공동 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충남에 유치하여 관련 기업을 집적시키는 방안 고민 필요하다. 유치대상 기업으로 여러 생협에 납품을 하는 생산지(공장)를 집적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62〉 생협 공통 납품 제조업체 현황

품목	회사명	납품생협명	비고
라면	○○식품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과자 빵	○○밀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산○○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냉동피자	○○밀	두레, 행복중심	2생협
플레이크	○○바이오푸드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가루식품	○○식품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떡	○○풀무	두레, 행복중심	2생협
두부	○○알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식품	두레, 행복중심	2생협
닭,오리, 육가공	○○생활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드레싱, 소스	○○정성	두레, 행복중심	2생협
	○○식품	두레, 행복중심	2생협
밀반찬	○○예찬	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3생협

③ 생협유치형 농공단지 추진시의 고려사항

생협유치형 농공단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집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협동’이라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다.
 - 생협 취급물품 중 납품처가 같은 물품의 생산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추진
 - 생산제품에 대해 새로운 브랜드(예 ‘충남×생협’제품)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발굴

- 자본투자는 신탁 및 새마을금고 등 협의를 추진한다. 신탁 등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사회적경제와 연대협력 수요 및 요구가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 충남도 등과 중재를 통한 매칭투자 등을 고려필요
 -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
-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시사점중 지역사회기여는 가장 크게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어필하는 요소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추진한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예를 들어 영화관운영, 카페운영) 및 단지 내 지원서비스를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이 담당
 - 이러한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단지내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충남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농공단지는 제조업체의 집적화모델에서 벗어나 공동개발 및 사회혁신의 거점모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리빙랩(Living Lab)²²⁾을 추진한다.
 - 리빙랩과 같은 공동개발공간에서 생협관계자·충남사회적경제기업가 등 포함, 지역의 다양한 계층 및 니즈가 반영
 - 이는 시장의 필요에 기반한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필요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하여 사회혁신의 거점공간으로 확장
 - 최근 국민생활연구 및 사회기술연구 등 도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 모델 구축가능

22)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윌리엄 미첼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과학기술이 과학자의 능력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공급자중심의 결과물로, 갈등, 안전, 환경 등 지역과 사회문제와 유리된 것에 대해,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리빙랩(Living Lab)을 주장한다. 리빙랩은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주체가 되어 과학기술을 실험하고 탐색하는 장을 말한다. 유럽 등 54개국 766개의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다.

(3) 생협유치형 농공단지 개발 방식

일반적으로 농공단지 개발은 3가지의 개발방식, 즉 ① 공영개발방식, ② 민간개발방식, ③ 합동개발방식을 상정한다. ① 공영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공기업 등이 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으로, 장점으로 지자체 등의 공신력 담보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이윤동기 부재로 인한 비효율 증대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외부 및 내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대응 능력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② 민간개발방식은 민간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사업추진 방식으로, 계획입안에서부터 투자비용 전액 자체조달하며, 제반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민간경영 노하우 도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의 경우, 추진 자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수익이 가능한 부문개발은 용이하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개발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개발이익이 민간개발자에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③ 합동개발방식은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제3섹터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개발방식은 공공과 민간의 장점활용이 가능하다. 즉 공공부문이 가지는 공신력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민간의 자금과경영노하우, 전문인력 등 활용할 수 있어 ①, ② 방식의 장점을 채택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할분담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주체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책임성의 모호성이 가장 큰 단점이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상충되는 의사결정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발방식 중 고려될 방식은 ② 민간개발방식으로, 생협단독 및 생협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협의 필요에 맞춘 개발을 통해 민간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민간개발방식의 단점인 종합적인 개발추진 및 개발이익의 독점 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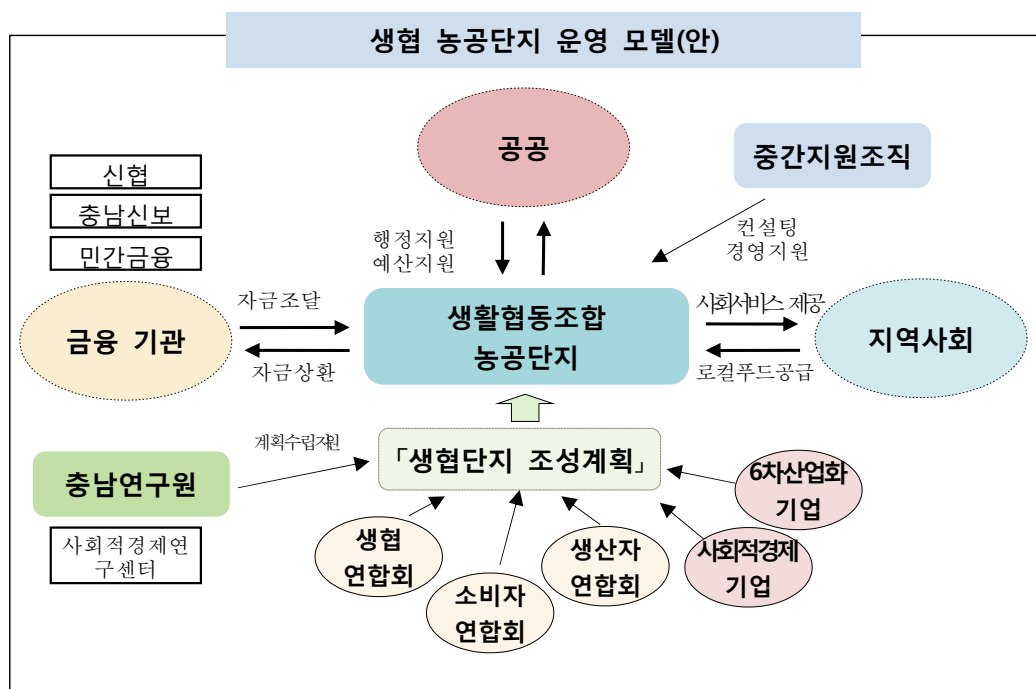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확인한 것처럼, 협동조합의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성방식은 충청남도 및 시군 등 지자체와 함께 TF 및 마스터플랜 작성시 합의하여, 민간역량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조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4) 생협유치형 농공단지 운영 체계(안)

단지는 조성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 주요한 생협연합회 및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기에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적용된 조성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주체는 생협연합회 및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00생협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칭)'로 운영한다.

운영은 운영협의회 등 운영주체 주도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단지를 운영하도록 한다.



조성 계획은 공간배치, 여가시설 등 실제로 사용하는 입주기업을 주도로 수립하게 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행정 수요 등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인 운영규약 등은 생협연합회 및 입주기업간 내부 합의 절차를 거쳐 규정하도록 한다.

단지는 협동조합의 원리인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의 기여를 염두해 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역사회 주체(지역주민, 협의기구 등)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사회 주체로부터 발굴·제안된 사업들을 농공단지의 주요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충청남도 및 시군 등은 농공단지의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생협 및 단지 운영협의회 등은 정책제안 및 공익사업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농공단지의 구성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공공, 민간금융, 사회투자 등 다양한 사회투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생협 및 생협 컨소시엄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5) 농공단지 구축을 위한 추진절차

농공단지 구축을 위한 절차는 충청남도와 생협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한다. 입주기업은 생협의 자회사 또는 납품업체 등 생협관련 입주기업, 인근 6차산업,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절차가 끝나면 선정업체를 중심으로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하고,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 수립한다. 이 후 단지 조성을 진행한다. 이하는 농공단지 구축절차의 흐름도이다.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생협(단일/컨소시엄) 업무협약	투자입지과 생협
추진단 구성	·도/시군 공무원, 생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 구성	투자입지과 생협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생협파크 조성계획 수립	투자입지과 생협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입주기업 선정	·생협 입주기업 ·인근 지역 사회적경제, 6차산업화, 청년 창업 대상 기업	투자입지과 해당시군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	·생협 입주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구성된 운영 협의체 구축	생협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관계생협 투자입지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단지 조성	·착공 ·기업 입주	투자입지과 생협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생협 투자입지과

(6) 사업 추진체계

단지 조성은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가 총괄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주체와 긴밀한 협업 추진한다. 유관 부서인 사회적경제팀과 농촌산업팀은 각 관리 대상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기존 시책의 단지 내 투입을 고려한다.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인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단지 조성 방안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6차산업화지원센터와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여 단지조성과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표 63〉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내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청 남도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독려 - 두레기업 참여 독려 -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군	해당시군(담당부서)	- 단지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충남 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민간	사업체	- 사업 실무 추진 - 입주기업 유치 - 운영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원서비스 제공
	입주기업	- 자본 투자, 운영규칙 수립

(7)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생협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성방안은 아이쿱생협의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농공단지의 지역사회연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 연구의 지향점인 새로운 농공단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유치 및 생협관련 생산공장의 대규모 이전 등 선결과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살림의 경우,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와 단지조성협약 전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자본유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을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본조달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자금조달 시스템 등을 제안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매칭투자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협단독 유치방식이 아닌 경우, 즉 컨소시엄 방식은 각 생협간의 이해관계 해소가 선결문제이다. 생협에 따라 필요시설과 불필요 시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의 해소 등을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의 원활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 당사자 이해를 기초로 한 단지조성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표 64〉 생협 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성 방안 요약

구분	(1안) 대형 생협 유치	(2안) 생협 컨소시엄 유치
대상 주체	· 한살림·아이쿱 생협 연합회	·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품앗이마을 사회 적협동조합
유치 시설	· 생산공방, 물류센터, 체험시설	· 물류센터
대상 지역	· 청양 정산2 특화농공단지 ·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 청양 정산2 특화농공단지 ·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
추진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한살림 생협 유치 계획 수립</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한살림 실무자 대상 업무협의를</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한살림 유치계획 확정</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대표자 간 업무협의를</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도-한살림 MOU 체결</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생협 컨소시엄 수요 파악</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생협 관계자 대상 업무협의를</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생협컨소시엄 유치계획 협의</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대표자 간 업무협의를</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도-생협컨소시엄 MOU 체결</div> </div>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도/시군 차원의 인센티브 체계 구체화 필요 - 한살림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고민 필요 - 한살림 생산공장의 특성상 지역사회에 도착된 기업이 많은 만큼 비교적 지역기반 이 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두레생협, 행복중심 생협 등에서 공 동물류센터 설립을 검토중 - 물류센터의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도/시 군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물류센터 유치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 적방안 검토 필요

2)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 방안

(1) 추진 배경 및 방향

① 특화농공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충청남도내 특화농공단지는 6개의 단지로, 기 조성되었거나 신규 조성 중에 있다. 현재 신규 조성중인 단지는 홍성군의 광천김특화단지, 서천군의 서면특화단지, 금산군의 인삼약초특화단지, 논산시의 강경 농공단지이다. 청양군의 정산2 특화농공단지, 당진시의 옥호지구 특화농공단지는 신규조성 예정이다.

특화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의 정책목표인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특산물의 가공생산을 위해 지역특산물 활용을 목적으로 한 농공단지로, 일반·전문단지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조성비지원이 있다. 충청남도 역시 중점추진과제로 특화농공단지 육성을 제1과제로 지정하여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²³⁾. 그러나 특화농공단지의 목적과 조성·운영에 있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입주업체의 선정, 지리적 조건의 불리성 등으로 인해 미분양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특화농공단지가 존재하며, 특화농공단지의 정책목표인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생산 및 운영하는 단지로는 성과가 높지 않고 기존 일반단지의 현황과 비슷하게 단순 생산시설의 집적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지역사회 기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특화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

현재 충남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불합리가 노정되어, 충남지역의 식품순환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제안되어 왔다. 충남의 농산물은 농산물 유통의 관외 유출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역 유통시장의 미형성에 기인하며 일단 지역 외로 유출되었다가 재 유입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의 자체 식품순환체계를 위한 물류·유통·소비구조가 구축이 되어야 부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농식품 판매의 부가가치 증대가 가능하다. 로컬푸드는 인접지역

23)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2014.5)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농식품을 의미하며, 로컬푸드가 활성화 된 지역식품체계를 지역순환식품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로컬푸드 기반의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충남의 독자적인 식품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충청남도의 독자적인 식품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조정기능이 전제조건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농식품의 생산량이나 종류에 있어서 품목별로 불균형하며 지역별 특성화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역 차원의 통합적 조정 기능은 없는 상황이다. 통합적 조정 기능은 지역 내 품목간 교류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외부 반입 등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이 전제조건이다.

통합물류시스템은 학교급식, 내식, 외식 등 유통 특성별로 맞춤형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데, 충청남도 차원의 물류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기반 농공단지내 이와 같은 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함으로써 통합물류와 함께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대도시 소비시장 협력모델 구축

농공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연계가 반드시 조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충남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요 소비시장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시 소비시장은 '서울시 먹거리 종합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과의 연계가능하며, 대전광역시는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등의 생협매장과 사업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학교급식과도 연계하여 소비시장을 확장한다.

비단 소비시장은 로컬푸드 등 농산물·가공품의 납품·판매에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 농공단지의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하다. 대전·세종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생협조합원 및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내 기업의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 체험 프로그램, 창작, 교육 등 복합 시설이 함께 집적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유도가 필요하다.

④ 로컬푸드기반 농공단지 조성 대상지 검토

이에 기존 미분양 단지나 신규 조성 예정인 특화농공단지를 지역사회의 생산물을 가공, 체험까지 이르는 6차산업형의 로컬푸드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내의 특화농공단지 및 미분양단지 중 조성가능한 대상지는 기존 미분양 단지 3개소와 신규 조성 예정지 2개소가 있다²⁴⁾.

3개소의 미분양 단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논산시에 위치한 강경 농공단지는 한미식품이 개발한 단지로 유부, 곤약 등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분양 부지 규모는 크지만 개발자인 한미식품의 협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분양 부지는 당초 한미식품 관련사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입주가 지연 중에 있다. 단지로 조성할 경우 한미식품의 협조가 관건인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룡 제1농공단지는 음식료품 제조업 2개가 입주해 있는 단지로 현재 미분양 부지는 124,081㎡에 달하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6차산업화 기업이 매우 적은 곳으로 조성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산군의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인삼 특화 단지로서 현재 미분양 부지는 50,439㎡로 대규모이나, 단지 조성을 추진할 만한 주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양군에는 청양알프스 마을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지해 있고, 관련 활동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신규 조성예정지는 정산2농공단지등 2개소이다. 청양군의 정산2농공단지는 신규 조성예정인 단지로 식품제조업으로 특화할 계획이며, 부지는 191,260㎡에 달한다. 당진 옥호식품특화농공단지는 신규 조성 예정 중인 단지로 당진식품특화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이 집적할 계획이다.

당진 옥호식품특화농공단지는 신규 조성 예정 중인 단지로 당진식품특화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이 집적할 계획인 만큼 조성단계에서 6차산업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특히 당진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6차산업화 기업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며, 당진 식품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 단지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추진이 가능하다.

24) '제4장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및 입주수요 검토' 참고

〈표 65〉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 대상지 검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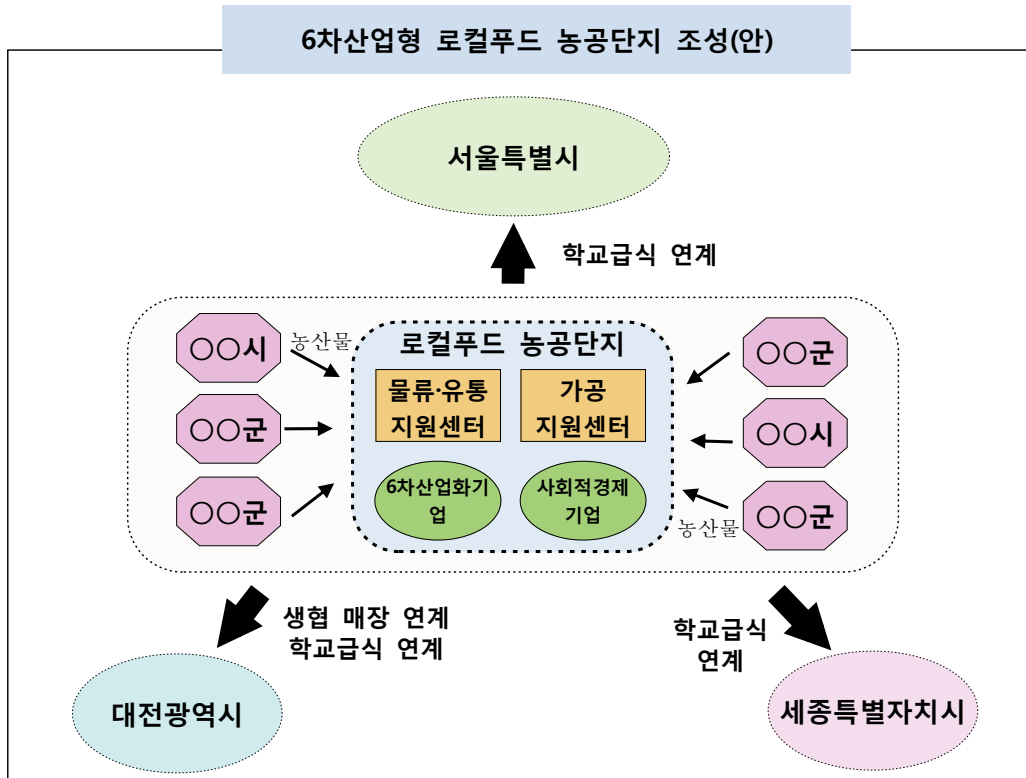
시 군	단지명	특화분야	미분양 부지	접근성	분양가 (㎡)	주요 특성
논 산	강경 농공단지	식품제조업	46,508㎡	국도 연접 강경역	61천원	유부, 곤약
계 룡	계룡제1농공단지	음료제조업	124,801㎡	호남고속도로 연접	326천원	친환경 도시
당 진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식품제조업	213,342㎡	고속도로	180천원	당진식품특화 사업협동조합
금 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인삼약초 음식료품	50,439㎡	금산IC	194천원	인삼 특화
청 양	정산2농공단지	식품제조업	191,260㎡	청양IC	128천원	친환경

(2) 세부 추진방안

① 방안 1: 로컬푸드 사회적경제기업 집적을 통한 조성

우선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을 통해 농공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본 농공단지는 로컬푸드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과 함께 충청 광역권 물류·유통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충청남도 각 시군의 로컬푸드가 집결하는 충청남도 로컬푸드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한다. 단지의 입지는 충남지역과 대전, 세종을 연결하기 좋은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인근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물류 및 유통지원센터, 로컬푸드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가공기업, 로컬푸드 체험공방, 로컬푸드 레스토랑 등이 입주하여 로컬푸드로 특화된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다. 로컬푸드에 관한 홍보와 전시, 체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며,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돌봄과 보육,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등 사회서비스 시설도 입주하여 단지 내부 및 인근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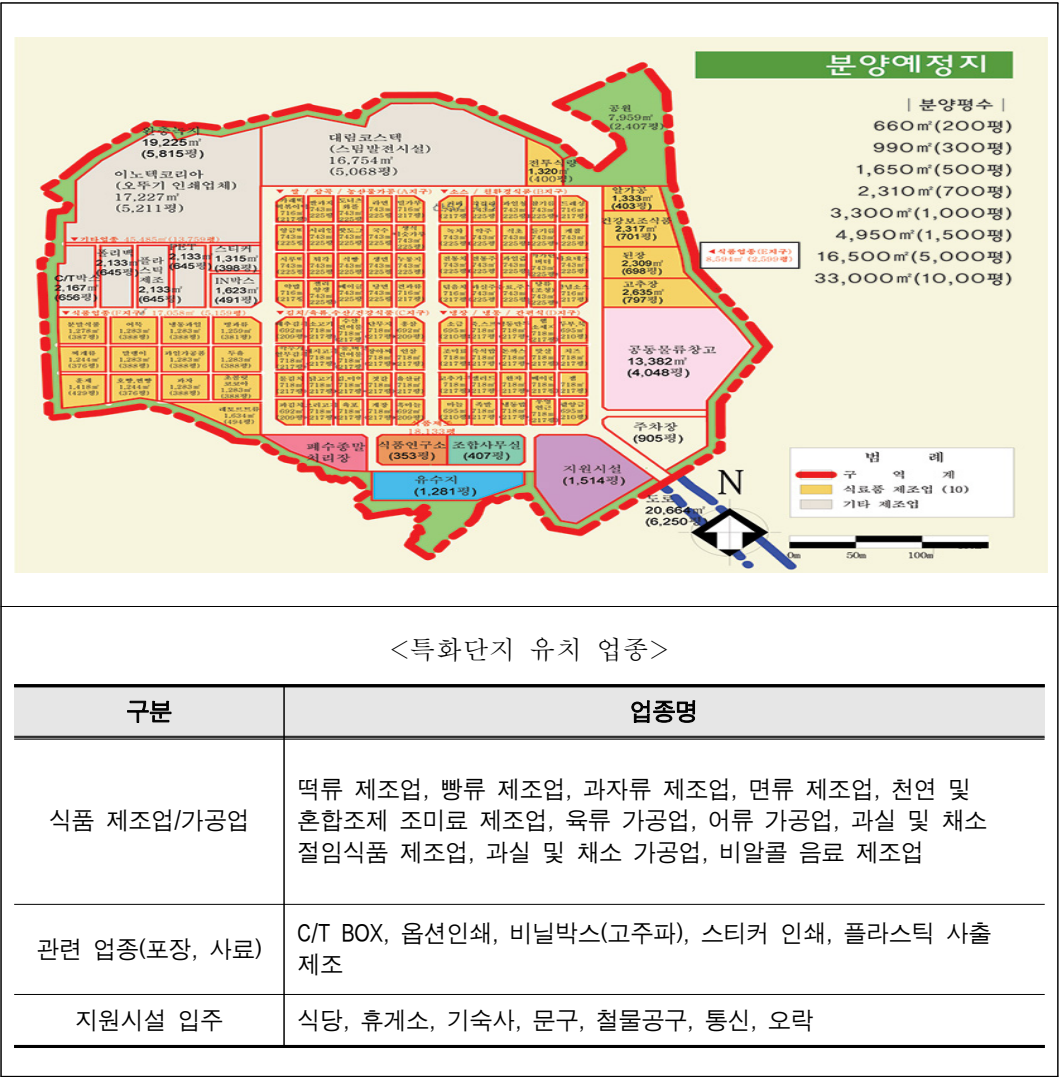
② 방안 2: 신규조성 예정지의 사업주체와 연계한 농공단지 조성

기존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로컬푸드 단지 브랜드화>,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모델 정립>,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로컬푸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당진 식품특화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약 85개의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식품 연구소, 공동 물류 시설 등이 집적된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주체의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 관련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칭) 당진 로컬푸드 파크> 등의 브랜드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계획은 개별기업의 집적만을 고려하고 있는 모델로 6차산업화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농수산물 활용 기업 유치>,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모델 정립>,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등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존 사업계획에서

주요 유치 업종인 떡, 빵, 과자, 면 등 제조업의 경우 지역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만큼 입주사 운영 규정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 농산물의 활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의 브랜드를 로컬푸드 또는 지역공헌 단지 등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추진한다.

〈표 66〉 당진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계획(예시)



(3) 운영모델 구축 방안

공동된 목표 없이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만큼, 다음과 같이 입주 단계에서부터 운영 모델을 명확히 한다. 단지의 조성 단계에서 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식품기업, 지원기업, 연구소 등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지 운영 규정을 수립하며, 규정은 로컬푸드 농공단지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구체화된 조향으로 구성한다.

<로컬푸드 농공단지의 기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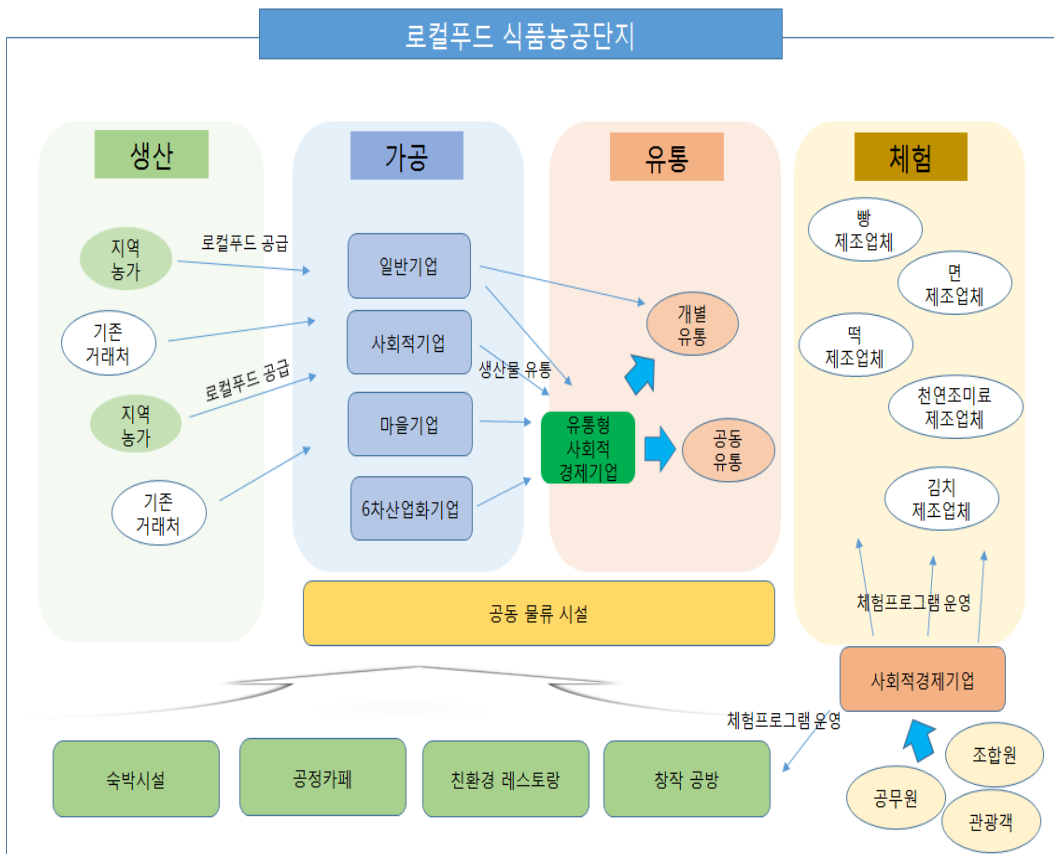
- ① 농공단지는 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
- ② 농공단지 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극장, 공방, 숙박시설, 레스토랑,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
-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
- ④ 그동안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농공단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밀착된 단지로 조성.

위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로컬푸드 농공단지로서 운영모델’을 구체화한다. 생산-가공-유통-체험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운영체계 구축은 사업협동조합에서 총괄 관리하되, 체험 및 지원 시설 등의 운영은 각기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67〉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 대상지 검토(안)

구분	업종명
사업주체	· 단지 총괄 관리(시설, 입주기업 애로, 컨설팅 등)
식품 제조업체	· 생산 시설 견학, 체험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식당, 기념품 판매 등

농공단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제조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체험, 창작, 육아, 돌봄, 청소, 경비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단지 내 지원 서비스에 적극 참여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당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36개로 다양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들이 집적해 있으며, 이외에도 마을만들기, 청년창업 등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각기 고유한 체험프로그램, 교육, 시설관리 등의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단지 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다.



(4) 추진절차

농공단지 구축을 위한 절차는 충청남도과 농공단지 개발사업 주체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한다. 개발사업 주체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역량과 목적을 가진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로컬푸드 관련기업과 함께 가공을 비롯한 체험·레스토랑·공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미분양시에는 지속적으로 기업공모를 추진한다.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하고,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도·사업협동조합 업무협약	·충청남도-시군-사업주체 업무협약	투자입지과
추진단 구성	·도/시군 공무원, 사업협동조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 구성	투자입지과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투자입지과
입주기업 유치 공모	·입주기업 유치 공모 ·기업 참여 홍보	투자입지과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결과공표 및 통지	투자입지과
단지 운영 협의체 구성	·입주기업 등으로 구성된 운영 협의체 구축	사업주체
단지 조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협의에 기반한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협의체 투자입지과
지속적 입주기업 모집	·분양 미완료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투자입지과
단지 조성	·착공, 기업 입주	투자입지과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투자입지과

(5) 사업 추진체계

단지 조성에 있어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가 총괄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주체와 긴밀한 협업 추진한다. 유관 부서인 사회적경제팀과 농촌산업팀은 각 관리 대상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기존 시책의 단지 내 투입을 고려한다.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인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단지 조성 방안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6차산업화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단지조성과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표 68〉 로컬푸드기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내 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 청 남 도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독려 - 두레기업 참여 독려 -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 군	해당시군(담당부서)	- 단지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충 남 연 구 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중 간 지 원 조 직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로컬푸드 연계 지원
민 간	사업주체	- 사업 실무 추진 - 입주기업 유치 - 운영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원서비스 제공
	입주기업	- 자본 투자, 운영규칙 수립

(6)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충청남도 식품순환체계 구축 구현을 위한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방안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서 주요한 농공단지 모델로서 위치한다.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방안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로컬푸드의 현황(품목, 시기, 양, 생산자 등) 파악이다. 이 현황을 통해서 실제 로컬푸드 기반 농공단지 조성가능한 원자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전제한 로컬푸드의 기반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충남의 15개 시군 로컬푸드의 통합물류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생산자(협동조합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소농기반 로컬푸드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많으므로 섬세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원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존 사업주체와 연계한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 등 가치추구와 영리추구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존 사업주체의 경우 영리를 최우선 가치를 두나 로컬푸드(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사회적가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기단계부터 사회적경제의 이해교육,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선진지 견학(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9〉 로컬푸드 농공단지 조성 방안 요약

구분	(1안) 충남 식품순환체계 구축 기반형	(2안) 특화농공단지 사업주체 활용형
대상 주체	·품앗이 마을 사회적협동조합 ·HAPPY BRIDGE 협동조합	·당진 옥호 특화농공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천 김특화농공단지 협의체
유치 시설	·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식품기업, 체험시설, 지원시설 등
대상 지역	·청양 정산2 특화농공단지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
추진 절차	<div> <div>충남 식품순환체계 구축 계획 수립</div> <div>↓</div> <div>로컬푸드 사회적경제기업 업무협의</div> <div>↓</div> <div>로컬푸드 단지 조성계획 수립</div> <div>↓</div> <div>대표자 간 업무협의</div> <div>↓</div> <div>도·품앗이 마을 MOU 체결</div> </div>	<div> <div>특화농공단지의 6차산업화 계획 수립</div> <div>↓</div> <div>도-사업주체간 업무협의</div> <div>↓</div> <div>세부 추진 계획 수립</div> <div>↓</div> <div>대표자 간 업무협의</div> <div>↓</div> <div>도-사업주체간 MOU 체결</div> </div>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광역 차원의 식품순환체계 구축과 연동한 로컬푸드 단지 조성 - 이를 위해 충남 물류·유통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필요 -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도내 로컬푸드 기업이 집적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 옥호 식품특화농공단지의 조성 단계에서부터 6차산업형 모델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 기존 특화농공단지 중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과 협의하여 6차산업형 모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3) 농공단지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협업단지 조성

(1) 추진 배경 및 방향

① 농공단지의 휴·폐업 시설의 활용 검토

충남 농공단지 휴·폐업시설은 2015년 현재 19개소에 달하지만 신규 입주 및 임대 수요가 없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공단지 내 휴·폐업 시설이 많은 단지는 공주 검상농공단지, 홍성 광천농공단지, 부여 은산농공단지, 공주 장기농공단지, 홍성 결성농공단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 장기농공단지 내 한독오텍 휴·폐업시설은 5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으나 마땅한 활성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휴·폐업 시설은 농공단지를 낙후지역 또는 우범지역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한다. 20년 이상된 농공단지 내 휴·폐업시설은 대부분 기반시설이 낡아 보수와 시설교체가 시급하고 일부의 경우 주진입도로 부재 등 교통 불편까지 겹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매 및 임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휴·폐업 시설의 활성화에 있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매 및 임대 방식이 더 이상 적용이 어려운 만큼, 지역 기반 경제 주체들이 집적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휴·폐업 시설을 활용한 조성 사례>

○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파크

- 빌바오시가 주도하여 공공기관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옛 타이어 공장 지대와 폐 선박을 리모델링
-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조직에 사무실을 대여하고 자원을 연계

○ 뉴욕 브루클린 파이오니아 워크스

- 브루클린 레드훅 지역 내 비영리 재단으로 시작하였으며, 과거 대형 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조성
- 레지던스,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② 휴·폐업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소유주/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휴·폐업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도내 휴·폐업 시설 46개를 대상으로 면적(m²), 임대/매매 비용(천원/m²), 추후 활용 계획 등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유주/이용자 대상 조사 실시하였다.

〈표 70〉 휴·폐업시설 조사 지표

구분		주요 지표
휴·폐업 시설 활용 가능성 조 사	휴·폐업시설 기본 현황	-건축 연도 -소유주 -면적(m ²) -폐업사유
	건물 활용 가능성	-희망하는 임대 또는 매매 가격(천원/m ²) -임대기간 -임대 시 리모델링 가능 여부 -사회공헌 지원 계획 -향후 건물 활용 계획
입주기업 수요조사	농업·제조업체 대상	-향후 공장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휴·폐업시설 임대 및 매매 가능 여부 -희망 부지면적 규모 -적정 분양가격 정도 -최대 투자가능 금액
	서비스업체 대상	-향후 사무실 이전 및 확장 계획 여부 -휴·폐업시설 임대 및 매매 가능 여부 -희망 부지면적 규모 -적정 분양 및 임대 가격 정도 -최대 투자가능 금액
	공통 사항	-유관 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입주 희망 여부 -협업 희망 분야 -희망하는 지원 사업 -기타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도내 휴·폐업 시설은 2016년 현재 공주 김상농공단지 7개소, 홍성 광천농공단지 7개소, 부여 은산농공단지 5개소, 공주 장기농공단지 3개소, 홍성 결성농공단지 3개소, 보령 웅천석재 농공단지 2개소 등 총 46개소가 존재한다. 이중 공주 1개소, 서천 3개소, 홍성 3개소의 휴·폐업시설이 현재 방치되고 있으며, 서천 장항원수농공단지(34,510m²)와 홍성 은하농공단지(91,128m²)는 대규모의 시설이었다.

〈표 71〉 주요 휴·폐업시설 현황

시군	단지명	특화분야	건물 면적	소유주	접근성	주요특성
공주	장기농공단지	음식료업, 섬유, 화학 등	10,990	한독오텍	국도 36호선, 국도 40호선	휴·폐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서천	장항원수농공단지	자동차 부품, 동물용의약품 등	34,510㎡	동일방직	서천IC 15분 거리	대형 시설로 대체입주 어려움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매각 추진
서천	장항원수제2농공단지	동불용사료, 금속제조업 등	2,002㎡ 1,074㎡	성현기업사 형제산업	서천IC 15분 거리	형제산업 경매 진행 중
서천	종천농공단지	합성수지, 기계장비 등	9,146㎡	한국기전공업	서천IC 5분	대체입주 고려
홍성	구항농공단지	전기전자, 석유화학	7,355㎡ (2개소)		홍성IC 15분	협의회가 활성화
홍성	은하농공단지	전기전자, 조립 금속 등	91,128㎡ (1개소)		광천IC 5분	대규모 시설
홍성	결성전문농공단지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	3,089㎡	우림산업	홍성IC 5분	자동차 제조업 특화

③ 협업단지 조성을 위한 원칙 정립

휴·폐업 시설 활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성 시 고려해야 할 7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는 협업단지의 조성 목적인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지역기반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성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본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기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 인큐베이팅 관점의 지원, 운영 주체의 협동조합화 등 아래와 같이 7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협업단지 7대 기본 원칙(안)

- ▶ 사회적경제, 6차산업화, 청년창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을 중심으로 조성
- ▶ 생산·가공만이 아닌 카페, 레스토랑, 창작, 체험, 교육, 돌봄 등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
- ▶ 휴·폐업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성과보다는 입주기업을 육성·보육한다는 관점에서 조성
- ▶ 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들이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규정
- ▶ 단지의 조성에 있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이 조성·운영 계획 수립을 주도
- ▶ 빠른 사업 추진보다는 입주기업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
- ▶ 일률적인 방식의 조성(운영)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성(운영) 모델 정립

(2) 세부 추진방안

휴·폐업 시설의 활용은 소유주의 향후 계획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임대(20년 이상) 및 매매를 가정하면, 휴·폐업시설의 규모 및 사업방식에 따라 ①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② 커뮤니티 사업 기반 협업단지로 검토할 수 있다.

①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조성방식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조성은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은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형 휴·폐업 시설의 경우 리모델링비용 등 초기비용이 높은 단지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협업단지 입주를 고민하는 소기업의 창업 및 입주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기업의 창업 및 입주의 경우 리모델링비용 등 기업의 여력이 상이한 만큼 초기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조성단지 인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기업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무실 등 단순 공간임대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커뮤니티 사업 기반 협업단지 조성방식

이 방식은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리모델링 및 임대(매입) 비용을 자부담하고,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는 장비 구입, 홍보,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방식은 앞선 방식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발적인 조성을 통해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주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휴·폐업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지체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방식 운영규정의 명시화

협업단지 조성에 있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기업이 협의체 또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화 하도록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큐베이팅 협업단지의 경우, 초기비용 등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협업단지의 의도와는 달리 단순 임대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당 휴·폐업 시설을 활용하는 협업단지 구성의 기본 원칙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유하고, 상호 협의와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하려는 기업이 모두 관계성이 없는 개별 기업일 경우 이러한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화를 반드시 할 수 있게 하며, 협동조합이나 협의체로 들어온 기업은 단지의 기본원칙을 규정에 명시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표 72〉 휴·폐업 시설 활용형 단지 유형 검토

구분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커뮤니티 개발형 협업단지	
개발 방식	도(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이외의 운영비 및 임대료는 입주기업이 충당		입주기업이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임대료 등을 부담하며, 도(시군)는 행정 지원, 지원사업 등 수행	
공간	대형 휴·폐업 시설		소형 휴·폐업 시설	
추진 재원	리모델링	공공	리모델링	민자
	운영(임대료 등)	민자	운영(임대료 등)	민자
	장비	공공, 민자	장비	공공, 민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한 지역사회 기반 기업의 참여 가능 ·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인큐베이팅 정책 목표 실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도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 · 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운영 가능 · 다양한 창조적 운영 모델 창출 가능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도에 따른 형식화 우려 · 단순 창업보육센터화 우려 · 민간의 주도성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기반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어려움 · 휴·폐업 시설이 일부 기업에 사유화 우려 	

(3) 협업단지 운영모델(안)

① 운영주체

- 협업단지는 조성 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한다.

②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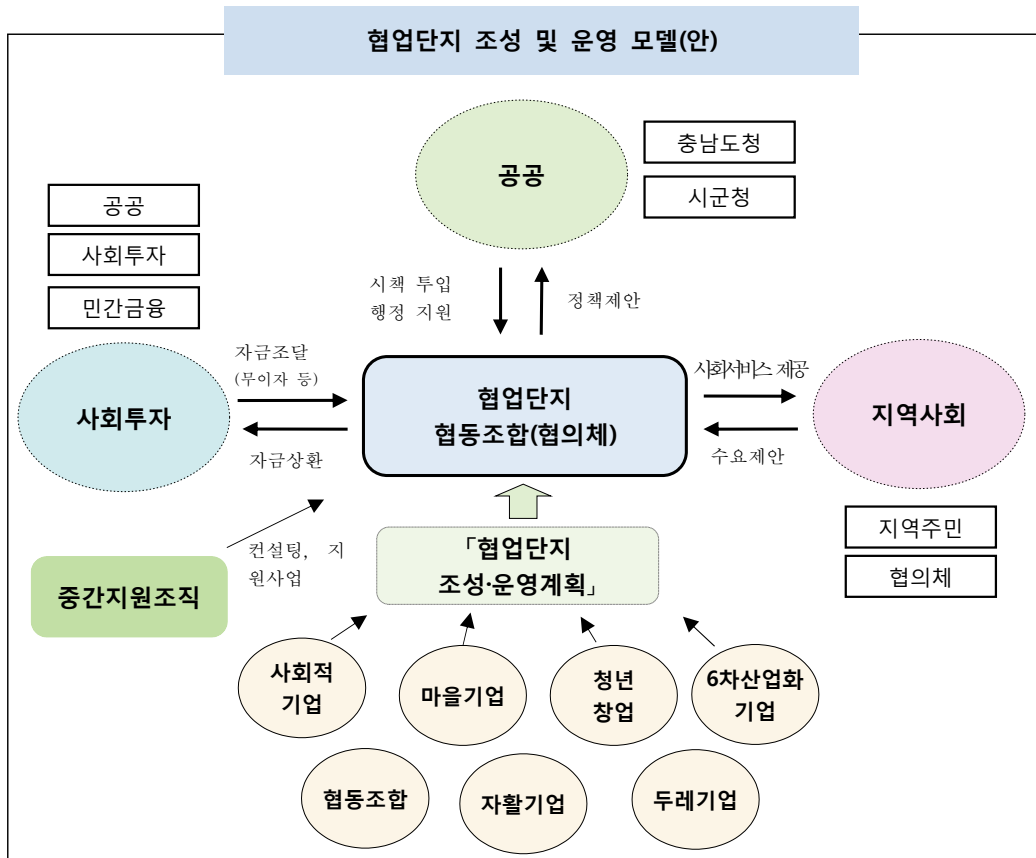
- 운영주체 주도로 협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단지를 운영하도록 한다.
- 조성 계획은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디자인, 공간배치, 여가시설 등 실제로 사용하는 입주기업 협동조합을 주도로 수립하게 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행정 수요 등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한다.
- 운영시 필요규정에 관해서는 입주기업 협동조합의 내부 합의 절차를 거쳐 임대료 배분, 사무실 배치, 협업사업 운영 방식, 지역사회 기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

③ 협업단지 거버넌스 구축

- 공공기관(충남도, 시군)은 협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시책 사업 투입, 행정적 지원을 하며, 협업단지 협동조합은 정책제안 및 공익사업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협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공공, 민간금융, 사회투자 등 다양한 사회투자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협업단지 협동조합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하다.
- 협업단지의 원칙인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역사회 주체(지역주민, 협의기구 등)들은 적극적인 지역 수요를 제안하며, 협업단지 협동조합은 이를 반영한 지역사회공헌사업 실시한다.

〈표 73〉 협업단지 조성/운영 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계획의 개요	단지 조성의 배경, 목적 등 개요 작성
2. 단지 조성 계획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방향, 공간 활용 방안, 공간별 주요 기능, 외부경관 조성 등
3. 단지 운영 계획	협동조합 운영 규정, 임대료 산정, 입주기업 관리, 협업사업 운영, 시설 관리, 지역사회 기여 등
4. 사업추진체계	입주기업별 역할,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계획 등
5.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재원 조달, 운용 계획 등



(4) 협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실시

협업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단지는 상기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활용 가능한 휴·폐업시설을 선정하며, 가급적 수요와 공급이 많은 곳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공주시에 위치한 장기농공단지 및 한독오텍 휴·폐업시설 등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업단지 입주기업은 지역기반의 단지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6차산업화기업, 청년창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모집한다.

〈표 74〉 모집 대상 범위

구분		특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
	협동조합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
	자활기업	자활자의 재활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
6차산업화	두레기업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 산업화를 이루려는 마을단위 주민
	6차산업화 인증기업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에서 가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우량기업	제조·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청년창업·창작		창업활동을 준비하거나 소규모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기업이 해당

(5) 협업단지 구축을 위한 추진절차

협업단지 구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휴·폐업 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기초로, 입주 희망기업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한다. 설명회 후 단지 조성에 대한 입주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의 규정 중 하나로 입주기업 간 협동조합 또는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협업단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협동조합 또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예산과 전문 컨설팅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조성 계획의 경우 전문적인 시공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 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영 계획은 입주기업 협동조합(협의체)의 내부 협의 절차를 통해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협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을 토대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기업 입주 등을 수행한다.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휴·폐업 시설 수요조사	·휴·폐업 시설 소유자 대상 협의 ·입주기업 수요조사	투자입지과
대상 지역 선정	·입주 수요 및 소유자 조사 결과 검토 ·우선 조성 가능지역 도출	투자입지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자문회의 개최	·대상 지역 선정결과 자문회의	투자입지과
설명회 개최	·대상지역 소유자 및 입주희망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투자입지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입주기업 공모	·입주기업 공모 실시	투자입지과 (관련 부서 협조)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구성 ·결과공표 및 통지	투자입지과
협동조합(협의체) 구성	·입주기업 협동조합화 지원 ·여건상 어려울 경우 협의체로 구성	투자입지과 협동조합지원센터
조성/운영 계획 수립	·단지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입주기업 협동조합 투자입지과
단지 조성	·리모델링 ·기업 입주	입주기업 협동조합 투자입지과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입주기업 협동조합 투자입지과

(6) 사업 추진체계

협업단지 구성에 있어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가 총괄하는 가운데,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 농촌정책과(농촌산업팀)에서 적극 지원한다. 유관 부서인 사회적경제팀과 농촌산업팀은 각 관리 대상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기존 시책의 단지 내 투입을 고려한다.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인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단지 조성 방안 및 운영 모델을 연구·조사한다. 입주기업 협동조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지원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충남 6차산업화지원센터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한다. 지의 핵심 운영주체인 입주기업 협동조합(협의체)는 단지 조성계획부터 운영까지 담당하여 협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한다.

〈표 75〉 협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내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청 남도	투자입지과 (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독려 - 두레기업 참여 독려 -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군	해당 시군(담당 부서)	-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지원
충남 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 모델 연구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 입주기업 대상 협동조합 컨설팅 - 협동조합 운영 관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중앙정부 사업 연계
민간	입주기업 협동조합 (협의체)	- 입주기업 협의기구 역할 수행 - 협업단지 조성·운영 계획 수립 - 협업단지 운영 주체 역할 수행
	시설 소유주	- 시설 임대 또는 매매 협의

(7)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농공단지 휴·폐업시설 활용한 협업단지는, 농공단지를 낙후·우범지역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키는 등 경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높다. 또한 신규단지 조성처럼 대규모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등 담당자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방식에 따라 한계점도 존재한다. 인큐베이팅 협업단지 조성방식의 경우, ①공공주도에 따른 형식화, ② 기존 창업보육센터와의 차별점 없음, ③ 공공주도에 따른 민간의 주도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커뮤니티 개발형 협업단지 조성방식의 경우, ①지역사회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성으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과, ②휴폐업시설이 일부기업의 사유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 방식의 장·단점, 지역적 상황고려 등 정책믹스(MIX)를 통해 지역기반 조성방안을 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76〉 휴·폐업시설을 활용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요약

구분	(1안) 창업보육 기반형 협업단지	(2안) 커뮤니티 사업 기반형 협업단지
개발 방식	·도(시군)에서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이외의 운영비 및 임대료는 입주기업이 부담	·입주기업이 휴·폐업 시설의 리모델링, 임대료 등을 부담하며, 도(시군)는 행정 지원, 지원사업 등 수행
대상 주체	·공모를 통해 입주기업 모집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청년창업, 여성기업 등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대상 시설	·중대형 휴폐업 시설(공주 등)	·소형 휴폐업 시설(홍성 등)
추진 절차	<div> <div>활용가능 휴폐업 시설 선정</div> <div>↓</div> <div>시설 소유주 대상 협의</div> <div>↓</div> <div>대상 시설 확정 및 조성계획 수립</div> <div>↓</div> <div>입주기업 모집·협의체 구성</div> <div>↓</div> <div>도-소유주-입주기업 협의체 MOU 체결</div> </div>	<div> <div>활용가능 휴폐업 시설 선정</div> <div>↓</div> <div>지역 내 주체별 공간수요 조사</div> <div>↓</div> <div>수요를 기반으로 협의체 조직화</div> <div>↓</div> <div>협의체 주도 휴폐업시설 조성계획 수립</div> <div>↓</div> <div>도-소유주-협의체 MOU 체결</div> </div>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이 가능한 휴폐업 시설이 정해지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협의체, 6차산업협의체, 청년 관련 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개방형 조성 계획 수립 - 해당 단지는 지역기반의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기능으로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집적하려는 욕구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조직화하는 일이 핵심임 - 휴폐업 시설의 매입 및 리모델링 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4) 컨테이너 단지 기반의 협업단지 조성 방안

(1) 추진 배경 및 방향

농공단지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기업들의 지역 농산물 활용, 지역사회 복지 또는 사회공헌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 공장 중심의 농공단지는 외부 경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휴·폐업 시설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후화된 제조 공장은 단지 인근까지 낙후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공단지 내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 및 주체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최근 컨테이너 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의 플랫폼 창동 61,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 여러 컨테이너 단지가 조성되어 다양한 주체의 창업 공간, 문화·예술·공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단지의 비교적 저렴한 설치비용과 자유로운 이동성은 초기 조성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최근 문화·예술·창작·편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는 컨테이너 단지를 농공단지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컨테이너 단지 조성 사례>

○ 비벌기지

- 2010년 방치되어있던 마포석유비축기지 내 관리사무소를 '문화로놀이짱'이 공공제작소로 재생하고자 관리/운영을 시작하였고, 2014년 '생활기술융합제작소'라는 물리적 공간을 함께 조성

○ 플랫폼 창동 61

- Platform61은 음악과 푸드, 패션 분야의 콘텐츠가 한 데 어우러진 트렌디한 복합 문화공간임. 약 630평(약 2,790㎡) 규모에 61개의 대형 컨테이너로 구성

(2) 세부 추진방안

컨테이너 단지는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사비 절감에 더해 독특한 외관에 따른 지역의 명소로서 상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컨테이너 건축은 모듈러 건축 공법으로 짧은 공사기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 등의 강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플랫폼 창동 61, 커먼그라운드, 언더스탠드에비뉴 등은 새로운 문화예술 복합 단지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중 미분양 부지가 많거나, 활성화가 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이러한 컨테이너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의 생산물을 체험, 판매할 수 있는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 활용 건축의 특징>

- 컨테이너 건축은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을 활용한 건축 양식으로, 공사기간의 단축, 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등 효과가 높음
 - 커먼그라운드의 경우, 1000평 기준 약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건축과는 달리 공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며 약 30%의 공사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
- 컨테이너 건축은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큼
 - 재사용이 용이하고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 컨테이너 건축물을 해체 후 재조립해 사용할 확률은 60%, 컨테이너의 스틸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있는 확률은 90%에 달함
 - 전체 공정의 약 8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건설 현장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고, 현장 소음과 분진도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친환경적임
- 또한 컨테이너 건축은 비용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장점 이외에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상업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토지를 매입해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는 대신 임대 토지에 컨테이너 건축으로 이동식 상업 공간을 구축하면, 초기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건축물의 이동을 통해 빠른 상권 대처도 역시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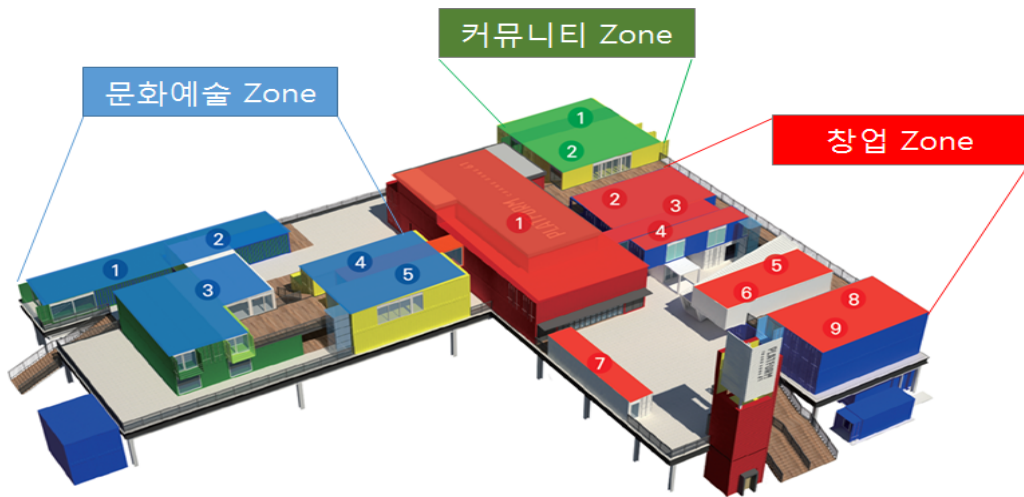
컨테이너 단지는 기존 지원시설이 미흡한 농공단지 주변에 입지하여 카페, 창작, 문화예술, 레스토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컨테이너 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대규모 제조시설이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 공방, 청년창업 등 소규모의 서비스 업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복지 등에서 소외된 지역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과 기존 농공단지 제조기업이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지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체들과 비교적 연계가 양호한 특화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중 미분양 부지가 있는 논산, 금산, 서천, 청양 농공단지가 해당될 수 있다. 금산의 경우 인삼이라는 지역자산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단지 내 인삼 교육, 투어 프로그램, 인삼 레스토랑, 카페, 직판장 등을 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7〉 컨테이너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

시군	단지명	특화분야	미분양 부지	접근성	분양가 (㎡)	주요 특성
논산	강경 농공단지	식품제조업	46,508㎡	국도 연결 강경역	61천원	유부, 곤약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인삼약초 음식료품	50,439㎡	금산IC	194천원	인삼 특화
서천	서천김가공 특화단지	식품제조업	19,128㎡	춘장대IC	73천원	김 특화
청양	정산2농공단지	식품제조업	191,260㎡	청양IC	128천원	친환경

컨테이너 단지는 충남도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하며,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고려할 수 있다. 창업공간은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창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화예술 공간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수행함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이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교육, 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구분	사업 내용
창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육시설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작소 운영 - 지역기업 및 로컬푸드 기업 판매공간 운영
문화예술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공간 조성 - 갤러리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활용 공간 조성

창업 공간(스타트업 Zone)은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판매 및 창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창업공간에는 청년의 협업 및 교류 공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청년 혁신 공작소, 지역기업의 제품 판매 및 홍보 마케팅 공간,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며,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사무공간, 협업공간, 금융·판로·교육·법률상담 등 지원)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공간(문화예술 박스)은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뮤직 스튜디오, 문화·예술가 창작 공간, 갤러리 상설 및 수시 전시 프로그램 공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뮤직 스튜디오는 여건에 따라 도내 뮤지션들이 음악을 창작하고 연습할 수 있는 합주실, 녹음실 등으로 구성하며, 문화·예술가 창작 공간은 화가, 작가, 만화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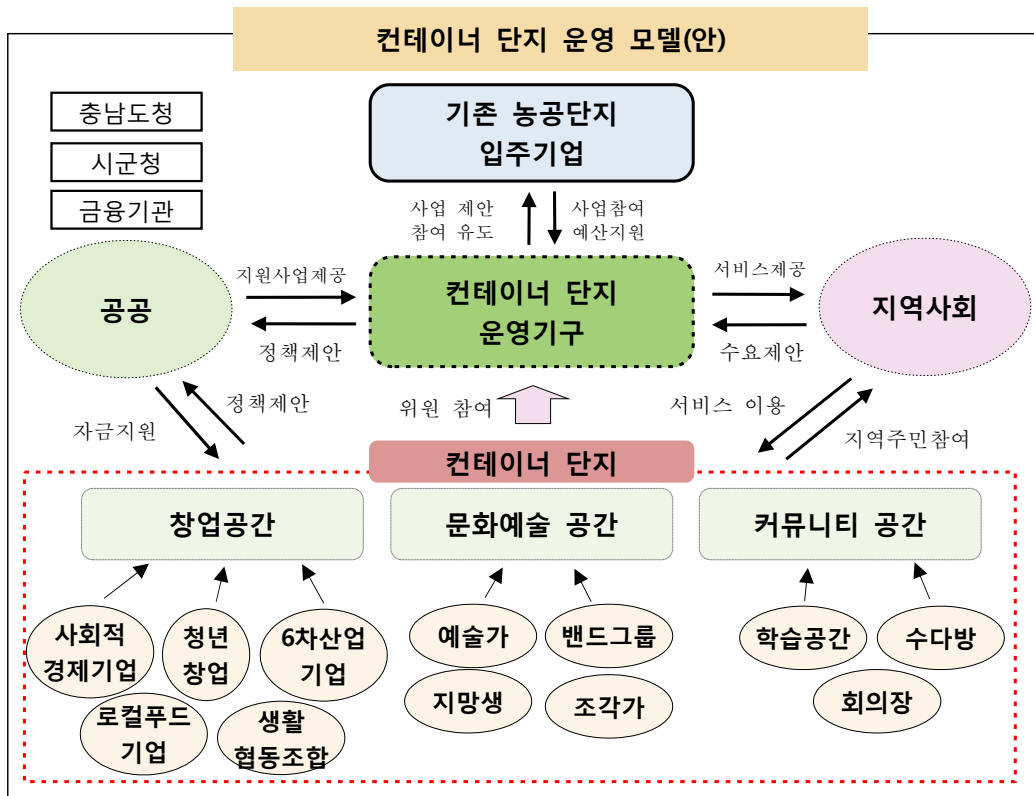
커뮤니티 공간은 동네마실로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 내에는 평생학습교육공간을 조성하여 퇴직 및 고경력자, 경력단절자를 위한 교육 공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공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수시대관, 체험행사 등의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영국 쇼디치 박스파크(<http://www.boxpark.co.uk>)

컨테이너 단지 운영모델은 다음과 같다. 컨테이너 단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 단지 운영기구’를 설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단지를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기구에는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 대표,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컨테이너 단지 운영의 성과가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협력에 달려 있는 만큼, 운영 기구는 기존 농공단지와의 협업사업을 적극 기획·추진해야 한다.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의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및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3) 추진절차

컨테이너 단지 조성의 추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도내 미분양 특화농공단지 중 조성 가능한 단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화농공단지의 입주기업과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참여 및 인식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조성 단지가 선정되면 최종 대상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통해 조성 방식(자금조달 등) 결정하며, 실제 참여할 주체를 발굴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에서 도비 투입을 중심으로 한 인큐베이팅 단지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상업 단지로 조성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입주기업의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컨테이너 단지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인큐베이팅 단지로 조성할 경우 청년 창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민자유치를 통한 상업 시설로 조성할 경우 청년창업, 사회적경제기업, 6차산업화기업 등은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만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주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컨테이너 입주기업과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를 중심으로 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컨테이너 단지의 특성상 운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컨테이너 단지 입주기업, 공공 등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체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컨테이너 단지 조성 부지 검토	·특화농공단지와 컨테이너 단지 연계 가능 성 검토 및 적합 대상지 도출	투자입지와 충남연구원
특화농공단지 관계자 협의	·해당 특화농공단지의 참여 협의	투자입지와
최종 대상지 도출	·지역수요 및 기업수요를 고려한 추진 대상 지 도출	투자입지와
기본 계획 수립	·단지 구성, 자원 조달 등 계획 수립 ·입주기업 수요조사 실시	투자입지와 충남연구원
입주기업 공모	·입주기업 공모 실시	투자입지와 (관련 부서 협조)
입주기업 선정	·심사위원구성 ·결과공표 및 통지	투자입지와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 구성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 ·협의회 규정 등 수립	입주기업
실행계획 수립	·단지 조성 및 운영 실행계획 수립	투자입지와 협의회
단지 조성	·컨테이너 단지 조성 ·기업 입주	투자입지와 협의회
운영 모니터링	·단지 운영 모니터링 ·시설 및 운영 관리	투자입지와

(4) 사업 추진체계

컨테이너 단지의 조성단계에서부터 컨테이너 단지로의 관광객, 소비자 유인을 위한 홍보 전략,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안, 숙박 및 먹거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성되는 부지의 특성 상 인구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운 만큼, 단지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 유치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형생협의 조합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및 지역특화 품목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컨테이너 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업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의 주무부서인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는 컨테이너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입주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컨테이너 단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광역 및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단지의 핵심 운영주체인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는 단지를 운영·관리하는 핵심주체로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연계, 협업사업 기획·운영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 78〉 주체별 역할

내용	조직명	주요 역할
충청남도	투자입지과(국방산단팀)	- 단지 조성 총괄,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 기획·공모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팀)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협업단지 연계
시군	해당 시군(담당 부서)	-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지원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 단지조성 연구·기획 -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 모델 연구
	충남6차산업화지원센터	- 6차산업화 인증기업 참여 지원 - 관련 지원 사업 연계
	연구부서	- 단지 조성 계획 수립 지원
중간지원조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 입주기업 대상 협동조합 컨설팅 - 협동조합 운영 관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단지조성 관련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 - 중앙정부 사업 연계
민간	컨테이너 단지 협의회	- 입주기업 협의기구 역할 수행 - 단지 조성 실행계획 수립, 단지 운영주체 역할 수행

(5) 사업추진시 한계와 고려점

컨테이너단지 조성방안은 조성된 농공단지 중 미분양 부지의 활성화방안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등으로 관광자원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상품(농공단지 및 지역상품)의 체험 및 판매 창구로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 농공단지 시설에서 미흡한 카페, 레스토랑, 문화예술 창작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컨테이너단지 조성방안 역시 투자방식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충남도 등의 공공투자일 경우, 공익성이 높은 청년창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추진가능하나, 민자유치의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시설 위주로 진행되어 다양한 콘텐츠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유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 이해관계자(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지역민, 참여희망자 등)간 협의과정과 합의(시설종류, 지역사회기여 등)를 통해 컨테이너단지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79〉 컨테이너 단지를 활용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요약

구분	컨테이너 단지를 연계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대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 김 가공 특화농공단지 협의체 ·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협의체 · 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상 농공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 김 가공 특화농공단지 ·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협의체
추진절차	<div data-bbox="465 746 1135 1211"> <div>특화농공단지 소재지역의 지역 수요 분석</div> <div>↓</div> <div>컨테이너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div> <div>↓</div> <div>지역별 컨테이너단지 입주기업 모집·발굴</div> <div>↓</div> <div>세부 실행계획 수립</div> <div>↓</div> <div>도-농공단지 협의체 MOU 체결</div> </div>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특화농공단지 연계 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조성이 필요 - 체험과 판매·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유치가 필요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공단지는 ①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약화 및 휴폐업 증가 등諸문제 발생, ② 기업유치중심의 전략에 따른 입주기업간 협력 부재와 이에 따른 집적효과 미흡, ③ 단지 본래목적인 지역과의 사업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역사회와의 괴리확산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공단지 정책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에 인프라 개선, 기업유치, 특화농공단지 지정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호혜와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핵심원리가 농공단지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구례의 자연드림파크 등의 사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요약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공단지의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사회적경제기업 96개 기업 중 44개의 기업이 공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그중 41개의 기업이 이러한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제 이전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대부분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내에서 이전(80.8%)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입주시 부지규모는 500평 미만(65.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투자가능 금액이 5억원 미만(82.5%)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했다. 우선 지역 내 다양한 로컬푸드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집적하여 농공단지를 형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실제 생협이나 로컬푸드 기업은 충청남도의 생산물을 공동유통하려는 수요와 계획이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가 같이 집적한다면 충분한 조성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존 농공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휴·폐업 시설을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중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은 서로 모이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여 휴·폐업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휴·폐업 시설을 공공 주도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즉,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여성기업 등을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농공단지 주변의 미분양 부지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내 특화농공단지는 다양한 체험을 연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서천 김가공 특화단지의 경우 단순 제조시설만 입지해 있어 지역사회와는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주변의 미분양 부지에 컨테이너 단지를 만들어 김 체험에서부터 김 판매, 김 관련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방식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입주해 로컬푸드 교육, 체험, 판매에 더해 농공단지 투어 등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

최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조성한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농공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생활협동조합 중 하나인 아이쿱이 대규모로 개발한 사례인 만큼 쉽게 타 지역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집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지역에 맞는 규모와 방식의 농공단지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와 농공단지 연계모델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과 시·군,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성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의 자조적 시도에 대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추진해야 할 부문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공무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

충청남도는 2012년 사회적경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주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영역과의 융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지역사회 주체가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도정 영역과 융복합이 가능하다. 농공단지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지역사회와의 괴리, 경쟁력 악화 등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만큼, 충청남도 및 시군 농공단지 관련 부서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사회적기업화 지원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 조성된 입주기업협의회는 친목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협력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주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 즉 공동 R&D, 공동 물류, 공동 생산 등을 가능케 하려면 보다 실체적인 조직체가 필요하며, 이는 협동조합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서천 김가공 특화농공단지의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서천 김가공 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최근 '서천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화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표 및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하며,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예산 지원을 필수라 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농공단지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집적하여 만든 단지이다. 그러나,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대형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ICOOP)의 계열사와 협력회사가 집적하였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 수요 발굴 및 사업화 모색이 가능하다. 특히 충청남도는 제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육아, 돌봄, 숙박, 레스토랑, 체험, 교육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생산-가공-체험이 융합한 '6차산업형 집적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상당한 수의 기업에서 공간 이전 수요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사업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투자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나 휴·폐업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공간조성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농공단지의 전략적 전환을 고민한 탐색적 연구로 시작하였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에서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달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지역자원 연계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지역자원 및 지역사회와의 농공단지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농공단지의 노후화 및 휴·폐업시설의 증가 등 확산일로에 있었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에게 농공단지의 전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아이쿱이 조성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이론 고용창출·지역사회 기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공단지라는 틀을 깨뜨렸다. 어쩌면 1960년대 초기 농공단지를 기획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공단지의 목적을 구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근간은 협동의 정신, 즉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정신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회적경제의 원리보다는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현상, 즉 가공-유통-체험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을 하려한다.

본 연구진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6차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충남의 농공단지에 접목하려 하였다. 연구의 초기에는 전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탐색적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현안과제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제안까지 담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연구기간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 추진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의 원리인 협동으로 애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연구진과 함께 충남도와 서천군이 노력하여 서천군의 김가 공특화단지에 ‘서천김협동조합’이 출범하여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로 1보 내딛었기에 더욱 뜻 깊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하나의 농공단지가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경쟁으로만 살아 갈 수 없고,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아직 보강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많은 이들에게 읽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자

- 김선배·홍진기(2010),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기(2013),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기업: 21세기 지역사회의 변화의 주역』.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 김신양외(2016), 한국사회적경제의 역사. 한울.
- 박춘섭·전지훈·이홍택(2016),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충남연구원.
- 배정화(200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5), 사회적경제 특구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 2016 서울 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단 연수보고서.
- 성남시(2016),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연구.
- 송두범외(201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충청남도.
- 송두범 외(2014),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한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전망, 11-46.
- 이동필외(2010), 농어촌 지역경제 다각화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관률(2015), 충남 농공단지 휴·폐업 시설의 실태 및 활용방안. 충남연구원.
- 이관률(2015),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충남연구원.
- 이재희(2015),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성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홍택·박춘섭·전지훈·홍은일(2016), 충남 사회적경제의 성과분석 및 중장기전략. 충남연구원.
- 조혜영외(2007),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 최경환(2001),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24권 2호,
- 최경환외(2014), 농산업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Amin, A. (2009). Locating the social economy. In A. Amin (Ed.), *The social econom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conomic solidarity*. London: Zed Books.
- Amin, A., Cameron, A., & Hudson, R. (2002). *Placing the social economy*. London: Routledge.
- 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2009). *Greater Manchester Strategy*. Manchester.
- Borzaga, C., & Defourny, J. (2001). Conclusions: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 diversity of initiatives and prospects. In C. Borzaga & J. Defourny (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Buckingham, Pinch and Sunley. (2010). The regional geography of social enterprise in the UK: a review of recent surveys. Third sector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 35.
- Buckingham, H., Pinch, S., & Sunley, P. (2012). The enigmatic regional geography of social enterprise in the UK: A conceptual framework and synthesis of the evidence. *Area*, 44(1), 83 - 91.
- Defourny, J. & Develtere, P., 1999, "The social economy : the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17-47.
- Defourny, J. & Nyssens, M.,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Nyssens ed.,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London: Routledge. pp. 3-25.
- Lukkarinen, M., 2005, "Community development,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4), 419-424.

부록 1. 도내 농공단지 활용가능성 조사

시군	단지명	면적 (㎡)	분양가 (천원/㎡)	입주기업 수	휴·폐업시설 또는 미분양 부직 면적(㎡)	비고
천안(A)	해	당	없	음		
공주(B)	월미2농공단지	56,174	215	16	13,364	미분양
	보물농공단지	113,005	163	3	6,454	미분양
보령(C)	청라농공단지	128,853	-	-	-	신 규 (승인전)
아산(D)	신인농공단지	64,067	15	1	26,535	휴업 (1개소)
서산(E)	해	당	없	음		
논산(F)	강경농공단지	130,640	61	1	46,508	미분양
	노성특화농공단지	160,091	미정	5	-	조성중
계룡(G)	계룡제1 농공단지	127,719	326	2	124,081	미분양
당진(H)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213,342	미정	25개 업체	-	2018년 신규신청
금산(I)	인삼약초특화농공 단지	114,686.7	194	5	50,439.9	가동:2,착수:1 미착수:2
부여(J)	은산	123,326	-	13	14,934	휴업(2개소)
	은산2	226,678	69	4	22,350	미분양
	홍산	131,774	-	6	3,140	휴업(1개소)
서천(K)	장항원수농공단지	300,628	25	18	62,534	휴업(1개소)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150,670	46	10	8,484	휴업(2개소)
	종천농공단지	251,227	30	32	9,146	휴업(1개소)
	종천2농공단지	197,478	90	3	52,160	미분양
	서면농공단지 (서천김가공특화단지)	78,541	73	3	19,128	미분양
청양(L)	정산2 농공단지	191,260	128	9	-	신 규 (승인전)
홍성(M)	광천김특화농공	56,772	112	9	-	-
	구항농공	166,983	19	15	7,355	휴업(2개소)
	은하농공	95,254	51	1	91,128	휴업(1개소)
	결성전문농공	141,065	39	21	3,089	휴업(1개소)
	갈산2전문농공	131,964	-	-	-	조성중
예산(N)	관작전문 농공단지	144,192	39	10	9,051	휴업(1개소)
태안(O)	해	당	없	음		

1) 공주 월미2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공주시 월미동 368-1번지 일원
- 면적(m^2) : 56천 m^2
- 분양가(천원/ m^2) : 215천원
- 조성기간 : 2011~2013년
- 시행방법 : 공주산업개발(주) / 공주시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16개
- 입주 업종 : 식료품, 전자부품제조업, 화학제품

③ 농공단지 특성

- 미분양 부지 현황 : 13,364 m^2

2) 공주 보물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21번지 일원
- 면적(m^2) : 113천 m^2
- 분양가(천원/ m^2) : 163천원
- 조성기간 : 2003~2008년
- 시행방법 : 록평(주) / 공주시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3개
- 입주 업종 : 비금속, 식료품, 화학제품, 기계, 통신

③ 농공단지 특성

- 미분양 부지 현황 : 6,454 m^2

3) 청라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내현리 일원
- 면적(m^2) : 128,853 m^2
- 분양가(천원/ m^2) : 미정
- 조성기간 : 2016년~2019년
- 시행방법 : 공영개발

② 입주기업 현황: 시기 미도래

- 유치 업종 : 식품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해당없음
 - 교통 접근성 : 사업대상지 서측으로 10km 이내로 장항선 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대전IC)가 위치하고 있어 물류수송과 광역적 접근이 용이, 사업대상지 서측은 지방도 609호선과 접해있으며, 남측의 보령시와 청양군을 연결하는 국도36호선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함.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버섯, 청라냉풍욕장, 청천저수지, 벼루 등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주수요조사를 통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조기분양이 기대되며, 현행대로 일반농공단지로 추진코자 함.

4) 아산 신인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인동 236-5일원
- 면적(m^2) : 64,067 m^2
- 분양가(천원/ m^2) : 15천원
- 조성기간 : 1990. ~ 1992.
- 시행방법 : 공영개발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1개소
- 입주 업종 : 화장품 제조업 외 6종
- 특화 분야 : 해당없음
- 대표 기업 특성 : 화장품제조(휴업중)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1개소
 - 시설 면적 : 제조시설 10,744.24 m^2 , 부대시설 15,791.18 m^2
 - 시설 소유주 / 활용가능 여부 : 대표자 김광중 / 부(재가동 예정)
-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해당없음
 - 주요 특성 : 해당없음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지방도623호 인접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지속적인 독려를 통한 공장 재가동

5) 논산 강경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 면적(m^2) : 130,640 m^2
- 분양가(천원/ m^2) : 61천원
- 조성기간 : 2012. 01 ~ 2015. 07.
- 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방식)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1
- 입주 업종 : 식품제조업
- 특화 분야 : 식품
- 대표 기업 특성 : 한미식품으로 유부, 곤약등 식품위주 생산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3개 필지 46,508 m^2
 - 주요 특성 : 한미식품 계약사 입주 예정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가 미루어지고 있음.
-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좋음(국도 연접, 강경역 등)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10월경 강경농공단지 주변에서 강경젓갈축제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강경농공단지는 식품위주 농공단지로 조성하여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한미식품도 회의적인 입장임

6) 논산 노성특화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 면적(m^2) : 160,091 m^2
- 분양가(천원/ m^2) : 미정
- 조성기간 : 2013. 01 ~ 2017. 12.
- 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방식)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5
- 입주 업종 : 식품제조업
- 특화 분야 : 식품
- 대표 기업 특성 : 고향식품으로 육개장등 탕류 위주 식품 사업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 미분양 부지 현황
 - 해당없음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해당없음
 - 교통 접근성 : 좋음(국도 연결)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해당없음

-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노성농공단지는 식품산업 특화 농공단지로 조성중에 있으며, 산업시설 용지 전체가 분양되어 6차산업형 농공단지의 가용부지가 부족

7) 계룡 제1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일원
- 면적(m^2) : 127,719 m^2
- 분양가(천원/ m^2) : 326천원/ m^2
- 조성기간 : 2012년 ~ 2016년
- 시행방법 : 공영개발(계룡시)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2개 기업
- 입주 업종 : 음료제조업
- 대표 기업 특성 : 육가공 및 순대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무
-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124,081 m^2
 - 주요 특성 : 친환경 도시로 특정수질 및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입주제한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국도 1,4호선 2km(국도대체우회도로(2024년) 단지통과), 호남고속도로 계룡IC 0.5km, 계룡역 2km,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2021년)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계룡군문화축제(10월), 사계고택, 향적산 국사봉 등
- 농공단지 협의회
 - 협의회 유무: 무

8) 당진 옥호지구 식품특화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옥호리 산123-1번지 일원
- 면적(m^2) : 213,342 m^2
- 분양가(천원/ m^2) : 미정
- 조성기간 : 2017년~ 2019년
- 시행방법 : 민간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현재 25개업체(추후 변동가능)
- 입주 업종 : 지역특화 식품관련
- 특화 분야 : 식품

③ 농공단지 특성

- 농공단지 협의회
 - 협의회 유무: 유(당진식품특화사업협동조합)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사업대상지내 지원시설용지(21.607 m^2)를 활용하여 조합주체의 6차산업 경영체 자립화 방안 구축 도모.
- 농식품 생산자 주도의 직거래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6차산업 제품 판로를 구축 및 6차산업 고도화 추진.
- 단지내 6차산업 우수상품 발굴 품평회, 상품기획 지원, 판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판로 지원체계 구축.
- 민간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의 옥호지구 식품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향토자원 활용기회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

9)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 면적(m^2) : 114,686.7 m^2 (공장시설용지 : 68,629.8 m^2)
- 분양가(천원/ m^2) : 194,310원
- 조성기간 : 2009. 9월 ~ 2014. 3월
- 시행방법 : 공영개발(금산군수)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5개소
- 입주 업종
 -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업(4필지 15,392.9 m^2), 1차 금속제조업 등(1필지 2,797 m^2)
- 특화 분야 :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
- 대표 기업 특성 : 인삼을 활용한 홍삼제품 제조

③ 농공단지 특성

-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50,439.9 m^2 (15필지)
 - 주요 특성(미분양 필지)
 -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업(11필지 42,043.4 m^2)
 - 1차 금속제조업 등(3필지 8,396.5 m^2)
-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금산IC에서 2분, 남대전IC에서 15분거리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인삼축제 및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인삼약초를 활용한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은 인삼약초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10) 장항원수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450번지 일원
- 면적 : 300천㎡(산업시설 239천㎡, 공공시설 53천㎡, 지원시설 8천㎡)
- 분양가 : 25천원/㎡
- 조성기간 : 1989. 8. 26. ~ 1990. 8. 29.
-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18개소
- 입주 업종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금속 문·창·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1개소
- 시설 면적 : 부지 62,534㎡, 건물 34,510㎡
- 시설 소유주 : 동일방직(주)장항공장 공동대표(서민석, 김인환)

○ 주요시설물 현황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사무동		462㎡	기숙사 ²⁵⁾	1,481㎡
공장동	1공장	12,240㎡	식당	433㎡
	2공장	7,400㎡	휴게실 및 샤워실	192㎡
	3공장 ²⁶⁾	9,100㎡	관리(경비)실	48㎡

○ 미분양 부지 현황(해당없음)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15분거리, 장항선 장항역에서 5분거리로 양호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금강대교 개통 예정으로 군산과 접근성 향상

○ 농공단지 협의회

- 장항원수농공단지협의회장 : 함재현(성산에프앤비 대표, 041-956-3830)

④ 기타 고려사항

- 동일방직(주)장항공장 부지면적이 62,534㎡로 대체입주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인 JLL에서 매각을 추진

25) 지상2층, 지하 1층. 총 19실로 1실 당 20여평 - 방2개, 거실 4인1실로 운영

26) 2010년 증설

11) 장항원수 제2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93-1번지 일원
- 면적(m^2) : 151천 m^2 (산업시설 104천 m^2 , 공공시설 21천 m^2 , 지원시설 26천 m^2)
- 분양가(천원/ m^2) : 46천원/ m^2
- 조성기간 : 2002. 12. 10. ~ 2004. 6. 25.
-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10개소
- 입주 업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빵류 제조업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날붙이 제조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업체명	부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주)성현기업사2공장	5,478㎡	2,002㎡	
(주)형제산업	3,006㎡	1,074㎡	경매진행중

○ 미분양 부지 현황(해당없음)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15분거리, 장항선 장항역에서 5분거리로 양호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금강대교 개통 예정으로 군산과 접근성 향상

○ 농공단지 협의회

- 장항원수농공단지협의회 구축

④ 기타 고려사항

○ (주)형제산업은 2017년 2월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음

12) 종천 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415번지 일원
- 면적(m²) : 251천m²(산업시설 208천m², 공공시설 35천m², 지원시설 2천m², 녹지구역 6천m²)
- 분양가(천원/m²) : 30천원/m²
- 조성기간 : 1990. 12. 3. ~ 1992. 2. 27.
-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32개소

○ 입주 업종

- | | |
|----------------------|----------------------------|
|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연마재 제조업 | - 합성고무 제조업 |
|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 빵류 제조업 |
|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 -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 -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 - 전자응용 동작기계 제조업 |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업체명	부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한국기전공업(주)	9,146㎡	3,730㎡	

○ 미분양 부지 현황(해당없음)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5분, 장항선 서천역에서 10분거리

○ 농공단지 협의회

- 종천농공단지협의회

④ 기타 고려사항

○ 기업 문의시 대체입주 안내 요청

13) 종천 2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산40번지 일원
- 면적(㎡) : 197천㎡(산업시설 119천㎡, 공공시설 76천㎡, 지원시설 2천㎡)
- 분양가(천원/㎡) : 89,930원/㎡
- 조성기간 : 2010. 01. ~ 2015. 2.
-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공장등록 3개소, 분양계약 2개소
- 입주(예정) 업종
 - 식품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 화학 제조업
 -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분양가능 업종
 - 전기장비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구분	표준산업 분 류	유치업종	분양대상 면 적	분양면적	분양율 (%)	미분양	분양가 (원/㎡)
합 계			119,124	66,964	56.2	52,160	
1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3,079	3,640	100	0	89,930
2	29	기타 화학 제조업		13,797			
3	10	식품제조업		15,642			
4	30	금속가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2,160	0	0	52,160	89,930
5		유치업종 분류생략	33,885	33,885	100	0	89,930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계	197,478	100	
산업시설용지	119,124	60.3	
지원시설용지	2,395	1.2	
공공시설용지	75,960	38.5	
도로	23,211	11.7	
주차장	1,880	1	
공원	7,158	3.6	
녹지	28,700	14.5	
공공공지	4,860	2.5	
배수지	1,301	0.7	
저류지	4,356	2.2	
폐수처리장	4,494	2.3	

■ 업종 및 분양면적

※ 유치가능 업종은 세주업에 한함

용도	분양현황	전체면적(㎡)
공장 용지	A1-1	분양완료 3,640
	A1-2	분양완료 5,729
	A1-3	분양완료 8,068
	A1-4	분양완료 15,642
	계	33,079
	A2-1	분양완료 23,217
	A2-2	분양완료 10,668
	계	33,885
	A2-3	13,887
	A3-1	20,945
유치업종 분류 생략	A3-2	17,328
	계	52,159
	소계	119,124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5분, 장항선 서천역에서 10분거리

○ 농공단지 협의회

- 중천농공단지협의회의장

④ 기타 고려사항

- A2-3 지역 MOU체결된 상태임

14) 서면농공단지(서천김가공특화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서천군 서면 월리 산28-1 일원
- 면적(㎡) : 78천㎡(산업시설 45천㎡, 공공시설 23천㎡, 지원시설 9천㎡)
- 분양가(천원/㎡) : 73,120원/㎡
- 조성기간 : 2006년 ~ 2015. 12. 31.
- 시행방법 : 서천군 사업시행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공장등록 3개소, 분양계약 5개소
- 입주 업종 : 식료품제조업
- 특화 분야 : 김가공특화단지

③ 농공단지 특성

- 미분양 부지 현황

구분	표준산업분류	유치업종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분양율(%)	미분양	분양가(원/㎡)
합 계			45,513.5	26,385.0	57.9	19,128.5	
1	C10	식료품 제조업	45,513.5	26,385.0	57.9	19,128.5	73,120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부
- 교통 접근성
 - 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IC에서 차량 이동시간 15분 소요
 - 철도 : 장항선 서천역에서 30분, 웅천역에서 15분 소요

○ 농공단지 협의회 : 미구성(농공단지 공장등록업체 부족)

- 주요 특성 :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20) 전용 단지



15)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중)

① 기본현황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산64-1
- 면적(m^2) : 191,260 m^2
- 분양가(천원/ m^2) : 128천원/ m^2
- 조성기간 : 2014~2018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주) 학암산업개발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9개
- 입주 업종 : 식료품제조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 특화 분야 : 식료품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국도39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남측 1km지점에 청양IC가 위치하여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와 연결됨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칠갑산도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 농공단지 입지여건으로 탁월한 지역임
- 농공단지 협의회
 - 협의회 유무: 무

16) 홍성 광천김특화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249-8번지 일원
- 면적(m^2) : 56,772
- 분양가(천원/ m^2) : 112
- 조성기간 : 2008. 10. ~ 2014. 12.
- 시행방법 : 민간개발/(주)청연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9
- 입주 업종 :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특화 분야 : 음식료 제조업(김 2차 가공업)
- 대표 기업 특성 : 재래김 등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 미분양 부지 현황
 - 해당없음
-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5.5km), 국도 21호선 연결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홍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광천 재래김의 전문 가공업체들을 집적화한 특화 농공단지로 지역특산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휴·폐업 시설 및 미분양 부지가 없어 활용가능성이 낮음.

17) 홍성 구항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일원
- 면적(m^2) : 166,983
- 분양가(천원/ m^2) : 19
- 조성기간 : 1차 1989. 4. ~ 1990. 8., 2차 2013. ~ 2016. 12. 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홍성군)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15
- 입주 업종 : 비금속, 석유화학, 섬유·의복 등
- 특화 분야 :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 대표 기업 특성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2업체
 - 시설 면적 : 7,355 m^2
 - 시설 소유주/활용가능 여부 : 부
- 농공단지 환경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12km), 국도 21호선(0.18km)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홍성 시내권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산업단지 운영관리가 체계적임.
- 현재 미분양 부지가 없어 활용가능성이 낮음.

18) 홍성 은하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일원
- 면적(m^2) : 109,163
- 분양가(천원/ m^2) : 51
- 조성기간 : 1999. 8. ~ 2001. 6.
- 시행방법 : 공영개발(홍성군)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1(휴업중)
- 입주 업종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특화 분야 : 전기전자, 조립금속
- 대표 기업 특성 :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제조업체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1업체
 - 시설 면적 : 91,128 m^2 ,
 - 시설 소유주/활용가능 여부 : 부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2km), 국지도 96호선(0.18km)

④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은하농공단지의 유일한 입주기업이 현재 휴업 중이나 공장부지 전체에 설비가 구축되어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활용가능성이 낮음.

19) 홍성 결성전문농공단지

① 기본현황

- 위치 :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일원
- 면적(m^2) : 141,065
- 분양가(천원/ m^2) : 39
- 조성기간 : 2003. 9. ~ 2007. 12.
- 시행방법 : 민간개발/(주)우림산업

② 입주기업 현황

- 기업 수 : 21
- 입주 업종 :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기계, 운송장비)
- 특화 분야 : 자동차부품 및 농기계, 전동기 등 제조업
- 대표 기업 특성 : 자동차 부품업 제조업

③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휴·폐업시설 수 : 1업체
 - 시설 면적 : 3,089 m^2
 - 시설 소유주/활용가능 여부 : 부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3km), 국지도 96호선(3.1km)

□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 관련 전문농공단지로 6차산업형 농공단지로 활용가능성이 낮음.

20) 홍성 갈산2전문농공단지(조성중)

☐ 기본현황

- 위치 :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 면적(m^2) : 136,207
- 분양가(천원/ m^2) : 미정
- 조성기간 : 2010. 8. ~ 조성중
- 시행방법 : 민간개발/(주)지웨이

☐ 입주기업 현황

- 해당없음

☐ 농공단지 특성

- 휴·폐업 시설 현황
 - 해당없음
- 미분양 부지 현황
 - 면적 : 59,391 m^2
 - 주요 특성 : 현재 조성중
- 농공단지 환경
 - 유해시설 여부 : 무
 - 교통 접근성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3km), 국도 29호선 연결
 - 주변 활용가능 자원 : 갈산면 일대 기 조성된 2개 산업단지와 인접

☐ 기타 고려사항(시·군 의견)

- 현재 조성중인 산단으로 미분양 부지가 존재하나 자동차 관련 부품, 전기·전자 관련 전문농공단지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육성이 어려움.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 입주수요 조사

담당자: 연락처 : E-Mail :

충남도청 박태선 주무관 041-635-2234 mlt00@korea.kr

A1. 기업명		A2. 산업분류(업종)	
A3. 기업 주소		A4. 설립년도	() 년
A5.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A6. 응답자 직급	① 대표 ② 이사 ③ 실무자
A7. 매출액 규모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③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④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⑥ 30억원 이상		
A8. 조직유형	① 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 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⑤ 6차산업화기업		

- **기본 구상** : 지역농산물과 가공, 체험 및 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공단지이며, 운영의 원리는 사회적경제를 추구
- **주요 특성**
 - ① 농공단지는 입주기업 간 상호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② 농공단지 내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여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극장, 공방, 숙박시설, 레스토랑, 교육, 돌봄 등 복합 단지로 조성됩니다.
 - ③ 입주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유통,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④ 그동안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농공단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긴밀하게 밀착된 단지로 조성됩니다.

- 위 치 : 구례군 용방면/ 아이쿱 생협 자회사 및 협력사 입주
- 면적/사업비 : 87,926㎡/720억원(민자), 고용 480여명
- 입주기업 : 15개 기업, 18개 공장 및 지원센터

187

B**농업, 제조업체 대상 수요조사 [해당 기업만 작성]**

1. 귀 업체는 가까운 장래에 현 공장의 이전이나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1-1. 만약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

- ① 현재의 공장부지 면적이 협소
- ②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기업 이전
- ③ 물류, 자재 확보 등으로 위치 이전 필요
- ④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필요
- 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기업끼리의 집적 필요
- ⑥ 기타 []

2. 귀 업체에서 이전이나 확장을 고려할 경우 최대한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역
적 범위는?

- ① 해당 읍면동 이내
- ② 해당 시군 이내
- ③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
- ④ 충청남도 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음

3. 귀 업체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은?

- ①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 및 건물 조성 가능
- ② 기존 휴폐업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입주 가능
- ③ 일정 부지 및 건물을 여러 기업이 함께 투자하여 조성하는 방식
- ④ 기존 휴폐업 시설을 여러 기업이 함께 임대하는 방식
- ⑤ 기타 []

4.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1. 만약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2개)

- 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
- ②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
- ③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공동물류 등)
- ④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격
- 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 ⑥ 기타 []

① 저렴한 분양가(주변 시세의 10% 정도)

- ⑤ 기타 []

7. 실제 분양에서 건물을 건설하기 까지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이하]

1. 귀 업체는 가까운 장래에 현 사무공간 또는 판매장의 이전이나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또는 새로운 공간을 찾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1-1. 만약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

- ⑤ 기타 []

2. 귀 업체에서 이전이나 확장을 고려할 경우 최대한으로 이전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는? (우선 순위 2개)

- ③ 해당 지역에 인접한 시군 경계 내 ④ 충청남도 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음

3. 귀 업체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전 및 확장 방식은?

- ⑤ 기타 []

4.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형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기업들과의 호혜와 연대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
- ② 농공단지를 제조, 카페, 식당, 극장,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단지로 조성
- ③ 입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공동생산 등)
- ④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임대)가격
- ⑤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처
- ⑥ 기타 []

- ① 저렴한 분양가(주변 시세의 10% 정도)
- ②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준의 수요처
- ③ 저리로 투자비용 대출
- ④ 농공단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들이 기획 참여
- ⑤ 기타 []

9. 실제 분양에서 건물을 건설하기 까지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이하]

190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춘섭 충남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

이홍택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원

공동연구 ·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홍은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2017-29 ·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글쓴이 · 박춘섭, 이홍택, 전지훈, 홍은일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 12월 31일 /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17(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425-1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